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18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운영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민 주 시 민 교 육 연 구 보 고 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운영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

책임연구원 우 기 동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공동연구원 이 병 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조 철 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본 연구보고서는 민주화운동기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 2018년 연구개발 과제로 제출되었으며,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위의 연구진의 견해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운영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

□ **시대적 요청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 세계화, 다양한 갈등의 심화 등 복잡다단한 사회적·역사적 격변의 시기이며, 이에 따른 동요와 위기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을 요청함.

○ 민주시민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으로,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은 이를 위한 인적·조직적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여 역사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음.

○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정치적 관점 하에 일시적으로 강조되는 이슈가 결코 아니며, 세계사적 전환에 조응하려는 현실적이고도 긴박한 과제임.

○ 현재의 세계사적 상황은 기존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시스템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변수와 위기의 돌발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20세기의 지식·기능·개인 중심의 교육 프레임이 한계를 드러냄. 민주시민교육은 이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서 공동체적 가치와 시민들의 역동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 및 사회운영의 새로운 자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은 자신의 삶의 양식은 물론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하고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역동적·창의적인 민주시민의 탄생을 목표로 함. 이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포함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참여하는 역량을 필요로 하기에, 민주시민교육은 이러한 역량의 함양을 지향함.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흐름**

○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자율적·역동적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여기에 함유된 상호연대와 협력, 이것을 가능케 하는 체계와 조직, 그리고 시민적 성숙을 지향해야 함.

○ 요컨대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배우고 훈련함으로써 시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호혜적인 삶의 양식을 형성하기 위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제도적·사회적 기회와 노력의 과정을 의미함.

○ 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정치적 관점에 기반한 요청이 아니며, 헌법에 명시된 민주와 공화의 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시민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청임.

○ 하지만 몇몇 선도적인 국가들과 달리 우리의 경우 아직 시민들이 삶과 정치의 통합적 원리로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함.

○ 제도화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간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논의와 실천의 성과를 수렴하는 한편,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할 전담기구 설치도 긴요한 과제로 상정됨.

□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구와 거버넌스

○ 일찍이 민주시민교육을 발전시켜 온 선진국에서는 역사적·사회적 경험에 기반 해 고유한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구와 거버넌스를 발달시켜 왔음.

○ 한국의 경우 아직 전국적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의 지원기구의 사례가 부재한 가운데, 통일교육, 양성평등교육, 평생교육 등과 관련한 분산적 사례들이 있음.

○ 하지만 이처럼 분산적 사례들마저 대부분 관주도적인 교육서비스 전달에 중점을 두고,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참여나 협력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임.

○ 따라서 취약한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강화하고 기존의 성과를 수렴하며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유기적 결합하여, 교육, 정치 등 여러 사회 부문과 교호할 수 있는 창조적 토대로 활용되도록 하려면 기본적인 지원기구, 즉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이 최우선적인 과제임.

○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관련 지원기구 비교

기구명	설립연도	국가	성격	직원	예산규모
연방정치교육원	1952	독일	정부기구	270명	5천2십만EUR (약6백40억원)
대중교육위원회	1991	스웨덴	민간단체	27명	41억5천9백만SEK (약5천1백5십2억원)
시민성재단	1989	영국	민간단체	25명	1백7만2천492GBP (약15억4천4백만원)
시민교육센터	1981	미국	민간단체	15명	3백만8천3백93USD (약32억4천6백만원)
선거연수원	1996	한국	정부기구	52명	189억3천2백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정착' 항목 예산)
통일교육원	1996		공공법인	73명	258억7천4백2십만원 (통일부 '통일교육추진' 및 '통일교육원시설운영' 항목 예산)
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2		공공법인	69명	81억5천3백5십만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08		공공법인	172명	689억3천6백만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5		공공법인	120명	1,182억5천8백만원

□ **민주시민교육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2년 창립기부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사업의 성과 및 경험을 축적해 왔음.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운영을 위해 가장 걸 맞는 자원을 지닌 조직이라 할 수 있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발전의 궤적이 명백할 정도로 탄탄한 성과와 경험을 갖고 있음.

① 사업의 원형이 정립된 모색기(2002년~2006년)

② 사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도약기(2007년~2013년)

③ 부침을 겪은 조정기(2014년~2016년)

④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 촉진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 받은 전환기(2017년~현재)

○ 구체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담론과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는 '연구개발', 민주시민교육 주체 역량강화와 시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활성화' 등 세 가지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운영 방안**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제도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가치체계와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가치체계와 사업

사명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비전	역량강화와 연결을 5통해 전국의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의 정착을 추동하는 든든한 플랫폼			
핵심가치	① 민주주의 ② 자율 ③ 연대 ④ 공공성 ⑤ 현장성			
핵심목표	교육 운영	네트워크	연구개발	조직운영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연결과 생태계 조성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담론과 콘텐츠 개발·제공	유능하고 신뢰받는 조직의 설립·운영
사업	1 전문가양성과정 2 주민자치아카데미 3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 4 민주시민교육 협력 운영	1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2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사회적 합의) 3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4 해외연수 및 교류	1 민주시민교육센터 연구 2 민주시민교육 의제연구 3 민주시민교육실태 및 현황연구 4 민주시민교육 콘텐츠·프로그램개발	1 기관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2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3 안정적 기관운영의 토대 마련
핵심사업	전문가양성과정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민주시민교육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센터 추진을 위한 제언**

○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삶은 물론 국가와 사회, 세계사와 문명사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전망을 개방하는 자원이 될 수 있기에, 이에 걸맞는 지원과 체계화가 필요함.

○ 민주시민교육은 그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식도 민주적이어야 함. 따라서 체계화와 실행의 전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것으로 자리 잡아야 함.

○ 향후 설립될 민주시민교육센터는 교육을 주도하고 제공하기 보다는 다양한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목 차

요약문 04

제Ⅰ장
서언
시대적 요청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15 1. 민주시민교육과 시대적 요청
18 2.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제Ⅱ장
연구개요와 내용

23 1. 연구개요
24 2. 연구내용

제Ⅲ장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흐름

29 1. 민주시민교육의 현재성과 과제
35 2. 민주시민교육과 21세기

제Ⅳ장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구와 거버넌스

49 1. 논의의 흐름
53 2. 국외 사례
64 3. 국내 사례
82 4. 요약과 시사점

제Ⅴ장 민주시민교육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89 1. 민주시민교육의 위상
93 2. 모색기(2002~2006)
99 3. 도약기(2007~2013)
109 4. 조정기(2014~2016)와 전환기(2017~)

제Ⅵ장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운영 방안

115 1. 프레임 워크
116 2. 조직정의 (1): 거시 환경 분석
126 3. 조직정의 (2): 가치체계
133 4. 사업정의
137 5. 사업내용

제Ⅶ장

결언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센터 추진을 위한 제언

145 1.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 필요성
146 2.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체계
151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역할
154 4.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155

표목차

52 〈표 Ⅳ-1〉 민주시민교육 체계구축과 가동방안
53 〈표 Ⅳ-2〉 각 국가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명칭
56 〈표 Ⅳ-3〉 연방정치교육원과 협력하는 연방정부 부처 및 부서들
57 〈표 Ⅳ-4〉 연방정치교육위원회의 유형별 회원조직
58 〈표 Ⅳ-5〉 스웨덴 전국단위 대중교육 학습단체
61 〈표 Ⅳ-6〉 영국 시민성재단의 활동 내용
63 〈표 Ⅳ-7〉 미국 시민교육센터의 활동 내용
66 〈표 Ⅳ-8〉 통일교육원의 활동 내용
67 〈표 Ⅳ-9〉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활동내용
68 〈표 Ⅳ-10〉 선거연수원의 활동내용
71 〈표 Ⅳ-11〉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활동내용
73 〈표 Ⅳ-12〉 2018년 양성평등교육진흥 공모사업 주제
79 〈표 Ⅳ-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80 〈표 Ⅳ-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사업
83 〈표 Ⅳ-15〉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기구의 기본현황
90 〈표 Ⅴ-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가치체계
91 〈표 Ⅴ-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기본방향(2007)
94 〈표 Ⅴ-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모색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내용(2002~2006)
100 〈표 Ⅴ-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도약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내용(2007~2013)
101 〈표 Ⅴ-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사업 5개년 계획의 개요(2007)
102 〈표 Ⅴ-6〉 '민주주의의 기초' 한국판 교재 시리즈 목록
103 〈표 Ⅴ-7〉 외국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요자료 번역결과
106 〈표 Ⅴ-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111 〈표 Ⅴ-9〉 지역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관련 간담회 현황
117 〈표 Ⅵ-1〉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 발의 현황
118 〈표 Ⅵ-2〉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25 〈표 Ⅵ-3〉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거시 환경 분석 요점

표목차

133 〈표 Ⅵ-4〉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가치체계
134 〈표 Ⅵ-5〉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사업 환경 분석
135 〈표 Ⅵ-6〉 민주시민교육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137 〈표 Ⅵ-7〉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가치체계와 사업
139 〈표 Ⅵ-8〉 교육운영 영역의 사업내용
140 〈표 Ⅵ-9〉 연구개발 영역의 사업내용
141 〈표 Ⅵ-10〉 연구개발 영역의 사업내용
141 〈표 Ⅵ-11〉 조직운영 영역의 사업내용
142 〈표 Ⅵ-12〉 민주시민교육센터 사업 5개년 추진계획

그림목차

51 〈그림 Ⅳ-1〉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발전을 위한 10가지 실천과제
51 〈그림 Ⅳ-2〉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착근을 위한 단계
52 〈그림 Ⅳ-3〉 사회통일교육 실행 거버넌스 체계
55 〈그림 Ⅳ-4〉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조직체계
58 〈그림 Ⅳ-5〉 스웨덴 대중교육위원회 조직체계
60 〈그림 Ⅳ-6〉 영국 시민성재단 조직체계
65 〈그림 Ⅳ-6〉 통일교육원의 조직체계
68 〈그림 Ⅳ-7〉 선거연수원의 조직체계
71 〈그림 Ⅳ-8〉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조직체계
74 〈그림 Ⅳ-9〉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체계
78 〈그림 Ⅳ-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조직체계
89 〈그림 Ⅴ-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조직구조
116 〈그림 Ⅵ-1〉 소셜 임팩트 프레임 워크의 개념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제Ⅰ장

서언
시대적 요청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제Ⅰ장 시대적 요청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1 ▌ 민주시민교육과 시대적 요청

1) 시대적 상황: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방향

소위 '4차산업'이라고 말하는 'Industrie 4.0'이란 무엇인가? 독일 교육과학부는 "정부와 산업체의 협력모델로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통신정보 신기술을 통해 사람, 설비, 물류를 연결하여 경제와 사회의 플렛폼을 인간의 편익 중심으로 전환하는 산업혁신"이라고 정의한다.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체로 대립적 관점의 문제의식이 팽배해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체함으로써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만연해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일자리, 틈새 등을 통해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경쟁적 자조적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은 인간의 편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가 조화롭게 활용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여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시대의 중요한 과제는 인간적 가치를 지키고 세우면서 산업변화에 맞는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가이다. 이에 따라 교육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된다. 바로 교육의 방향은 삶과 생활의 교양교육적 토대인 인간의 가치와 공동체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2) 역사적 상황

가. 산업화와 정치사회적 변화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의 근현대사는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의 근대적 가치관이 혼재하면서 진행된 압축적 근대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용된 민주주의는 최고의 가치체

계로 자리잡았고, 누구나 의심없이 이상적인 이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대 정치사에 그 실체를 드러낸 민주주의는 달콤한 겉을 입힌 쓰디쓴 당의정과 같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취한 민주주의는 아직은 형식에 그칠 뿐, 실질적 내용이 충실하게 다져진 것은 아니다. 중요한 사회적 결정과정에서 국민과 시민 대중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원만한 조정보다는 극단적인 충돌, 공존보다는 배타적 대립이 앞서고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에 따르는 결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의 수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자기자신이 놓여진 현장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참여와 자치의 실천 과정이기도 하다. 주인정신을 가지고 정치, 경제, 행정 등 여러 삶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든 현장에서 주체다운 삶을 실질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정치 선진국에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불러 일으키듯이 절차상 민주주의는 분명히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 개인의 자아 실현, 자유, 평등 등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는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작동 원리여야 하며, 구성원이 주체로 참여하면서 운용되는 '참여적 자치'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

두 번째로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산업화의 과정, 특히 1970년대 경제개발은 권력과 자본, 이들의 고급 정보에 밀착된 상층 기득권층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한탕주의 의식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의식이 서서히 중류층에까지 파급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는 건전한 노동의식마저 상실하였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확대 심화시켰다.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는 플랭카드나 포스터로 거리를 치장하여 한탕주의의 투기의식을 숨기고 정당화하는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기는 서서히 전국토를 투기시장으로 바꾸고, 전국민을 투기꾼 내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만들었다. 우리 사회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의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고, 우리의 사회적 의식은 극도로 왜곡되었다. 이러한 투기의식의 만연의 결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전국민을 정신적 패닉 상태로 몰아 넣기도 하였다. 홍역을 치렀음에도 낫지 않고 어떠한 처방도 듣지 않는 만성적 집단 양심 불량증이 되었다.

물론 왜곡된 근대화 과정이라 할지라도, 경제성장과 발전은 오늘날과 같은 정도의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고 경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자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해 있는 투기의식, 빈부 격차, 건전한 노동의식의 상실 등의 역사적 원인과 과정은 분명하다. 문제는 재산과 소유, 노동의 의미 등에 대한 건강한 의식과 합리적 제도를 확립하고 정착시키는 일이다.

세 번째로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자.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의 특성이었던 엄격한 가부장제적 가족 질서에서부터 가족제도를 넘어서서 형성되는 개인적 유목성까지 그야말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교차하는 중층적 구조의 사회이다. 가족제도의 근간인 결혼관의 변화(계약결혼, 황혼이혼 등)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맞춰 산아제한, 가족계획을 필요로 했던 시대에서 '다산이 다복'이라고 홍보해야 하는 저출산의 시대에 대한 단기간의 경험은 관습, 윤리 도덕, 법에 관한 의식을 필연적으로 변화시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의식의 변화 근저에는 사회의 경제적 조건과 현실이라는 토대의 특성과 변화가 깔려 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는 농업 사회의 특성에서부터 산업 사회의 특성을 포함하는 최첨단 사회의 특성이 혼재하면서도 응축되어 있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라는 비동시적 역사적 시간이 동시에 공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물질의 가치는 풍요로움이나 부와 같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만 재단될 수 없다. 물질은 문화적 삶의 바탕이 될 때 훨씬 아름다운 빛을 발휘한다. 문화는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치의 차원,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의 차원과는 달리 삶의 가치와 의미의 차원을 다룬다. 그래서 문화적 삶의 가치와 의미에 근거를 둔 물질적 경제 활동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공동체의 사회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물질과 문화의 가치를 경제적 생산성의 잣대로만 잴 수 없으며 사회적 생산성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역사의식 없는 정치적 집권과 도덕성 없는 경제적 부의 축적은 오히려 사회적 생산성을 저해한다. 요컨대 물질과 문화의 사회적 생산성은 경제적 생산성을 포함하여 도덕성과 비판적 이성, 역사적 책임의식, 공동체 의식 등 한 사회의 삶의 가치 및 질과 관련되어 있다.

나. 사회적 의식

사회적 의식은 대체로 특정 사회 혹은 구성원의 정체성과 보편적 가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체성 변화는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데 유동하는 중심의 가치로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고 회복해 내는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틀림없이 산업화 이후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사회 의식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를 경멸하고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앞다투어 물질적 가치와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산다. 이러한 이중적 의식과 태도를 근원적으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삶의 궤적을 역사적으로 보면, 감정적인 측면과 이성적인 내용을 아우르면서 인간의 미를 한껏 품은 정(情)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있다. 두레, 향약, 계, 품앗이 등이 이러한 정을 기초로 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었고, 오늘날에도 복지 제도의 보완 수단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안적 공동체 사회 운동 영역에서는 중요한 모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당위성(바람직한 것)과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현실성(현실적인 것)의 이율배반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 온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중심 가치로서 그 실체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당위와 현실 사이의 이율배반을 극복하는 문제의 핵심은 사회의 운용 체계와 작동 원리를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사회의 시스템화는 특권을 배제하고 부패를 차단하여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로 가는 최선의 길이다. 그러면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도 합리적으로 바뀌고, 사회적 의식도 더욱 건전해질 것이다. 이것은 인간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다. 시민사회의 윤리의식

사실 우리의 경우, 시민사회의 성장과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이에 반해 우리 사회에서는 그 동안 시민사회의 윤리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규범 및 질서 체계에 관해서 공통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가치관의 혼란이 운위되고 있다는 것은 근대화 1세기를 거치면서 생활양식과 제도는 외면적으로 변모했지만 그에 적합한 가치규범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우리의 사회적 의식은 극단적인 물질 중심의 이기주의로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강하게 지켜 왔던 인문 정신의 와해를 반증하고 있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윤리 의식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시민사회의 윤리에 관한 공론화 과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복원하고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 인권, 생명윤리 및 생태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보편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는 그 동안 권력 중심의 일방적인 하향식의 과정에 익숙해 있었을 뿐,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과 민주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정상적인 사회 운영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윤리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적이 없다.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참여에 기반하여 민주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의 시스템화는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허위의식이 지배하는 물질 중심의 사회 통념적 가치를 제거하면서 시민사회의 윤리를 확립할 것이며, 욕망구조를 건강하게 개편할 것이고, 삶의 방식을 건전하게 만들 것이다.

2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1) 이론적 측면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적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적 존엄성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참여의 권리와 책임' '생산의 권리와 책임'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은 이러한 권리와 책임에 관한 교육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민적 존엄성, 권리와 책임에 관한 민주시민교육은 인간사회와 역사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상이한 가치관과 경쟁적 주장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분별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체득함과 동시에 지구사회적 삶의 자세를 갖춘 세계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키는 운영자이고 파수꾼이다. 그래서 성숙한 시

민은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어떤 제도, 어떤 기구,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인가?', '어떤 실천적 활동(운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한다. 그래서 시민은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책임'도 떠맡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과 내용을 요청한다.

첫째, 공공선을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은 '인간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아리스토텔레스 표현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삶을 터득하게 한다. 존재세계(자연,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교양을 갖춘 시민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이며 사회적으로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역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는 공동체적 삶을 사는 민주시민의 덕목이다.

둘째,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은 한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다문화 시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구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세계시민'임을 체득하게 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슈바이처의 삶을 보고, 또 수단 남부 톤즈 지역에서 한평생 봉사하며 살았던 이태석 신부의 삶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라고 그들의 삶의 빛과 향기에 탄복한다. 인간의 따뜻함에 감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미 지구촌 공동체를 생각하는 '세계시민'임이 근저에 깔려 있다.

한편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문명은 문명 간의 대화와 공존, 타자와의 공감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빈곤, 전쟁, 기후변화, 생태환경의 심각한 형평성의 상실 등의 문제는 이미 특정 국가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공존의 윤리는 지구촌 공동체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실천적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시민'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면서 지구적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시민은 근대적 시민과 구별되는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지구적 거버넌스의 요청을 수행할 시민의 덕목(공감, 나눔, 참여, 연대)을 갖춘 존재이다. 지구적 차원의 공정과 정의,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에서부터 세계공화국의 의제까지 등장한다.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셋째, 성찰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

성찰적 의식과 성찰적 삶의 자세는 시민(교양인)의 기초 교육과정이고 필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인문학적 교양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교양이란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이고, 그래서 교양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훌륭한 삶'이라 말할 수 있다. 희랍철학(소크라테스, 플라톤)에서도 교양인은 인간의 '훌륭함(aretē, 아레테)'을 실현하는 삶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교양은 우리 인간의 '일생동안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성찰적 시민은 자신의 지적 윤리적 상승을 부단히 시도하고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며,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용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나아가 인류사회와 연대하고 정의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고 문명을 성찰하면서 지구문명의 난제들을 풀어가고자 한다. 따라서 성찰적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의 토대로서 훌륭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의 길을 제시할 것이다.

2) 현실적 측면

우리사회에서 시민교육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이 조금씩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이 규모나 내용면에서 수평적 수직적으로 심화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서, 민주시민교육은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일부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의 역사적 상황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주시민교육은 성찰적 시민의식, 공동체적 삶의 자세,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세계시민의식 등 시대적 상황이 요청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갖추고자 하는 이러한 시민적 덕목은 역사적 정치적 한계를 벗어나는 시민의 보편적 의식이다. 이런 시민의 보편적 의식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다음의 두 가지 현실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 영향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보편적 의식,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의식이 성장하게 되고, 보편적 시민의식의 성장은 역사적으로 왜곡된 우리의 정치문화를 훨씬 합리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이는 합리적인 정치문화가 뿌리내린 외국의 사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량의 함양이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는 1980년대 이후 진전되고 있는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적 민주화로의 이행하는 과도기적 시대상황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민주화는 시민으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견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즉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향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민주화는 일정 정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 또한 역설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시민사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선순환적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Ⅱ장

연구개요와 내용

제Ⅱ장 연구개요와 내용

1 ▌ 연구개요

우리 사회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제도화에 관한 사회적 과제는 1990년대 후반에 처음 제기된 후 많은 노력들이 이어져 왔지만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못한 체 20여년의 세월이 경과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고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부응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실현할 100대 국정과제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포함시켰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제의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의 협의과정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민주시민교육 제도의 도입과 국가기구의 설립의 마중물 역할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올바른 담론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2018년에는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지원활동을 본격화 하는 한편, 향후 좀 더 안정적으로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의 비전을 설정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성공적인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에 필요한 제반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설립방안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운영 연구'를 추진했다.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주하고, 책임연구원 우기동(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과 이병태(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조철민(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등 3인의 연구진이 수행했다. 연구는 2018년 4월에 시작돼 같은 해 10월에 완료됐다.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연구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연구진과 현재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 책임자 및 실무진과의 협의과정과 연구진의 역할분담을 통한 조사·분석 및 집필과정이 병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진은 여러 가지 연구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였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학술논문이나 정책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문헌자료 검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5년여에 걸쳐 실행해 온 민주시민교육 사업 관련 기록물 분석,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조건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의 수렴,

민주시민교육 제도·중간지원기구·거버넌스에 관한 국내외 사례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공공성과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비영리 조직의 설립과 사업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소셜 임팩트 프레임 워크'에 기반해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2 ▌ 연구내용

'제1장 서언'은 시대적 요청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이 지닌 의의에 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들에게 왜 교육이 필요한가에 관한 사유를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대별하는 가운데 특히 성인을 위한 시민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현재 우리 사회에 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지를 논함으로써 연구의 초석을 놓는다.

'제3장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성찰함으로써, 향후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시민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징표들을 일별하는 가운데,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가늠해 본다. 이어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끌어 낼 사회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교육체계의 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진단한다. 그리고 교육과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을 논의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학습자이자 민주사회의 주체인 시민의 정체성에 관한 성찰을 시도한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자원과 가치·도덕의 문제를 짚어본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파나 세력의 것이 아닌 헌법정신과 정치적 중립에 기반 한 것임을 재확인 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실현을 위한 제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상정된다.

'제4장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구와 거버넌스'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구에 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진다. 먼저 한국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와 지원기구 설립에 관한 선행논의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외국의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 관련 지원기구의 활동과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사례조사가 진행된다. 사례로는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 스웨덴의 대중교육위원회, 영국 시민성재단, 미국 시민교육센터가 채택됐다. 국내의 경우 아직 전국적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기구 및 거버넌스 경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사성을 지닌 교육관련 중간지원기구인 선거연수원, 통일교육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 민주시민교육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그간 축적해온 민주시민교육 관련 활동의 경험과 성과들을 종합함으로써, 이후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운영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위상을 재확인하

고, 창립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흐름을 사업의 원형이 정립된 모색기(2002년~2006년), 사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도약기(2007년~2013년), 그리고 부침을 겪은 조정기(2014년~2016년)와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 촉진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전환기(2017년~현재)로 구분해 살펴본다.

'제6장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운영 방안'에서는 향후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방향과 사업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논의를 위해 설립·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분석틀인 프레임 워크를 설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설립될 조직을 정의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거시 환경을 정치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조직의 가치체계인 사명과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를 설정한다. 이어서 조직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의 핵심적인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주요사업의 체계와 내용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7장 결언'에서 바람직함 민주시민교육센터 추진을 위한 제언을 통해 연구과정을 마무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는 가운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시민, 사회, 국가, 글로벌, 문명사 등 좀 더 넓은 차원의 시야를 제시하고,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본질적인 방향과 내용,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한다. 아울러 향후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운영을 통해 추구해야 할 사업의 효과와 사회적 변화를 전망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제Ⅲ장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흐름

제Ⅲ장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흐름

1 ▌ 민주시민교육의 현재성과 과제

1) 우리 민주시민교육의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성과 관련하여, 아울러 세계사적 전환기에 즈음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치적·교육적 대안으로서 강조되며 꾸준히 실천되어 왔다. 단순히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는 보편적 교육 대안으로서 전세계적인 관심과 집중적인 실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상황은 이러한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세계사적 변화에 대응하려는 '교육'의 지평이 '정치' 프레임에 갇힘으로써 시급한 제도화 및 실행, 지원 등이 지연되고 있고, 교육복지의 사회적 강화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중첩되면서 그 차별성이 희석되거나, 기존 학교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비판 및 전환적 실험으로서 신규교과 형태 등으로 교육현장에 적용되기도 했지만 단기적·고립적 프로그램으로 그 효과가 약화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장이라 할 수 있는 시민사회 영역도 여러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시민사회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여러 단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에 기반하여 힘겹게 추진되고 실험되어 왔다. 하지만 실행 주체들의 복수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차별적 경험의 누적은 역설적이게도 혼란의 뿌리가 된 듯하다. 주체와 경험의 다양성이 민주시민교육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동요와 불일치를 빚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수의 기관들이 힘겹게 이끌어온 교육의 성과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동요를 불식하고 그 에너지와 성과를 발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일견하기에, 최근 민주시민교육은 더욱 활발하게 기획·추진되고 외연 또한 확장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 규정의 혼란이나 집약성의 저하, 효과 약화 등의 문제 또한 없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민주'나 '시민'처럼 정치적 함축이 강해 보이는 용어들이 '교육'과 결합할 때 우리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 다양한 오해와 저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조와 역설이 마치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일시적 유행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은 특수한 정치적 이해와 무관할 것일 뿐 아니라, 역사적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교육적 대응 그 자체 또는 그 중요한 일환으로서 여러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과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분산된 이해 및 부적절한 오해를 극복하고 다양한 자원과 경험을 통합하는 과제, ② 민주시민교육의 적절하며 확고한 위상을 재정립하여 제도화하며, 교육은 물론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도록 하는 과제는 시급한 것이 된다.

2) 민주시민교육의 시대적 요청

1997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제2조(교육이념)를 통해 ① 인격도야, ② 자주적 생활능력의 함양과 함께 ③ 민주시민의 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하였다. ①, ②가 대체로 교조적인 교육의 목적이라면, ③은 우리의 역사적·정치적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서 해당 개정을 통해 추가된 부분이다. 이는 교육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미래지향적인 것임에 틀림없지만 과거에 대한 단절을 미래의 과제로 배치하는 특이성을 함축한다. 착근과 성장 모두에서 왜곡과 기형성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교정하고 극복하는 일, 즉 새로운 형상의 제시와 창출보다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뒤틀림을 바로잡는 게 그 자체로 교육의 명시적 목적이 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① 자기 역사를 토대로 하는 경험의 반영과 응축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일종의 '자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② 냉전과 분단, 성장지상주의와 반민주적 현실 등의 복잡한 착종과 그 효과를 통해 비정상성이 장기화되었음에도, ③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정적 실천에 기반해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보였다. 하지만 ③의 성과는 ①, ②의 잔재, 세계사적 변화 등과 맞물려 안정적인 구조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견고하지 못한 민주적 정치·사회 시스템은 역사적 격변기에 대한 역동적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1997년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된 '민주시민의 양성'은 당면한 국내외적 현실과 역사적 변화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사회의 구조와 체제는 이를 견실하게 구축하고 또 창조적으로 운영해 나아가는 '주체'를 전제함 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없기에, 이러한 '주체'로서 '민주시민'을 요청하고 있는 까닭이다.

나아가, '민주시민'의 양성은 일국적 차원의 교육 목표로 그치지 않는다. 2012년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UN 결의문'은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시민교육 및 인권교육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을 국민교육 표준으로 통합시킬 것을, 그리고 국민 및 지방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그리고 정규 과목 및 비정규 과목의 교육 활동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킬 것을 강하게 고무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는 20세기 후반 이후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숙도가 높다고 평가되었던 국가들조차 민주주의 시스템의 오작동을 강력하게 경험하면서, 그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수결, 대의제 등 민주주의의 정체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핵심적 원리들이 ① 합리적인 다수자의 폭력성·무분별과 획일화, ② 민의에서 분리된 대의자들 및 정당 등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의심받았으며, 급기야 근원적인 비판을 받으며 수정과 심지어 재발명을 요청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경제 영역을 비롯하여 전사회적인 지배권은 국가와 시장 사이를 오갔지만 다양한 사회적 위기의 확산은 멈추지 않았다.[1] 이와 관련하여, 간과해선 안 될 사실은 이 모든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뿌리가 사실 주권자들의 무기력에 있다는 점이다. 위의 ①은 주권자의 성찰과 실천의 역량이 저하되었음을, ②는 주권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의사결정의 근간을 형성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실제로 20세기 후반 이후 국가와 시장의 패권다툼에서 우리를 비롯하여 전세계의 시민들은 배제되어 있었고 배제의 장기화는 시민들의 수동화와 무기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더없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및 위기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인류사회의 현재와 미래에서 시민들의 창조적 상상력과 실천의 힘은 전환적 대안의 기반으로서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결국 2012 UN 결의문의 시민교육 강조는 이러한 역사적 딜레마에 대한 응답이며, 1997년 우리의 교육기본법과 마찬가지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마주하고 또 넘어설 '주체'의 요청에 방점을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실제로 이같은 문제 의식을 선도적으로 갖게 된 국가들은 이미 그에 대한 제도화와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또 확장시켜 가는 추세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

3)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목표·핵심가치

21세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담론은 얼핏 '과잉'인 듯하지만, 우리의 역사적 상황과 세계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점증하는 현실적 위기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 가장 근원적이며 유효한 대응이며 정당한 요청이다. '사람'과 유리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오직 '사람'에 의해서만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성 및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와 심화확장은 적어도 우리 사회의 경우 몇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 1970년대 이후 관료제나 정책 경직성 등과 같이 국가 중심 사회 모형이 가진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국가의 실패'를 비판하는 시장 자유주의가 점차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 1990년대 에 들어서는 이러한 '시장의 실패'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커졌다. 그리하여 ... 제 3의 대안으로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제 3섹터, NGO, NPO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자발적 시민 결사체들이 국가도 시장도 할 수 없는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아졌다."(『시민』, 신진욱 지음, 책세상, 2008, 75~76쪽 참고.) 사실 '기대가 높아'졌다고 완곡하게 표현하기 겸연쩍을 정도로 '시민'이란 자원은 현재 대체 불가능한 희망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2 "오늘날 사회문제나 공공의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원동원과 집행능력에 의존하는 통치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구성의 수요와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정책 행위의 전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민주적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은 물론이다."(『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구축과정 연구(시민교육연구보고서 2016)』,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화기념사업회, 2016. 15쪽) 다소 자제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처럼 시민을 진정한 주체로 고려하거나 전제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담론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3 IV부에서 좀 더 상세한 논의와 분석이 있겠지만, 주요 국가들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기구 및 예산 현황은 보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연간 예산 5,020만 유로(약 640억원), 직원수 270 여명 규모의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간물 및 출판물 발간,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와 지원, 유관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학교시민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영국과 미국도 각각 '시민성재단(Citizenship Foundation)',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을 설치하여 15~32억 정도의 예산으로 시민교육을 직간적접으로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 '대중교육위원회(FolkbildningStådet)'는 놀랍게도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시민교육에 투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목표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워낙 다양한 입장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화에 따른 위험도 적지 않지만 논의 전개의 편리상 요약하자면,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또 고양하도록 이끄는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삶의 양식과 합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성찰과 참여, 가치와 실천을 통합적으로 체화, 체득함으로써 자치의 역량,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4]

이렇게 압축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는 몇몇 핵심적 가치를 전제하고 또 지향하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ⅰ) 시민들의 자율적·역동적 참여와 합의에 기반하는 민주주의

ⅱ) ⅰ)에 내함된 상호연대와 협력

ⅲ) ⅰ), ⅱ)를 상시화하는 체계와 조직

ⅳ) ⅰ), ⅱ), ⅲ)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민적 성숙

위와 같은 핵심적 가치들은 동시에 연관 가치들을 강력하게 수반하는데, 특히 ⅰ), ⅱ), ⅲ)은 사회적 의제 자체에 관한 숙의와 참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천성의 가치를 이끌고, ⅳ)는 특정한 정치적 이념 등 통념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공적 정의를 지향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성, 합리성, 정치적 중립성을 함축한다.

아울러 이러한 가치 및 정의를 고려할 때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다시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ⅰ) 민주적 정치체제를 안정화하고, 그 합리적 유지와 창조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ⅱ) 민주적 의식과 실천적 역량을 함양·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ⅲ) 사회적 갈등과 변화에 대한 민주적 해결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기민한 역사적 대응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한다.

덧붙이면, 민주시민교육의 이같은 함의에는 우리 역사의 특수성이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ⅰ) 우리 사회는 정치와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주도 및 압축성장의 경험과 잔재가 강력하게 잔존하기에, 다양하고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점증하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해결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한다. 이는 대체로 사회구성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소통 및 이에 기반한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

4 '협의의 개념은 "시민교육을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정치현상과 기능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 기능, 가치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것"이며, 광의의 개념은 "자신이 속해 있는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도 및 참여적 행동양식을 함양시키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21쪽) 현재의 정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종합한 것에 해당하며, 후술하겠지만 21세기 들어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 자체의 규정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ii) ⅰ)에서 보듯 민주적 시민 역량의 함양은 시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국가지원은 상당히 빈약한 편이다. 이는 ①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입시와 취업, 복지 등의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 강력하게 지배되고 있는 까닭에 대안적 모델의 인입이나 개혁적 변화에 대해 저항이 심하고, ② '민주'나 '시민' 등의 중립적 개념조차 이념적·정파적 프레임이 민감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갈등 지형이 고착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iii) 지역, 부문 등 현실적 문제들을 주민 또는 시민이 스스로 합의하고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치 역량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 및 제도적 공조 체계가 상당히 부족하다.

우리 현대사와 현재의 상황을 돌아볼 때, 이러한 문제의식 및 이를 토대로 하는 정의와 목표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합리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및 실행의 전망은 아직 밝다고 하기 어렵다. 문제의식과 목표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 등 선결 과제가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5]

4) 교육의 보편적 모델로서 민주시민교육과 당면 과제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확산되고 그 내용과 형식 또한 심화·확장되어 왔다.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을 비롯하여 일부 학교를 통해 다각적으로 실험되며 일정한 착근의 효과를 낳은 경우도 없지 않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전반적인 시도들이 전사회적인 협력과 연계의 수렴적 전망을 열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 큰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이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정체성 그 자체를 함축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거슬러 그 실험과 정착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녹녹치 않다는 데 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조를 정세변화에 따른 일시적 유행으로 여기거나 특정한 정치적 색깔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는 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 인식 또한 일반화되어 있기에, 이와 연관된 외국 사례 연구 또한 일정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념적 갈등과 관련한 사례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수렴적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스웨덴의 사례가 특히 자주 거론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정치적 입장이 상이한 독일의 여러 연구자들 및 관계자들이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참여자 모두가 민주시민교육의 세가지 원칙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 원칙은 ① 강압의 금지, ② 논쟁성 재현의 원칙, ③ 자기 이해관계의 정치적 연관 설정능력 제고의 원칙으로 합의문은 이를 명시하였고, 이후 두 번의 개정(87년, 96년)과 두 번의 보완 제안(94년, 96년)을 거치긴 했지만 골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①은 학생의 독립적 판단을 방해하고 특정한 이념을 교조적으로 주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②는 학문과 정치에서 쟁점이 형성되는 것은 수업에서도 그러한 쟁점을 그대로 반영해

5 이와 연관된 논의에서 찬반의 양극단의 입장은 물론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 내부까지 '민주시민교육'의 근원적 필요성에 대한 성찰이 여전히 충분해 보이지는 않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야 한다는 것으로 교사의 자의에 따라 일정한 입장으로 결론짓고 이를 주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며, 원칙 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은 ①, ②에 기반하여 학생 스스로 정치적 상황과 자기 고유의 이해관계 상태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치'적 연관성이 강조된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교육 그 자체의 기본적 원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6] 이는 교육의 일반적 원칙이 정치적·사회적 이슈 및 연관 실천과 어떻게 유의미하게 통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원칙의 도출이 어떤 과정에 기반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60년대말 이후 격렬해진 학생 운동의 영향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화두가 제시되었을 때 이를 둘러싼 좌우 대립이 극심해졌을 뿐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 또한 악화일로로 접어들게 되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이러한 상황의 타개는 물론 대단히 긍정적인 전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 받는다. 실제로 교육 현장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던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내실 있는 민주시민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교육' 부문 자체의 발전과 고양은 물론이고 교육과 정치의 창조적 결합 가능성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념갈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민주시민교육 논의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참고사례가 된다.

민주시민교육의 네트워킹과 관련하여 스웨덴의 사례는 이상적인 모범으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유의 역사적 상황에 따른 결과이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정착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정치적 영향이 강해지면서 민주시민교육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조직적 기반이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스웨덴은 민주시민교육과 일반적 공교육의 유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교육의 문제를 복지와 권리의 지평에서 접근한 오랜 역사를 지닌 까닭에 다양한 외풍에도 합리적 중심을 찾아가는 복원력을 보여준다. 21세기 들어 '학습동아리' 등 기반 조직의 공동체적 특성이 다소 약화되고 개인중심적인 성향이 강화되기도 하지만 실업과 이민자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기민하게 변화를 준비하는 제도화된 역동성은 여전하다.[7]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스웨덴의 사례는 전술한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및 목표 등과 통합적으로 성찰할 때,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절실한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는 ⅰ) '민주시민교육'을 보편적 교육의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재성찰하고 이에 관한 전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ⅱ) 현실 정치 등 외적 영향은 물론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교육의 목표를 관철해 나갈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ⅱ)는 전술했듯이 민주시민교육 외연 내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미 진행중이기 때문에, 연관 입법과 더불어 현재 분산된 체계들을 지원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허브 또는 플랫폼 구축이 최우선의 과제임을 환기해준다.[8]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이러한 허브 또는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이며, 그 과제와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압축된다.

6 『민주청서 21』, 홍윤기 外, 민주화기념사업회/5·18 기념재단, 2008, 206~219쪽 참고.

7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2016, 108~109쪽

8 두 과제가 내용상 분리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ⅱ)의 실현은 ⅰ)의 과제를 일정하게 해결하는 것일 수 있다.

ⅰ) 광범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한국형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
ⅱ) 다양한 연관 자원의 유기적 결합과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
ⅲ) 컨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ⅳ) 교육과 자치의 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 지향

2 ▌ 민주시민교육과 21세기

1) 교육의 위기와 현실의 위기

가. 자유주의 교육의 몰락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이란 말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과 사회적 실천, 일상과 자치 등의 통합적 함축을 지닌다. 따라서 제도화된 '교육'의 외연에 갇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선입견, 기존의 논의 및 실행 경험이 주는 제약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유연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교육'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전사회적인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민주시민교육이 정치를 넘어 제도 교육과 사회 전반에 대해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에 특히 미국의 경우는 경우는 중요한 참고사례가 된다. 미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제도 교육 내에서 한정된 의미가 주어진 채 제한된 몇몇 프로그램으로 출발했지만, 급변하는 현대사의 전개 속에서 내용과 형식 모두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는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함축을 던져주는데,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만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는 여러 모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미래를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달갑지는 않지만 한국의 교육과 미국 교육 사이에 나타나는 동형성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전례가 주는 의미는 더욱 커진다.

미국의 교육에서 '시민'과 같은 화두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화두의 등장 시기가 기존의 교육기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었던 시기와 맞물린다는 사실이다. 일찍이 미국의 다큐멘터리 'Waiting for Superman'[9]은 미국 교육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영화는 미국의 무너진 공교육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 꿈을 실현하고 인간적 성장을 고무해야 하는 교육기관이 점점 더 많은 낙오자를 '배제'하는 도구로 변모했음을 꼬집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도 미국 교육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필이면 우리나라를 일종의 모범적 모델로

9 Davis Guggenheim 감독, 2010작

예시하며 총체적인 교육구조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오바마의 인식에 대해 한국인들이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려웠다. 미국만큼 공교육의 전반적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육 문제의 심각성이 덜하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Waiting for Superman'은 특히 공교육의 쇠락과 함께 미국내 사교육의 부상을 대조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이 역시 한국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도 분명하다. 미국의 사교육이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와 등치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사교육은 압도적으로 상업화의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유의할 것은 이러한 차이 및 유사성과 상관없이 주목해야 할 등질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름 아니라 수월성 교육의 특징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공립학교의 질적 저하가 분명한 현실로 인정되는 미국 사회에서 학부모의 대다수는 자녀들을 사립학교로 진학시키길 희망하지만, 'Waiting for Superman'에 잘 묘사되었듯이 이처럼 폭넓고 간절한 수요와 달리 극히 제한된 공급만 있을 뿐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경쟁은 유치원부터 시작되어 대학까지 이어지는데, 단계별 사립학교에 대한 질적 판단은 단순화했을 때 좋은 상급학교 진학률을 토대로 한다. 결국 아이비리그 입성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사립학교들을 판단하도록 하고 또 지원 경쟁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인 셈이다. 이처럼 기나긴 경쟁의 최종 승자가 누릴 혜택은 여러 가지 변수가 당연히 작용하겠지만, 취업과 연봉으로 압축되고 이는 다시 이러한 시스템의 지속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양상은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지만, 이러한 미국 교육의 기조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이 결국 21세기 들어 사회적 위기로 일정하게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사회적 변화는 물론 세계사적 변화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하는 제도 교육의 위기는 근본적 비판과 성찰의 대상이 되었다.

나. '슈퍼맨' vs '시민'

미국의 경우 저 장구한 경쟁의 최종 승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 가운데 하나는 월가다. 수월성 교육과 치열한 경쟁의 성과가 우수한 인재에 있다면, 예컨대 월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재들이 집중되는 공간으로 이들의 우수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어야 한다. 하지만 2008년 리먼 사태로 촉발된 월가의 대혼란은 이 인재들의 '우수성', 그리고 이를 키워낸 교육 체계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성찰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들은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특별한 역량을 갖춘 인재임에 틀림없었지만, 그 역량과 능력의 활용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라는 방향으로 완전히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은 세속적이며 개인적인 욕망의 실현을 위한 도구였고 그 도구의 사용조차 자기 자신이란 중심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자신들을 수혜자로 만든 사회구조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나 실천은 이들에게 당연히 관심 밖의 일이었다.

교육은 정의로운 '슈퍼맨'이 되고자 하는 소박하고 정직한 꿈을 보듬어 키워주지 못한 채, 자신의 뛰어난 역량을 만인을 위해 사용하는 '슈퍼맨'을 키워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리먼 사태와 같은 현실적 위기는 그런 '슈퍼맨'의 부재를 드러냈고, 그 약속이 거짓임을 입증했다. 한국의 경우도 유사해서, 사회

적 위기를 심화시킨 인물들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들이 포함되는 게 이제 익숙할 정도다. 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이처럼 현실의 위기와 함께 가장 분명하게 전면화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내 교육 변혁에 대한 논의는 그와 같은 사회적 위기가 널리 감지되던 20세기 후반부터 불붙기 시작하여, 21세기 벽두에 들이닥친 금융 위기 등과 함께 본격화된다. 특히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지성의 공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근본적으로 되묻기 시작했고 부분적인 교정矯正의 실험도 활발해진다. 이 과정에서 전인적 교양 교육을 강조하는 커리큘럼이 적용되거나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이 강조되기에 이른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시민'이란 화두가 적어도 미국에서는 교육과 현실의 전반적 위기와 함께 활발하게 운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외연이 변화하는 것임을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무엇에 관한 대안이 되어야 하는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일단 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프로그램의 이름 또는 몇몇 프로그램의 통칭으로 그칠 수 없을 듯하다.

2) 미래 교육의 열린 대안으로서 민주시민교육

가. 사회적 위기와 '시민'의 요청

21세기 초부터 광범위하게 일기 시작한 교육적 변화를 위한 논의는 상술했듯이 사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본격화되던 때이며, 이와 더불어 정치와 사회의 도덕적 원리를 둘러싼 논쟁, 이른바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이 불붙은 시기이기도 했다. 여기서, 공동체주의자로 분류되는 찰스 테일러, 마이클 샌델, 맥킨타이어 등은 20세기 후반부터 자리잡은 정치적 관행과 그 철학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자유주의의 착근과 더불어 '자유'와 '권리'의 강조 하에 고립적 개인관 또는 개인중심주의가 만연하게 된 사실을 비판하며, '연고적 자아' 또는 '서사적 자아'라는 공동체적 인간 해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공동체적 참여가 일상적 덕목이 되고 이에 기반한 자치의 확립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고착, 즉 정치적 형식화의 과잉을 넘어서도록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10]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실제로 제도 교육의 현장에서도 강력하게 재현되었다.

보이어(Ernest Boyer) 같은 이는 1987년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 학부교육의 질적 악화를 지적하면서 특히 대학의 도덕적이고 시민적인 목적을 강조한다.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대학이 상술한 '슈퍼맨' 가리기를 위한 '경쟁'에 구조적으로 몰입하고 있을 뿐, 결코 '헌신'의 가치를 지향하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11]

실제로 20세기 후반 미국의 대학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중반까지의 대학과 달리, 가치와 이해의

10 이병태, 우대식, 「찰스 테일러의 개인주의 정당화에 관하여 - 개인주의의 재정의, 그리고 '대화' 개념을 중심으로 -」, 『시대와 철학』 20-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8, 우대식, 「현대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대한 공동체주의 비판의 한계와 그 극복가능성에 관한 연구 -찰스 테일러의 '자아' 개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참고.

11 Educating Citizens, Anne Colby 外, Jossey-Bass, 2003. 5~6쪽

혼동, 소명과 목적의 혼란, 학과 간 단절 심화, 캠퍼스 내 사회적 삶과 학제적 삶의 분열 따위에 찌들어, 대학의 시민적 소명을 실현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21세기 들어 더 심화된다. 여기에, 사회적으로는 이전의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화의 진철에 따라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까지 가세하게 된다.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이처럼 더욱 무거워진 세상에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그리고 산적한 현실적 문제들의 극복이 가능하려면 지성적 능력이나 전공 역량 외에 뭔가 다른 요소의 함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스스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기고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며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고자 하는 책임감과 실천적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이 지식과 기술의 습득 외에 책임 있는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역량의 함양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성찰은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대학을 넘어 교육 전체에 대한 비판적 통찰로 이어졌다.[12]

대학과 교육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은 사회 전체가 유사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많은 이론가 및 비평가들이 수없이 지적했듯이 미국에서 시민적 헌신은 상당히 후퇴했다. 미국인들의 시민성, 상호 존중, 관용은 쇠락했고, 공동선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 또한 확산되었다. 개인적 성취와 욕망의 충족이란 목표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압도한 지 오래며, 이기적 풍조의 비판은 보수적이고 완고한 종교, 또는 도덕적 입장을 통해서만 제기될 뿐인데,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따름이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깊어지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는 점점 더 위축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혐오 및 무기력, 무관심, 무지는 청년층일수록 더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미래 사회 및 정치의 동력 약화를 예고하는 것이기에 특정 세대가 지니는 특징 내지 성향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참여나 실천을 상시화하고 일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교육적 배치는 결코 특정한 정치적 관점에 기반한 요청이 아니며,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필수 불가결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나. 민주시민교육의 실험과 설계

‘학교’의 한계

이처럼 기존 교육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 그리고 ‘시민성’과 같은 지향은 우선 일종의 교과 형태로서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실험된다. 그 이전에 존재했던 ‘봉사활동’ 등 연관성이 있는 듯한 프로그램은 사실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참여자의 역동성이 차단되어 있었고, 시민적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또한 부재한 상태였다. 따라서 기존의 유사 프로그램이 지닌 한계를 확실히 극복하면서도 새로운 교육 목적을 분명하게 지향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다각도로 논의된다. 새로운 교육적 비전에서 요구되는 가치와 덕목은 특정 교과의 내용 및 형식에 집중적으로 담아낼 수 있기에, 일부 학교들은 예컨대 ‘시민교육’과 같은 교과목을 새로이 개설하였다.

단기 집중적 프로그램이 지니는 효율성이나 기타 효과들도 물론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프로그

12 실제로 전미교육협회는 21세기 초 단순히 독서, 글쓰기, 연산 등을 중심으로 했던 교육 목표 자체를 완전히 수정하여 ‘의사소통능력’, ‘협동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을 교육 목표로 설정했다. 여기서 앞의 두 능력은 직접적으로 시민적 소양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성적 없는 성적표』, 류태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32쪽)

램의 한계는 거꾸로 지속성과 확장의 계기 결핍에서 나타났다. 현실적 문제의식과 참여 의지, 덕목 등은 특정한 과목을 특정한 기간 동안 이수한다고 해서 함양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적 모델은 학교의 교육적 저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대학을 비롯한 학교 자체의 근본적 구조를 건드리는 것이기에 쉽사리 실험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근본적인 차원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공감하는 이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현불가능성을 단언하기도 어렵다. 이는 학교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시사를 준다. 일시적인 몇몇 프로그램의 한계를 뛰어넘어 좀 더 확장된 외연의 프로그램이 요청되고, 따라서 연관된 사회적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구상되고 기획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교과과정은 전공과 교양으로 대분되는데, 통상 전공은 취업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요소에 의해 추인되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은 편이다. 사실 이 점은 시민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부분도 수다하지만, 단일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한계를 드러낼 때 고려할 만한 전략 가운데 하나는 전공수업의 영역에 시민교육적 요소를 녹여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13] 시민교육은 학과연구와 공공서비스를 연결하는 활동수업의 형태로 학술적 역량을 내면적으로 추동하고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공헌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매진 등이 사유와 성찰의 능력 함양은 물론 전공 등 학업에 대한 동기도 강화시켰다는 사례보고가 있다. 학과 내용을 학생들의 삶, 관심, 열정과 연결시킴으로써 수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더 오래 기억하도록 하는 일은 고등 교육의 목표 자체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컨텍스트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교실에서 주입받은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험은 특히 한국인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관심과 열정에 기반한 참여로 비판적 문제의식이 단련될 경우, 이는 전공학문의 경향이나 방법론에 대한 문제의식 또는 동의로 이어지면서 심도있는 학문적 성취로 발전할 수 있다. 예컨대 직접 경험한 사회적 문제가 계량적 방법론으로 적절하게 포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시킨 문제의식은 지식의 주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학문적 성숙을 이끌 수 있다. 이는 우리 민주시민교육에서 직능교육이나 심지어 취미교육, 다양한 기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 주제의 교육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일이 왜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은 사실 커리큘럼 이외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예컨대 학교의 시스템 자체, 그리고 학교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는 부지불식 간에 특정한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을 갖도록 이끄는 가장 강력한 기반 가운데 하나다. 이런 점에서 교육기관은 이미 가치중립적이기 어렵다.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떠한 가치를 따를 것인지를 사실 매일 매일 가르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스펙을 쌓으라는 선배의 목소리가 일상이고 친구들이 모두 그 목소리대로 살고 있을 때, 헌신적인 선생님보다 일신의 영예를 좇는 선생님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때, 이미 학교는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릇된 방향의 도덕 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13 이는 미국의 일부 대학이 이미 실험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Anne Colby(2003) 참고.

이 커리큘럼 밖의 커리큘럼은 학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업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단일 교과 형태를 지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이처럼 비가시적인 커리큘럼까지 일종의 수업 또는 수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교나 사회의 뵈지 않는 커리큘럼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그 자체의 흐름을 바꾸려 하는 노력은 비가시적 커리큘럼이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자, 그 자체로 '시민'의 탄생을 이끄는 것이 된다. 이를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에 적용한다면, 특정한 사회적 이슈나 문제 자체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 자체를 교육의 외연 안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학교'를 넘어 시민사회로 확장되고 또 교호해야 하는 필연성이 발생한다.

자신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이 부정적인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는 의당 교정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또 적절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비교과적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려면 사실 단순한 교과 개설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교육 구조의 변화가 선행 또는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을 '학교'라는 장에 국한하여 살펴보는 논의는 결국 현재 분산되어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자원들이 왜 통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통합의 범위가 얼마나 폭넓은 것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민주시민교육, 학교를 넘어 시민사회로

전술했듯이, 20세기 후반 미국 내 교육개혁의 목소리는 공교롭게도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과 시기적으로 중첩된다. 사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절차'와 '중립'을 일종의 불문율로 내세운 정치가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는 인식은 여러 이론가들에게 공유되었고, 이들의 비판적 논의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지속되는 논쟁의 뿌리가 된다. 단일한 쟁점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핵심적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가치 중립적 정부에 관한 것이었다. 도덕과 가치에 거리를 두는 게 다양성의 존중으로 등치되면서 민주 국가 운영의 관행적 원리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른바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은 그러한 중립성의 이면에 일정한 가치가 이미 전제될 뿐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와 연관해서 그와 같은 중립성이 '절차'란 미명 하에 '형식'의 과잉을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실질적으로 억압했다고 비판한다.

요컨대 공동체주의자들의 입론은 왜 '도덕'이나 '가치'에 관해 입을 다물어야 하냐는 것이었다.[14] 이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테제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미 특정한 가치관은 교과 외 교과, 즉 현실을 통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치중립성을 지향하거나 혹은 가치를 근본적으로 외면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현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통속적 가치의 인정에 다름 아니다. 물론 민주시민교육이 '가치'나 '도덕'의 문제에 개입할 때 방법과 형식 등에 관한 충분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민주시민교육을 현실 정치의 지평에서 바라보려 하는

14 『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한국경제신문사, 2010, 233~252쪽 참고. 이와 관련하여, 찰스 테일러의 『자아의 원천들』, 『헤겔』, 『불안한 현대 사회』, 『근대 사회적 상상』, *Philosophical Papers Volume 2: Philosophy and the Human Sciences*, 'Cross-Purpose : Liberal-Communitarian Debate', 마이클 샌델의 『정의의 한계』, 『민주주의의 불만: 무엇이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는가』,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의 『덕의 상실』, 마이클 왈쩌의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의의 영역들』 등은 중요한 성찰의 단초를 제공한다.

시선이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한층 더 주의 깊은 접근법이 요구된다.

특정 가치의 명시적 강조와 지지도 만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된다면 회피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은 현실적 맥락을 고려하는 우회적인 방법도 선택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극적이지만, 현실을 지배하는 부정적 가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컨대, 현대 사회에는 개인주의와 배금주의가 만연하고, 자본의 지배력은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일은 그 자체로 대안적 가치를 고민하는 것이자 진취적인 미덕을 체화하는 것이 된다. 커리큘럼 밖의 커리큘럼, 즉 세속적 가치의 일상적 주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그 자체로 도덕과 가치에 가장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다.

덧붙여,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가치나 미덕도 참여와 실천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가령 상호존중, 열린 마음가짐,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고 수용하려는 자세, 절차적인 공정성, 쟁점의 공개토론과 같은 가치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면, 그러한 미덕을 자신 안에서 강화하고자 한다면, 개인의 권리 및 복지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 개인과 사회의 유기성에 관한 인식, 비판적 자기 성찰, 시민적·합리적 담론 및 공정성 정립에 대한 의지에 대한 믿음 등에 대한 이론적 학습이 아니라 이를 삶속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적 사회참여와 실천이 가장 중요한 교보재가 된다. 이러한 가치들에 관해 실험, 사유, 토론, 논박, 동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 사회, 한 공동체 내에서 공통의 가치와 미덕을 발휘,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목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를 넘어 평생교육프로그램, 그리고 특히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뤄지는 참여와 실천에 의존하는 바가 큰 것일 수밖에 없다.

가치판단과 동떨어진 참여와 실천이 역동성을 지니기는 어렵고, 그러한 역동성의 구축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목표다. 따라서 필수적인 미덕과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가치에 관한 교육적 계기는 민주시민교육 내에 새롭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민주시민교육의 기존의 도덕 교육 등이 지녔던 형식성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가치 교육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이 가치와 도덕에 개입함은 교육을 받은 이들이 일상적인 토론과 성찰,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의 올바른 운영과 작동에 헌신하도록 이끌고자 함이다. 이러한 교육의 궁극적 목표 내지 최선의 효과는 정치적 지평을 생활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치적 무관심은 전세계적인 문제다. 우리처럼 특수하고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과 상황으로 인해 정치적 관심이 드높아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사실 그같은 관심과 교정을 위한 실천, 역동성은 상황에 따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누구도 '촛불'로 상징되는 정치적 참여와 역동성이 상시화된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 민주시민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이러한 상시화의 달성이라면, '가치'와 '도덕'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주제다. 문제가 되는 것을 문제로 알고 교정하려는 행위는 시비를 가리는 가치판단과 분리할 수 없고, 교육을 통해 그러한 판단과 실천을 낯설어 하지 않는 이들은 정치를 자신의 삶과 분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 '가치'와 '도덕'이라는 화두를 끌

어안는 일은 진부한 도덕교육의 귀환이 아니라 참여와 실천의 역동성이 상시화된 시민의 탄생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주제가 윤리학적 연관만 지닌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해다. 특정 가치의 이론적 배경, 또는 그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입론 등을 지식으로 접하는 일은 민주시민교육이 끌어안고자 하는 '가치' 및 '도덕' 교육과 전혀 다른 것이다. 예컨대 학사제도 개선 또는 지자체 재정투명성 확보 등과 관련된 심층적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 경제 등을 망라하는 전문적 분석이 요구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개선의 기준이 되는 '가치'에 관해 토론할 수 있다. 나아가 이같은 분석과 토론이 일단락된 뒤에는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의하고 개선을 실행 또는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이로써 민주시민교육은 삶과 교육, 그리고 정치의 통합체가 되고 그 속에는 명백하게 '가치'나 '도덕'의 생생한 계기, 그리고 그 실천의 상시화가 함축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의 이와 같은 내용과 형식은 민주시민교육이 학교를 넘어 시민사회로 나아가야 하고, 시민사회 영역이 다시 일종의 교정추이자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다. 세계사적 전환기의 민주시민교육

개인적 역량의 공적 의미를 체득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교류하여 공론을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능동성을 발휘하는 일은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삶, 사회적 관계, 정치·경제적인 구조의 변화와 고양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로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한다. 특정 분야의 탁월한 역량은 갖추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않는 이들이 더 이상 현실적 문제 및 위기에 대한 희망일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아직 명시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21세기 교육은 대전환의 운동을 이미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인문교양을 강조하거나, 제한된 교과 혹은 프로그램으로서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지엽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의 커리큘럼은 전공, 교양 등 다양한 단위 및 교과로 분산되어 있지만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일정한 방향성을 지녀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분적인 교과들의 변화는 사실 교육적 대전환에 대한 예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뼈저린 재인식이 부분적이지만 가속화되고 있는 변화를 촉발했다고 할 때, 사실 '시민교육'처럼 공적 가치 및 실천적 능력을 실천적으로 체득하게 하는 하나의 교과 또는 연관되어 있는 몇몇 교과만으로 '전환'을 위한 강력한 동기를 형성할 수는 없다.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외연을 '학교'에 가두었던 과거와 일정한 단절을 예고하는 것이면서 사회적 참여 및 실천의 경험이 그 자체로 교육이 되는 미래를 투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온 민주시민교육의 시도와 성과들이 그나마 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나타났던 것은 우연이 아니며, 학교를 넘어 사회적 실천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고 그러한 실천이 다시 사회적 동력이 되는 진취적·역동적 대안인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그래서 하나의 교과명 또는 특정한 정치적 함의, 심지어 민주주의의 역동성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특수한 교육과정 이상으로 그 의미가 개방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신의 역량을 찾고 계발

하는 기존 교육의 틀을 수용하면서도, '개인'이란 존재의 의미를 공적인 지평에서 재인식하고 개인적 고양과 사회적 실천이 분리되지 않도록 이끄는 미래 교육 및 정치의 통합적 대안을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오로지 정치적 함의를 지니거나, 권리 주체들의 무기력, 이로 인한 정치적 위기와 민주주의의 한계 등을 넘어서기 위한 기획으로 이해되는 수준을 뛰어 넘어, 그 내포와 외연을 한정할 수 없는 미래 교육 및 정치의 열린 이름이 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은 그 장구한 도정 가운데 첫 단계에 해당한다.

라. 제도화를 위한 고려 사항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관해서는 뒤에 상세한 분석과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제도화와 관련된 몇가지 주요 고려사항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는 대체로 민주시민교육의 분산적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허브 또는 플랫폼 구축의 시급성으로 수렴된다.

민주시민교육의 위상 재정립

'민주시민교육'은 '시민교육'으로 축약되어 지칭되기도 하면서, 전자의 의미를 함축하는 '시민교육'이 대개 더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 사용 자체는 일정하게 개념적 혼란 또는 불일치 양상을 더 심화한다고 할 수 있다. '시민교육' 개념이 자주 '대중교육', '평생교육'과 중첩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역사적 요청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역동적 정치주체의 탄생을 이끌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뜻밖에도 광의의 대중교육과 의미상 중첩되면서 실은 취미 교실까지 함축하는 모호한 외연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개념 정의와 관련된 일정한 논의와 합의는 생각보다 절실한 문제다. 실제로 민주시민교육 또는 시민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개념적 혼란 자체를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마치 관행상 공통의 도입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탐문이 완강하며 획일적인 규정성의 구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지점이지만, 이러한 모호함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건립은 다시 한 번 시급한 것이 된다.

다양한 성과의 수렴 및 내용과 형식의 재발명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을 전제한 협의의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역사의 '기억'을 담지하고 민주주의 미래와 세계사적 전환을 이끌 역량있는 주체로서 '시민'의 탄생을 지향하지만, 교육의 강한 목적이란 그 내용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떠나 필연적으로 '교육'의 통제적 요소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통제적'이라 함은 물론 강압적 훈육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필수적인 지식과 정보, 이에 바탕한 실천 및 활동 등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상(像)이 일정하게 존재함을 지칭한다. 예컨대, 민주주의나 시민을 키워드로 하는 이론 및 역사 교육은 거의 모든 민주시민교육에서 기본적 요소에 해당한다. 아울러 실천 영역의 경우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실천활동 등을 설계하거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대개 그 핵심이 된다. 이처럼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내용과 형식에서 일정한 공통 패턴을 드

러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적어도 '민주시민교육'이란 기치 하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형식과 내용의 일정한 고착이 민주시민교육의 태생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강한 목적성과 결합됨으로써 다소간에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민주시민교육의 성격과 내용이 특정됨으로써 상술한 광의의 시민교육영역과 실제로 중첩되는 데서 발생한다. 현재 지자체 및 산하 기관, 도서관, 각종 시민 단체 등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내용과 형식에 해당하는 강좌를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실천 및 활동프로그램, 특정 이슈에 대한 심화된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적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가 결코 집약될 수 없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수렴하여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서 성과를 집약할 플랫폼의 구축은 절실한 것이 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 역동적으로 조응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제고하고, 개방적인 상상과 재창조가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기반 또한 견실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센터와 민주시민교육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민주시민교육의 본래 취지, 목적 등을 확고하게 하면서 이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복원'하려는 시도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성찰과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도 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그에 대한 대중적 호응과 성과가 있었는지 묻고 그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함께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촛불'과 정권교체, 국제정세의 급변 등 '민주주의'나 '시민'의 탄생을 고무하도록 하는 역사적 상황은 명백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민주시민교육의 '변함' 없는 중요성과 위상이 절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민주시민교육'의 함의가 그만큼 성숙하고 치밀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의 교육적 지향이 강하게 정립된 데 비해 어떤 의미에서 교육의 대상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 조건을 냉철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성찰도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은 전술했듯이 제도 교육이나 형식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범주에 갇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예시적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민주시민교육은 간혹 여타의 병설된 프로그램보다 대중적 선호도가 떨어질 때가 있다. 이 현상은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이 강할수록 좀 더 두드러진다.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 연관 프로그램의 경우 새로운 계층의 인입 및 참여도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고, 일부 대학의 관련 강좌 역시 선호도는 차츰 떨어지고 있다. 이는 어쩌면 방법론에 대한 적확한 통찰과 논의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민주시민교육의 설계와 제도화란 상당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 역시 전체적인 현황을 조감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기민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반, 즉 민주시민교육센터 구축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하여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할 네트워크는 현재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연관 사업 등이 만일 본격화된다면 이러한 네트워크 및 허브의 구축은 역량의 집중이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연관 교육 및 연구의 경험이 축적된 조직, 아울러 위와 같은 네트워크를 실제로 구축·운영 가능한 기관이 일단 선도적으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접적인 운용을 수행하고, 네트워크 및 허브 구축을 실행할 수 있는 내외부 인력풀을 지원 받음으로써 시의적절한 사업들을 즉각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이나 기관 별 교육지원을 연계하는 것과 별개로 여타 기관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교육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센터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의 중추가 될 수 있는 인력풀의 확보 또한 중요한 선결요건이 될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제Ⅳ장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구와 거버넌스

제Ⅳ장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구와 거버넌스

1 ▌ 논의의 흐름

한국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와 지원기구에 관한 논의는 앞서 살펴본 제도화의 논의와 그 궤를 같이한다. 후자가 주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법제도적 측면이라면, 전자는 법제도가 실제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과 주체의 관계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있어 현재적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인 199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공교육 과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제외한 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거버넌스와 지원기구에 관한 논의들을 다루고자 한다.

1) 지원기구에 관한 논의

1990년대 들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학계의 논의가 시작되고, 1990년 '미래사회와 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필두로 민주시민교육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1994년에는 (가칭)'한국민주시민교육포럼'이 창설되고, '세계의 민주시민교육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도 개최됐다. 일련의 성과를 토대로 1995년에는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가 창립됐다.[15]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거버넌스나 지원기구에 관한 논의들도 활성화 됐는데, 주로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같은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들이 주류를 이뤘다. 이 시기부터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체계와 활동에 관한 소개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홍득표(1997)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사회교육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그리고 조영달(2001)이 '강한 시민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주장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책적 논의들도 활성화 됐다. 문민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시민정치의식의 세계화'라는 의제를 설정하면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논의를 추진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권찬호 2009). 이후

15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http://www.kade.or.kr).

1997년에는 국회에서 그간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관한 논의를 수렴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박명환 의원 외)이 발의 됐다. 이후 학계에서도 민주시민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법안에 관한 분석과 제안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송창석 2000; 김일동 2003; 허영식 2004; 신두철 2005; 신두철 2007; 신두철 2008; 신형식 2008; 신두철 2010; 정연운 2012).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구상은 16대 국회의 '시민교육진흥법안'(김찬진 의원 외), 17대 국회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은영 의원 외)으로 구체화 된 바 있다.

한편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을 참조한 민주시민교육원 모델과 조금 다른 결의 논의들도 진행돼 왔다. 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기존에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지 해 온 시민사회 주체들의 자율성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 구상이 제안 됐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교육위원회·한국YMCA전국연맹. 2005), 박상필(2008)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시민교육중앙위원회과 광역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위원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해 민주시민교육 관련 의사결정과 실행을 담당케 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박상필 20008). 이런 구상은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언주 의원 외)의 독립적인 '민주시민교육위원회'안이나, 19·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남윤인순 의원 외)의 행정안전부 산하 '민주시민교육위원회'안으로 구체화 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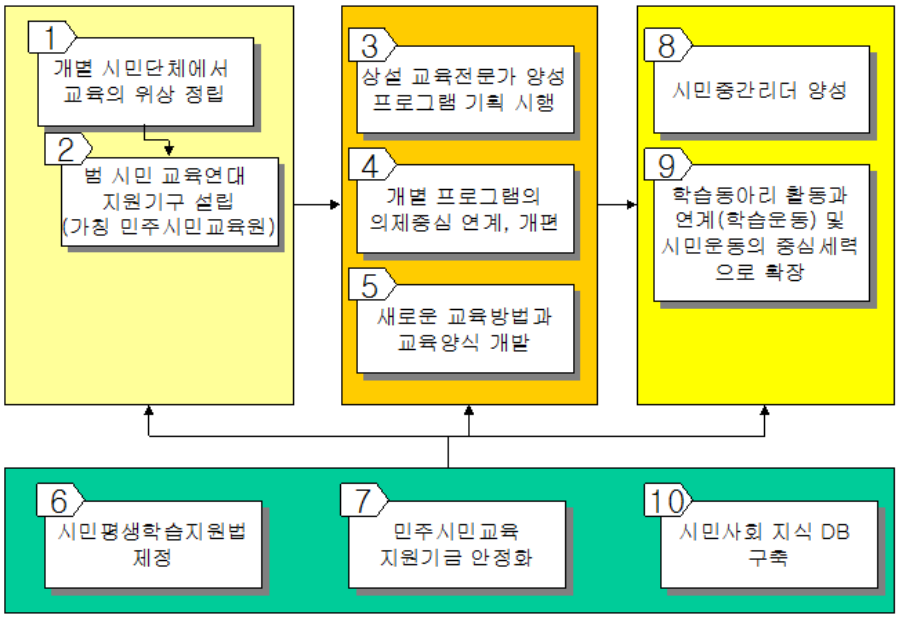
2)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제도 도입논의의 일환으로 다뤄진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구에 관한 논의와 함께, 우리 사회가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즉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이어져 왔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원주체의 성격에 관한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각 유형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논의들이 제출됐다. 홍득표(1997)는 민주시민교육 지원의 유형을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혼합형'—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등 3가지로, 서준원(2000)은 독립적인 민주시민교육 관련법에 의한 지원기구와 비영리민간단체에 근거한 지원기구 등 2가지로, 황수현(2008)은 '시민단체주도형', '정당 주도형', '국가기관 주도형', '혼합형' 등 4가지로, 신형식(2010)은 정부 주도 관리형(독일 사례), 시민사회 주도 자율형(미국 사례), 범국가 연합형(유럽평의회 사례)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비교분석을 진행했다. 황기식(2015)과 정재원(2011)은 각각 독일 통일교육의 거버넌스 체계와 영국의 시민교육 거버넌스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고, 신두철(2015)은 거버넌스 관점에서 한국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실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논의들도 진행됐다. 한숭희(2003)는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발전을 위한 10가지 실천과제로 △개별 시민단체에서 교육의 위상 정립 △범시민 교육연대 지원기구 설립 △상설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기획 시행 △상설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기획 시행 △개별 프로그램의 의제중심 연계, 개편 △새로운 교육방법과 교육양식 개발 △시민 평생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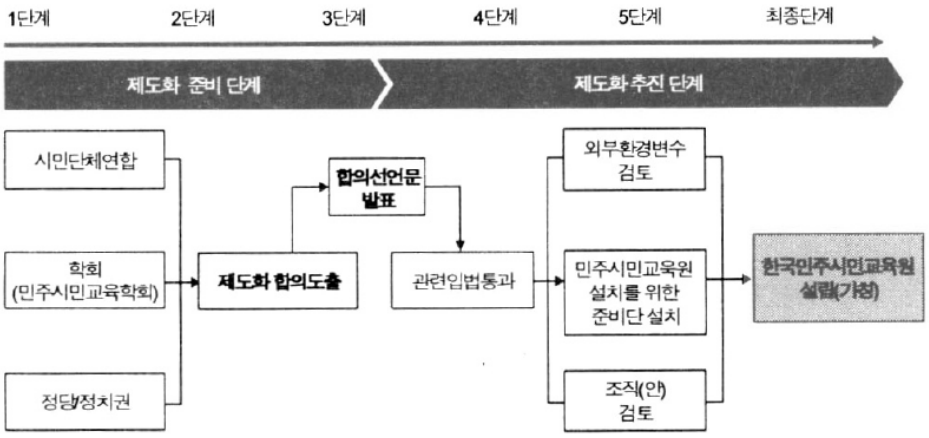
지원법 제정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금 안정화 △시민사회 지식 DB 구축 △시민중간리더 양성 △학습동아리 활동과 연계(학습운동) 및 시민운동의 중심세력으로 확장을 제시하고 [그림 Ⅳ-1]과 같이 구조화해 제시한 바 있다.

〈그림 Ⅳ-1〉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발전을 위한 10가지 실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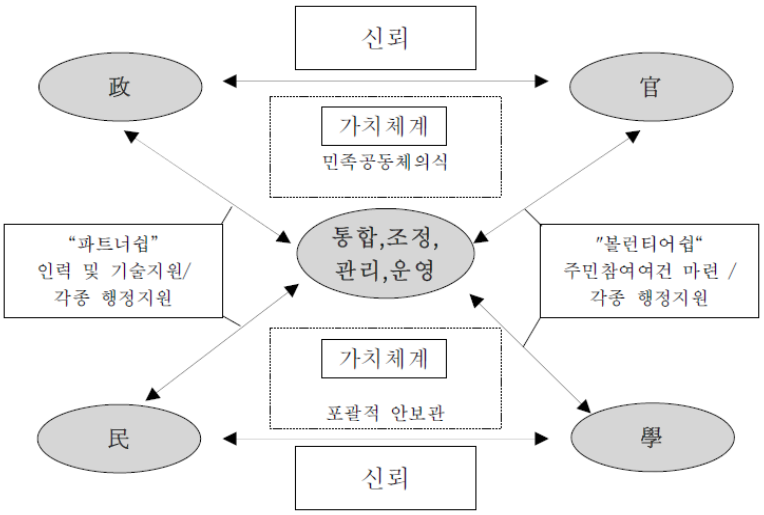
정창화(2005)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착근을 위한 거버넌스의 단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제1단계는 시민단체연합, 학회 그리고 정당 및 정치권에서 공동의 합의를 도출한다. 2~3단계는 합의도출된 것을 범단체적으로 합의문을 작성해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제4단계는 합의된 민주시민교육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5단계는 추진단을 구성해 지원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마지막 단계에 지원기구가 설립된다.

〈그림 Ⅳ-2〉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착근을 위한 단계



정희태(2011)은 사회통일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정, 관, 민, 학, 연, 언 등이 체계적,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통합, 조정, 관리 및 운영하는 시스템을 [그림 Ⅳ-3]과 같이 제시했다.

〈그림 Ⅳ-3〉 사회통일교육 실행 거버넌스 체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5·18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민주시민교육 종합 연구용역(2008)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체계구축과 가동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안은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의 구축과정을 구조화(Structuralization), 활성화(Actualization),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등 3단계로 구분한다. 구조화는 해당 민주시민교육 요인이 특정 행위방식과 행위자료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틀을 갖추어 작동되는 양상을, 활성화는 해당 민주시민교육 요인이 피교육자에 의해 주체적으로 직접 실현되는 양상을, 제도화는 해당 민주시민교육 요인을 구조화하고 활성화시킨 민주시민교육 주관 기관 그 자체의 존립과 활동권한 및 기능을 입법과 행정 체계 내부와 세계시민사회 차원에서 국가적 인정 및 국제적 인증을 추구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표 Ⅳ-1〉 민주시민교육 체계구축과 가동방안

	구조화	활성화	제도화
민주주의	• (한국민주시민교육 근간교재1)한국민주시민교육 근간교재 '민주한국사' 편찬 및 보급 • 한국 현대 7대반민주 체제 연구 • 민주발전 유적지 인증위원회 구성 • (우리 안의 민주주의 찾기)시민정치 쟁점선정 및 토론모임	• (민주시민교육 근간강좌)민주주의와 국가의 병행 발전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 근간교재 보급과 확산 • (민주시민교육 기행 프로그램)대한민국 민주발전 유적지 기행과 교육실시	• 학교민주주의의 실행방안(고등학교) • 대한민국 현존민주주의 및 지구민주주의 민주성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민위상	• (한국민주시민교육 근간교재 또는 전태일 프로젝트 1)'시민의 진화: 시민적 위상과 시민적 가치' 편찬	• 민주시민교육 시민회의 및 전국제전 개최: 지역 및 활동영역 단위별	• '대한민국 시민장전: 주권자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제정 추진

	구조화	활성화	제도화
	• (한국민주시민교육 근간교재5)'학교시민의 삶과 모색' • (한국민주시민교육 근간교재6)'시장의 진화와 경제시민의 선택'		
시민성	• (한국민주시민교육 근간교재3)'시민적 능력: 기능과 실천' 편찬 • (한국민주시민교육 근간교재4)'민주시민교육 교수법 대전' • 민주주의 시민문화 네트워킹	• 시민능력 개발관점에서 현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활용방안 개발 • 민주시민문화제 정기화	• '민주적 성취가능도 시민지표(전태일 지표)'의 개발과 적용(전태일 프로젝트 2)
시민실천		• 학교민주주의의 자치적 운영을 위한 교사-학생 공동 연수프로그램 및 전국제전 • '지역 정치인에게 보내는 시민편지 백일장 대회' 개최	
시민교육 체계	• 민주시민교육지원 TF팀 개설 • 민주시민교육 교육실행사(trainer) 연수과정 개설 및 인증서 발급 • 온라인 민주시민교육센터 구축 • 민주시민교육기관 인증제 준비 • 민주시민교육 국제연대 모색	• 민주시민교육 관련 학교수업 및 대학강좌 지원 • 전국 대학생 정치 및 사회참여 경진대회	• 학교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과(군)' 편성 • 지역별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 제정 추진 • '민주시민교육 지원법' 입법화
기대결과	교육실행구조와 관심자 결집	현장 학습자들을 상대로 한 구체적 교육효과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 체계의 국가적 정착

2 ▌ 국외 사례

우리 나라에 앞서 국가와 사회를 운영할 시민들의 민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특유의 민주시민교육을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역사적 과정을 통해 해당 국가와 사회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다루기 위한 주요 주체와 방식, 즉 지원기구와 거버넌스를 형성·발전시켜 왔다. 여기서는 일찍이 민주시민교육을 발전시켜 온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등 4개 국가의 사례를 살펴볼 것인데, 논의의 초점은 공교육 체계가 아닌 시민사회 주체들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관한 지원기구와 거버넌스에 둘 것이다. 각 국가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표 Ⅳ-2〉 각 국가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명칭

국가	명칭
독일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
스웨덴	대중교육(Folkbildning)
영국	시민성교육(Citizenship Education)
미국	시민교육(Civic Education)

독일과 스웨덴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과제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영국과 미국은 학교 밖 민주시민교육을 시민사회 주체들의 자율에 맡기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구와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와 실천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독일

독일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의 중심에는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이 있다. 1952년 설립된 연방정치교육원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주적 의식을 증진하고, 정치적 참여를 위한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주요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출판간행물 등 시민교육을 위한 자료발간이다. 이 사업은 신문과 잡지등과 같은 정기간행물의 발간과 정치교육 관련 서적의 발간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정치교육 관련서적의 발행과 판매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시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 서적들이 발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직까지 인쇄매체가 발간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점차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멀티미디어 형태의 자료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둘째, 시민교육 관련 학술대회나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여기에는 토론 및 실습형태와 같은 성인정치교육 행사지원, 학교 밖 성인교육의 교육자를 위한 재교육 차원의 각종 세미나, 성인 정치교육 세미나에 활용하기 위한 학습자료 출간, 현지답사 등을 포함된다. 셋째, 협력기관·단체의 시민교육활동 지원이다. 매년 재단,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 중 연방정치교육원에 의해 인정을 받은 주체들에게 공공재정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 예산은 자체사업과 협력기관·단체 지원에 4:6 가량의 비율로 집행된다. 한편 연방정치교육원은 학교 밖 시민교육 뿐 아니라 학교 시민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 여기에는 연방주교육부장관회의(KMK)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 배포되는 '정치교육정보' 잡지의 발간이나, 시민교육 담당 교사들을 위한 연수, 시민교육 학생경시대회(Shuler Wettbewerb) 개최 등이 포함된다(조철민 2015).

연방정치교육원은 연방내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원장은 내부무장관이 임명하며, 2016년 현재 270명의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부서에 배치돼 약5천2십만유로(한화로 약6백40억원, 2018년 5월 환율기준) 규모의 예산을 운용해 일상적인 정치교육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6]

16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예산과 직원현황은 다음을 참조. http://www.bpb.de/die-bpb/247066/einnahmen-und-ausgaben; http://www.bpb.de/die-bpb/247071/organisationsentwicklung-der-bpb-2014-bis-2016.

〈그림 Ⅳ-4〉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조직체계

출처: http://www.bpb.de/die-bpb/247810/organigramm.

연방정치교육원은 독일 정치교육의 활성화를 이끄는 중앙집중적 공공기관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교육의 관제화(官制化)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연방정치교육원의 단독적인 노력만으로 전국적인 정치교육의 활성화할 수는 없다. 독일은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정치교육의 정파적·학술적 균형을 이루고, 효과적인 정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왔다. 먼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내부 거버넌스와 관련해 자문·감독기구를 두고 있다. 학술자문위원회(Wissenschaftlicher Beirat)는 시민교육과 관련한 학술적 조언 및 연구지원을 수행한다. 학술자문위원은 연방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최대 9명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1년에 최소 2회 이상의 회의를 열게 된다. 이사회(Kuratorium)는 연방정치교육원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효과에 관해 감독하며, 22명의 연방의회(Bundestag)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사는 연방의회 원내교섭단체들이 의석 비율에 따라 의원들을 추천하며, 연방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연방정치교육원장은 이사회에 매년, 예산, 사업,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7]

아울러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되고 협력하며 시민교육 정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은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된다. 먼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치교육원의 감독기관이자 옹호자인 연방내무부를 비롯해, 다양한 부처들이 소관 주제와 관련해 연방정치교육원과 긴밀하

17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http://www.bpb.de).

게 협력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연방정치교육원장과 연방 부처장간의 정기적인 회합이 제도화 됐다. 이를 통해 정책형성의 목적과 중요성에 관한 견해를 교환한다.

〈표 Ⅳ-3〉 연방정치교육원과 협력하는 연방정부 부처 및 부서들

연방내무부(BMI) Section I 5
연방행정사무소(BVA), Unit II A 8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Unit 502 Youth and Education / Task Force Voluntary Service
가족과 시민의 의무에 관한 연방사무소
연방국방부(MoD)
32
연방교육연구부(BMBF), Department 316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Unit 114
연방이민·난민사무소(BAMF), Unit 322
연방노동사회부(BMAS), Social Europe group GS 2, Transnational measures / XENOS

자료: 연방정치교육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ap-politischebildung.de)

지방차원에서는 각 주(州)마다 주정치교육원(Landeszentral für Politiche Bildung)이 존재한다. 이는 연방정치교육원의 하급기관이라기보다는 지방 차원의 정치교육을 관장하는 협력기관의 성격을 띠며, 16개의 주 중 15개 주에 설치돼 있다.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간의 본격적인 협력관계는 1954년 개최한 합동 컨퍼런스를 계기로 형성됐다. 이 컨퍼런스에서 "연방적 협력관계"가 천명됐고, 교육내용과 방법론, 교육과 관련된 각종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시민교육 관련 정책과정에의 의견개진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이런 관계는 계속 이어지다가, 2001년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 대변인의 연 3회 회동을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사업차원에서 정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조철민 2015).

아울러 연방정치교육원과 시민사회 정치주체들과의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활성화 돼 있다. 연방정치교육원 전체 예산의 약 1/3 가량이 매년 시민교육 주체들에게 지원된다. 연방정치교육원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협력하는 교육주체들을 등록교육단체(Anerkannte Bildungseinrichtungen)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정치재단, 종교 관련 단체, 대중대학(Volks hochchule), 청소년 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이 포함되며 400개가 넘는 주체들이 등록돼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치교육 주체들의 연합체라 할 수 있는 연방정치교육위원회(Bundesausschuss Politische Bildung)가 존재한다. 이 위원회는 학교 밖에서 정치교육을 실행하는 주체들이 모든 연령의 시민들에 대한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됐다. 서로 다른 지향의 조직들이 이 위원회의 틀 안에서 공유하는 목적은 경험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 및 성인 정치교육의 개발과 향상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교육계의 중요성과 그것에 대한 공적지원과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한다.[18]

18 연방정치교육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ap-politischebildung.de).

〈표 Ⅳ-4〉 연방정치교육위원회의 유형별 회원조직

정당	기독교민주당(CDU), 기독교사회당(CSU), 사회민주당(SPD)
정치재단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e.V.),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테오도르-호이스 아카데미, 한스자이델재단(e.V.), 하인리히뵐재단(e.V.), 콘라드아데나워재단(e.V.)/지역시민교육
직능단체	연방작업집단 '노동과 삶', Ver.di 유나이티드, 서비스노동조합(e.V.), 독일군대협회(e.V.), 독일시민봉사연맹: DBB 공무원연합, 연방군대/예비군협회(e.V.)
기독교계	전국카톨릭사회교육연구회(AKSB e.V.), 독일개신교성인교육협회(DEAE), 독일개신교아카데미(EAD e.V.), 독일카톨릭성인교육(KEB Deutschland)
교육기관	민주교육연구회(ADB e.V.), 독일교육시설협회(AdB e.V.), 독일시민교육협회(e.V.), DGB교육활동(e.V.), 독일성인교육협회(e.V.), 유럽아카데미협회(e.V.), 동서연구소/정치작업집단학교협회(e.V.), 농촌지역훈련센터협회(e.V.)
기타	독일청소년연맹(e.V.), 자연의 친구들 독일지부(e.V.), 협동재단, 독일전몰자묘소위원회(e.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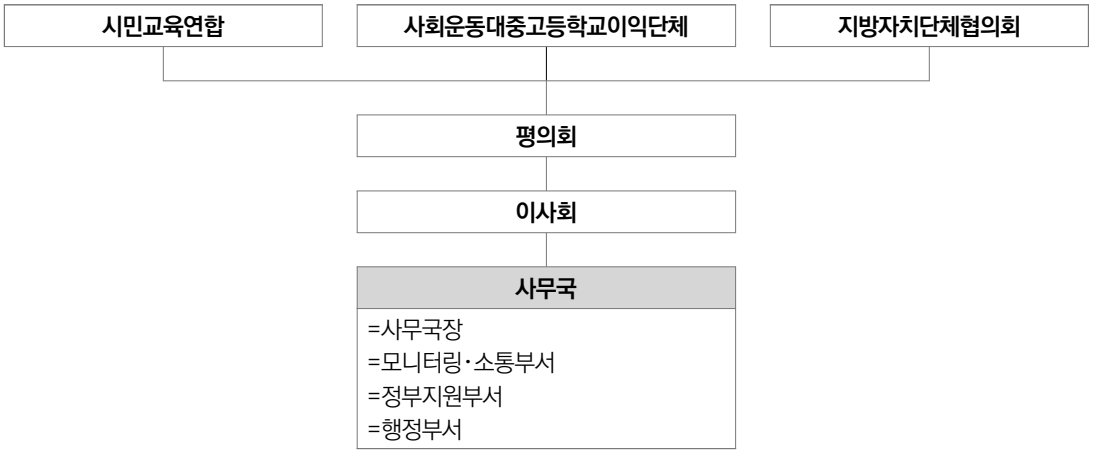
주: e.V.는 등록법인을 의미함.

2) 스웨덴

스웨덴에서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대중교육(folkbildning)이라 할 수 있다. 대중교육의 출발은 교육에서 소외된 광범위한 계층이 배움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후 대중교육은 모든 시민의 지식과 발전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로 자리잡아 왔다. 그리고 대중교육의 논의와 실천의 중심에는 대중교육위원회(FolkbildningStådet)라는 지원기구가 있다. 스웨덴 정부는 전통적으로 시민사회 주체들이 실행하는 대중교육을 지원해 왔지만, 1990년대 들어 나타난 경제위기와 보수적 정권의 정책지향에 따라 대중교육 지원기능이 민영화 되는 과정에서 대중교육위원회가 설치됐다. 대중교육위원회는 정부와 의회가 대중교육 지원업무를 총괄 위임한 기구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이 보장된다. 더불어 이 위원회는 활동과 예결산 보고서 등을 정부에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조철민 2015).

1991년 설립된 대중교육위원회는 2016년 현재 사무국장을 비롯한 27명의 직원이 약41억5천9백만크로네(한화로 약5천1백5십2억원, 2018년 5월 환율기준)의 예산을 운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중교육위원회의 역할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대중교육을 실행하는 기관·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의 집행이다. 대중교육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은 '대중교육보조금에관한규정'(Forordning om statsbidrag till folkbildningen)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대중교육 지원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으로 조성되며, 대중교육의 주요 주체인 학습단체(studieförbund)와 고등대중학교(folkhögskola)의 교육활동에 지원되며, 지원현황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대중교육위원회는 보조금 지원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실행한다. 여기에는 보조금의 잘못된 사용을 예방과 법규준수, 위원회 예산사용에 관한 정부보고, 대중교육의 실태에 관한 조사와 대중교육 기관·단체 지도방문 활동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도 대중교육위원회는 3개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대중교육 지원정책 및 실행에 관한 평가와 대중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공공성을 지닌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 활동, 대중교육 관련 소통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9]

〈그림 Ⅳ-5〉 스웨덴 대중교육위원회 조직체계



대중교육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는 평의회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1년에 2차례의 정례회의가 개최된다. 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는 이사회다. 이사회는 3대 회원조직에서 지명된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은 대중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 총괄책임자인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대중교육위원회는 대중교육을 실행하는 주체들의 연합체인 3대 회원조직의 민주적 거버넌스에 기반 해 운영되는 비정부·비영리기구의 성격을 지닌다. 스웨덴 대중교육을 실행하는 주체는 학습단체(studieförbund)와 대중고등학교(folkhögskola)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조철민 2015). 학습단체는 시민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단체들로, 이중 대중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학습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물론 정부 보조금이 유일한 재정원천은 아니다. 학습단체의 구성요소는 8~12명의 시민들로 구성되는 학습동아리(studiecirklar)다. 학습동아리는 스웨덴에서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육의 형식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해 함께 학습하는 형태다. 비슷한 지향을 지니는 학습동아리들이 모여 지역단위의 학습단체가 구성되고, 각 층위의 학습단체들이 모여 전국단위 학습단체를 이룬다. 현재 대중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10개의 전국적 학습단체가 활동 중에 있다.

〈표 Ⅳ-5〉 스웨덴 전국단위 대중교육 학습단체

유형	단체	설립년도	설립배경
정치적 배경	노동자교육협회(ABF)	1912	노동자 교육
	시민학교(Medborgarskolan)	1940	보수적 사회개혁운동
	성인교육협회(SV)	1967	농민당, 국민당
종교적 배경	학습단체 '도야'(Bilda)	1947	자유교회 운동
	학습단체 '의미'(Sensus)	1930	종교교리에 입각한 시민교육
	학습단체 '이븐 르슈드'(Ibn Rushd)	2001	이슬람 운동
사회운동	금주절제운동교육단체(NBV)	1947	금주절제운동

19 http://www.folkbildningsradet.se/publikationer/rapporter/Rapporter-till-regeringen.

유형	단체	설립년도	설립배경
	학습진흥(Studiefrämjandet)	1959	환경운동
교양·문화	대중대학(Folkuniversitet)	1942	대중대학
	'문화'(Kulturens)	2010	아마추어 문화활동

출처: 최연혁 2010, 수정인용.

대중고등학교는 덴마크의 그룬트비히(Grundvig)에 의해 주창된 대중고등학교 운동의 흐름을 받아들여 1868년에 최초로 3개의 학교가 설립됐다. 대중고등학교는 성인고등교육기관으로 18세 이상의 성인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성인반, 대학교 진학을 위한 성인반, 문화예술체육 계통의 특화교육 등이 개설돼 있다. 현재 전국에 154개의 대중고등학교가 설립·운영 중에 있는데, 이중 약 2/3 가량이 시민사회단체나 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다양한 철학과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된다.

대중교육위원회는 3대 회원조직의 협의를 통해 운영되는데, 여기에는 '대중교육연합'과 '사회운동대중고등학교이익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협의회'라 할 수 있다. 대중교육연합[20]은 학습단체들의 연합체로 1903년에 공공 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들은 대중교육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도록 노력하고, 대중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권익주창 활동을 펼친다. 사회운동대중고등학교이익단체[21]는 시민사회단체 및 재단이 운영하는 대중고등학교를 대표하는 연합체다. 1963년 48개 학교가 참여해 결성한 사회운동대중고등학교협회가 그 효시가 된다. 지방자치단체협의회[22]는 43개 대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 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명은 회원 대중고등학교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련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인 자문 등이 포함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인 사항은 법령에 따르고, 나머지 사항은 재량에 따라 운영한다.

3)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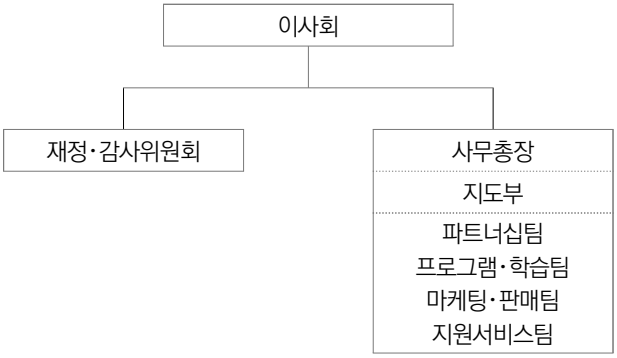
영국과 미국의 경우 스웨덴이나 독일과 달리 대표성과 공식성을 띤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 밖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시민사회 주체들의 자율성에 맡기며,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의 거버넌스 형태를 형성해 왔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은 시민성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업참여, 견학 등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과 밀착된 민관 파트너십으로 운용된다. 공교육 체계 밖에서 시민성 교육 관련

20 http://studieforbunden.se
21 http://www.rio-org.se
22 http://www.skl.se

활동을 펼치는 주체들에는 크게 시민교육단체, 민간단체, 대안학교 등이 포함된다. 이중 시민교육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영국의 시민교육은 내용, 교수법, 평가방법 등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영국의 교육제도에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통교과서가 없으며, 이는 시민교육 교과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민교육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학교와 교사의 자율과 역량에 맡겨진다. 그래서 시민교육 교과목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이해를 돕고, 시민교육 교과의 구체적인 내용, 교육방법,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민간단체들이 설립되었다(송주영 2015).

영국의 경우 제도적으로 공식성을 띠는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영국에서 시민성 교육 관련 민관협력 활동을 펼치는 대표적인 시민교육단체인 시민성재단(Citizenship Foundation)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23] 시민성재단은 1984년 사무변호사(solicitor)였던 앤드류 필립스(Andrew Philips)가 실시했던 '교육에서의 법(Law in Education Project)'이라는 연구프로젝트에서 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법적 권리와 책임, 법의 역할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교재개발의 목적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1989년 시민성재단이 설립됐다. '자신의 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민주적인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성 재단은 재단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trustee, 11명)와 시민성 교육 활동을 실행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팀장들이 배속된 지도부와 4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고, 25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2016년 현재 1백7만2천492파운드(약15억4천4백만원)다.[24]

〈그림 Ⅳ-6〉 영국 시민성재단 조직체계



시민성재단은 강하고 안전한 민주주의에 기반 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하며,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안에서나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업과의 협력사업, 컨설팅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23 2018년 시민성재단은 명칭을 주된 활동 주제인 청소년 시민성을 부각한 '젊은시민'(YoungCitizen)으로 바꾼바 있음. 여기서는 국내에서 좀 더 친숙한 기존 명칭인 시민성재단으로 부르기로 함.

24 https://www.youngcitizens.org/Handlers/Download.ashx?IDMF=5c1123a5-20fc-47a6-be37-f99fc2f35a71.

〈표 Ⅳ-6〉 영국 시민성재단의 활동 내용

활동영역		내용
교육	시민성 훈련 (Citizenship Experiences)	• 민주주의 친선대사(Democracy Ambassadors):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젊은이들과 접촉하는 활동으로 13~16세 청소년들이 참여함. 내무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에게 교육연수와 민주주의에 관한 개인간의 대화, 온라인 대화 등을 통한 교류의 기회가 주어짐. • 학교에 온 전문가(Expert in School):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교실에 배치돼 민주주의와 관련된 개념들에 관해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전해 주는 프로그램임.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산업별 기술을 활용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 간 생산적 협력관계를 구축함. • 학생 워크숍(Student Workshop):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의견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법률 워크숍은 학생들이 변호사 실습을 통해 변론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브렉시트(Brexit) 워크숍은 학생들이 법률 전문가 및 존경받는 학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영국이 유럽 연합을 떠날 때 현재 협상중인 분야들을 조사함. 전문가들은 토론 세션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토론 및 토론에 참여시키고 협상 과정에서 영국에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 •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 젊은이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임. 사회적 행동은 개인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 국가 또는 국제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의미함. 활동내용에는 삶을 개선하고 불평등이나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시간과 기타 자원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됨. 활동방법은 자원봉사, 인식개선, 지역사회조직, 사회적 기업 또는 단순한 이웃 나눔 등 다양함. • 모의재판(Mocking Trial): 사법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법원에서 사건을 설정해 모의재판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임. 여기에는 12~14세 청소년을 위한 치안판사 모의재판, 15~18세 청소년을 위한 법정변호사 모의재판과 사립학교 모의재판 등이 포함됨.
	교사지원	• 교육자료 발간(Teaching Materials): 브렉시트, 소셜미디어와 법, 나눔감수성, 법, 경제, 정치와 민주주의, 다양한 논쟁적 이슈 등 • 교사연수(Teacher Training) • 기준설정(Raising standards): 어린이를 위한 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학습(SMSC learning) 등 교사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 및 모델 프로그램 개발·제공.
기업과의 협력		• 에너지, 미디어·예술·연예, 법률, 재정·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기관의 재정후원 및 학교로 간 전문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자원봉사 활동 등
컨설팅		• 시민성교육 관련 다양한 기관·단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전문가, 교사, 교육 컨설턴트, 강사 등 다양한 인적자원에 기반 해 의뢰한 기관·단체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 아울러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같은 국제기구나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컨설팅 역량을 높이고 있음.

출처: 영국 시민성재단 홈페이지(http://www.youngcitizens.org).

4) 미국

미국의 시민교육 운영체계는 일반적으로 '학교 내'의 교과과정으로서 시민교육과 '학교 밖' 시민사회 영역의 시민교육으로 구분된다. 또한 시민교육은 연방이나 주정부 소속의 기관이 직접 주도하지 않고 시민단체 같은 다양한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미국의 시민교육이 연방이나 주정부 소속의 기관이 직접 주관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데도 시민교육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비정부기관, 즉 시민단체의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진행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의 협조가 미국 시민교육의 특징이다. 시민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은 분야별

시민교육과 보편적 시민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분야별 시민교육은 환경·생태, 노동, 인권, 여성 등과 같이 시민단체가 속해 있는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며, 이러한 분야별 교육에 시민(성)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해 보편적 시민교육이란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즉, 시민참여, 민주주의, 공공성, 시민적 덕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교육을 보편적 시민교육이라고 하며, 시민단체의 시민교육이라 할 때 보편적 시민교육을 지칭한다. 보편적 시민교육을 주관하거나 운영하는 시민단체들은 △시민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교육에 중점을 두는 시민단체 △청소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리더십, 활동, 및 정치참여에 중점을 두는 시민단체 △커뮤니티 자원봉사를 시민교육으로 보고 봉사학습에 중점을 두는 시민단체 △국제적으로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활동에 중점을 두는 시민단체 등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미국의 시민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정부기관, 다양한 시민단체, 및 후원재단 등이 서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학교 시민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즉, 학생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교과과정인 시민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인적네트워크를 조직한다. 이에 시민단체와 학교사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사이의 파트너십과 지역사회의 협조 등이 미국 시민교육의 주요한 특징이다(이광훈 2015).

미국 역시 영국의 경우처럼 제도적으로 공식성을 띠는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는 미국에서 시민성 교육 관련 민관협력 활동을 펼치는 대표적인 시민교육단체인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적 조직인 시민교육센터의 기원은 1965년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대학(UCLA)에서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설립된 학제간위원회(Interdisciplinary Committee on Civic Education)이다. 1969년에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협력해 운영되다가, 1981년 독립적 비영리단체로서 센터가 설립됐다. 이들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주마다 지부들이 있거나 학교나 법조계 또는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협력하고, 시민교육에 대한 국가적 표준이나 평가제도 등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주교육법(Education for Democracy Act of 2001)에 따라 시민교육을 실행하는 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시민교육센터 역시 연방정부로부터 많은 부분 재정지원을 받고, 그 외에도 주정부나 기업 등의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민주주의 원칙에 헌신하고 민주주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계몽 된 책임감 있는 시민의 육성'을 사명으로 활동하는 시민교육센터는 조직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운영 및 활동에 조언을 제공하는 전국자문위원회(National Adversary Committee),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국은 사무총장을 비롯한 15명의 직원들이 3백만8천3백93달러(한화로 약32억4천6백만원)의 예산을 운영해 일상적인 시민교육 활동 및 조직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5] 사무국의 조직체계는 사무총장과 부총장으로 구성된 임원단과 우리시민(We the people)프로그램, 시비타스(Civitas)국제프로그램, 메디슨유산(Madison Legacy)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별 담당자와 전문성개발, 중국권역사무

25 시민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한계로 예산은 2013년도의 현황을 기재했음.

소, 프로그램행정/재정, 정보기술, 출판 및 디지털 콘텐츠 등 운영관련 담당자들로 구성돼 있다. 시민교육센터는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법 제정과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7〉 미국 시민교육센터의 활동 내용

국내 프로그램	우리시민(We the People) : 시민과 헌법	• 시민교육센터의 기초 프로그램으로 헌법과 권리장전을 통해 미국의 역사, 헌법의 원리와 가치,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학습함. 아울러 학생들이 공적역할을 체험하고 평가해보는 모의의회나 청문회 경연대회도 개최됨. 경연대회는 지역과 전국단위로 열림.
	프로젝트 시티즌 (Project Citizen)	• 중고등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과 과정으로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참여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임. 프로젝트 시티즌은 학생들이 공공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프로젝트를 스스로 만들고 진행하도록 고안됐음. 이 과정을 통해 민주적 가치와 원칙, 관용, 정치적 효능감을 개발함.
	미주에서의 대의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in America): 시민의 목소리	• 정부와 국민 사이의 중요한 관계에 대해 학습하는 프로젝트임. 시민을 위한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는 정치인, 기관 및 행정절차에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프로젝트는 인디애나대학교 의회센터, 주의회전국협의회 등과 협력에 기반 해 진행됨.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교실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자료 제공, 시민교육 홍보를 위한 캠페인 미디어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홍보 등이 포함됨.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School Violence Prevention Demonstration Program)	•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시민 교육 및 그룹 참여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학생들이 시민적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됐음. 커리큘럼을 지원하고 비판적 사고, 협동 학습, 그룹 문제 해결 및 성과 중심 평가를 강조하는 교사 참여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함.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관용에 관한 시민적 지식과 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제공함.
	방관자가 아닌 시민 (Citizens, Not Spectators)	• 다른 시민교육단체들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유권자 교육 프로그램임. 4~12학년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유권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미국인들에게 투표율을 높이고자 함.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투표방법, 투표 프로세스 작동 방법, 정보에 입각 한 유권자가 되는 방법, 개념 있는 투표의 주요성 등을 설명함. 교육내용은 실습, 적극적인 학습에 중점을 둠. 실제 유권자 등록 양식과 투표용지를 사용해 모의 선거에 등록하고 투표 방법을 학습함.
	제임스 매디슨의 유산 프로젝트 (James Madison Legacy Project)	• 2,025명의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해 고도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를 육성하고, 시민교육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자 함.
	시민교육 활성화 캠페인	• 시민교육 교사 시상식 • 헌법의 날 행사 및 계기수업 지원 • 흑인 역사의 달과 여성 역사의 달 계기수업 •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 캠페인 네트워크 구축
국제 프로그램	시비타스 국제 프로그램 (Civitas International Program)	• 민주적 자치를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가진 관여적 시민을 육성하고자 함. 전세계에서 시민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시하는 기관과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자료 제공, 교육연수, 컨설팅, 네트워킹, 교육정책 입안자에 대한 권고 등을 진행함.
	국제 교류활동	• 각 주별 기관·단체와의 협력 • 시민교육 지원 및 네트워킹: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이란, 몽골 등
연구 및 평가	조사·연구	• 시민교육 내용개발을 위한 연구, 시민적 역량, 정치지식 등에 관한 측정 및 현황조사,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등을 수행.
	교재발간	• 각종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재,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제공.

3 ▌ 국내 사례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전쟁, 군부독재 등의 현대사의 굴곡을 거치면서, 시민교육은 주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활동들에 의해 그 본질적인 지향과 내용이 형성되고 발전돼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적인 지향과 내용이 학교와 공공기관 등 제도권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1997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의 5가지 인간상 중 하나로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 설정되고,[26] 같은 해 제정된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이념으로 '인격의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함양이 명시됐다.[27] 한편 공교육 과정 외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제도화가 계속해서 좌절되는 사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의제별 교육들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먼저 1999년에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2007년에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의 6가지 영역 중 하나로 '시민참여교육'이 포함됐다.[28] 이후 환경교육진흥법(2008), 법교육지원법(2008), 경제교육지원법(2009), 인성교육법(2014) 등이 통과되면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의제별 교육의 제도화가 활성화 되다가, 최근 들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폭넓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논의가 다시금 활성화 되고 있다. 또한 개별 법령이 없더라도 양성평등교육, 유권자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을 띠는 교육의 진흥 및 실행을 정부 부처나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29]

한국의 경우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사회적 중요성과 공공성을 띤 교육업무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부가 담당하고, 해당업무를 관련 지원기구를 설치해 전담토록 하는 방식이 일반화 돼 있다. 각 지원기구의 위상과 활동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관련 교육의 지원업무는 각 지원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교육과 관련한 거버넌스 체계는 각 지원기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 가운데, 관련된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및 활동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전국적인 수준과 규모의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대표

26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음; ①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⑤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27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8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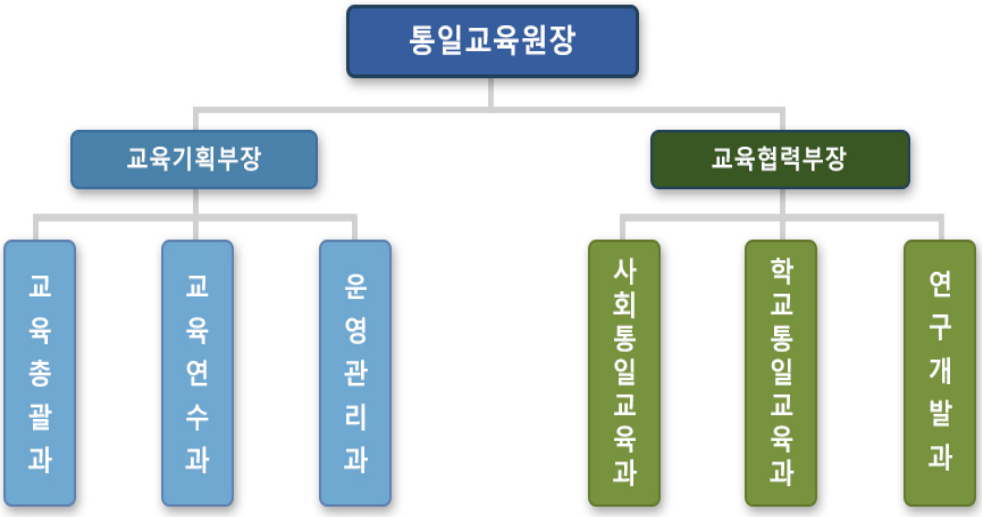
29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들이 포함될 수 있음; 인권교육(국가인권위원회), 민주적 토론교육(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권자교육(선거연수원), 시민의정연수(국회 사무처 의정연수원), 청렴교육(국민권익위원회), 자원봉사교육(사회복지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과거사 교육(과거사 관련 위원회), 국제이해교육(국제이해교육원), 산림교육(산림청), 습지보전 교육(습지보전법 시행령), 자연보호 교육(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에너지 교육(산업자원부), 재활용 교육(한국환경자원공사), 해양생태교육(해양수산부), 환경오염방지교육(환경관리공단), 환경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환경분쟁조정법), 양성평등교육·가정폭력 예방교육·성매매예방교육·성희롱예방교육(양성평등교육진흥원),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 국민신탁 교육(문화관광부), 향토문화교육(지방문화원진흥법),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국가보훈처).

적인 지원기구들인 통일교육원, 선거연수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5개 기구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및 지원기구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은 1972년 설치된 통일연수소로부터 유래하며, 1996년에 발족했다. 통일교육지원법과 통일교육원기본운영규정에 근거에 운영되는 통일부 산하기관이다.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통일교육원이 그 지원과 실행을 전담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은 원장 이하 73명의 직원이 258억7천4백2십만원 가량의 예산을 기반으로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30] 통일교육원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Ⅳ-6〉 통일교육원의 조직체계



출처: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www.uniedu.go.kr).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제반 계획 수립·조정·실시 및 평가, 통일교육지침 개발 및 보급, 통일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수립 및 개선, 통일교육전문인력 육성, 사회통일교육 및 학교통일교육,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관리, 통일교육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평가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30 예산규모는 통일부 의 '통일교육추진'과 '통일교육원시설운영' 항목의 2016년도 예산을 합한 것임.

〈표 Ⅳ-8〉 통일교육원의 활동 내용

통일교육 정책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통일교육주간 행사, 통일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사회 지도층의 준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 제고
	통일정책지도자과정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통일기획과정	정부의 통일준비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전문인력 양성
	통일교육 전문강사과정	각급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강사 양성.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 사회통일교육 전문과정, 이수자 연찬반으로 구성.
	평화통일기반구축과정	통일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능력 배양, 가치관과 공직태도 확립. 통일공무원반, 중견간부공무원반, 중견실무공무원반, 접경지역지자체공무원반, 경기도통일아카데미반, 정훈장교반, 보안경찰반, 타교육기관 연계과정으로 구성.
사이버교육	학점인정 과정	통일문제연구, 북한의 정치와 사회
	교육교원과정	통일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원 역량 강화
	공무원·일반인과정	공무원·일반인 대상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북한방문 안내교육	북한방문 관련 중등교장·교감반, 중등교사 장기반, 중등교사 기본반, 중등교사 자유학기제반, 통일교육연구학교 교사반, 초등교장·교감반, 초등교사반, 유치원교사반, 장학관(사) 및 교육연구사반, 교원연수원 통일교육운영자반, 예비교사반제도 및 절차, 지식·정보 등을 제공
학교통일 교육	교사교육	중등교장·교감반, 중등교사 장기반, 중등교사 기본반, 중등교사 자유학기제반, 통일교육연구학교 교사반, 초등교장·교감반, 초등교사반, 유치원교사반, 장학관(사) 및 교육연구사반, 교원연수원 통일교육운영자반, 예비교사반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학교의 요청에 따라 강사가 방문 강의
	대학 옴니버스 특강 / 통일·북한강좌 지원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통일교육의 체계화 유도.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제고 및 통일교육 저변 확대
사회통일 교육	통일교육위원반	통일교육위원의 북한·통일문제 인식 및 활동역량 강화
	민주평통자문위원반	민주평통자문위원의 북한·통일문제 인식 및 활동역량 강화
	통일 관련 단체반 / 종교단체반	사회 諸분야 여론형성층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및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 제고
	대학생반 / 청소년반	대학생, 청소년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식 고취, 통일미래세대 육성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글로벌교육	재외동포반, 재외동포 유학생반, 외국대학생반, 주한유학생반, 해외신진학자 초청교육반	
통일관 운영	오두산통일전망대 및 지역 통일관 지정·운영지원	
통일의식 증진	통일리더캠프	초등학생캠프, 중학생캠프, 고등학생캠프, 대학생캠프, 특별캠프, 마무리캠프
	어린이 기자단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통일을 주제로 한 기사 작성, 통일 관련 현장체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
연구개발	통일교육 교재 개발·지원	통일문제 이해, 북한이해, 각종 통일교재, 공감영상,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통일달력, 탈북민 및 취약계층 교재 등
	연구·조사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년간),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교육청)

출처: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www.uniedu.go.kr).

통일교육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통일교육원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통일교육의 확산과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다양한 협력주체들이 발굴되고 협력활동이 시도돼 왔다. 통일교육 거버넌스는 크게 학교와 시민사회 주체들과의 협력관계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학교 영역에서는 초중등학교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모델을 개발해 일반학교에 확산하고, 통일교육 거점학교로 지정 및 지원하는 '통일교육 연

구학교', 대학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의 모델 개발 및 실행을 담당하는 거점 대학교 지정 및 지원하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그리고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연구소들의 협의기구인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협) 의 활동지원 및 정책·연구 관련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사회 영역과의 거버넌스는 주로 각 지역과 영역별 통일교육의 전달체계 구성에 민간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통일교육민관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협의기구를 통해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 첫째, 통일교육민관협의회는 통일교육 관련 민관 주체들의 정례적인 협의기구로 민관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학교 관계자, 관련 학계 인사, 국회 전문위원 등 26명으로 구성됨. 통일교육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이나 통일교육 지침서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둘째, 지역통일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도록 통일부장관이 지정해 전국에 13개의 지역통일관이 위탁 운영 중에 있다. 셋째, 통일교육위원은 통일부 장관의 위촉으로 통일교육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외에서 1,063명의 통일교육위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이들은 전국조직인 통일교육위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넷째, 통일교육단체들로 이들의 통일교육 활동에 대해 통일교육원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교육단체들은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원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다. 현재 중앙센터와 16개 시도에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해 위탁운영 중에 있다—경기도의 경우 2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운영 과정에는 지역별 통일교육위원협의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별 통일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9〉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활동내용

기본사업	열린통일강좌	지역주민들이 통일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북한 등 다양한 소재로 토크쇼, 팀티칭, 토론식 시민강좌, 학부모 교육, 인문학 강좌, SNS 연계 강좌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지역센터·지자체·지역언론사 등과 협업을 통한 공동기획 장려)
	통일순회강좌	학생 및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유발 및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
	통일체험학습	지역주민 및 대학생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분단현장 방문 등 체험형 통일교육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전문가 포럼	통일교육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진작, 통일담론 창출, 지역통일교육 선도 등을 위해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별로 워크숍 및 전문가 포럼 개최
자율사업	지역 사회 통일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역문화 축제와 연계하거나 문화공연·경진대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실시(지자체,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신문·방송 기획기사 보도 등 홍보도 병행)	

출처: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www.uniedu.go.kr).

2) 선거연수원

선거연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선거연수원운영규칙에 근거에 1996년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기관이다. 선거연수원은 선거관리 공무원, 선거·정당·정치자금관계자를 위한 연수와 함께 선거권자(장래선거권을 갖게 되는 자 포함)들의 주권의식 앙양 및 공명선거의 실현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 연수활동의 수행은 원장 이하 52명의 직원들이 189억3천2백만원가량의 예산을 토대로 이루어진다.[31] 선거연수원의 조직체계는 [그림 Ⅳ-7]과 같다.

〈그림 Ⅳ-7〉 선거연수원의 조직체계

출처: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

선거연수원의 주요업무는 선거 관련 공무원, 정당관계자들에 대한 선거관리 업무교육, 시민과 청소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선거연수원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표 Ⅳ-10〉과 같다.

〈표 Ⅳ-10〉 선거연수원의 활동내용

직무교육	기본과정		신임실무자과정, 신임관리자과정
	전문과정(필수)	보직역량	선거관리실무과정, 법규운용정치자금실무과정, 조사단속실무과정, 홍보공보실무과정
		직무역량	법규역량과정, 법규역량전문과정, 절차사무과정, 투표지분류기운용과정, 정치자금조사과정, 사이버조사과정, 디지털포렌식과정, 미디어과정, 미디어전문과정, 회계사무과정, 선거방송토론과정, 토론전문과정, 위탁선거과정, 감사사무과정, 공무원인사과정, 선거여론조사과정, 선거보도심의과정, 역량평가과정
		리더역량	시·도과장리더십과정, 사무국장리더십과정, 사구과장·담당관리더십과정
	전문과정(선택)		인문교양과정, 제도연구과정, 전략기획과정, 직무교육강사양성과정, 미래설계과정

31 예산규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정착' 항목의 2016년도 예산 기준임.

민주시민교육	선거·정당연수	정당 사무처 간부 연수	선거 대비 정치관계법 이해를 통한 준법선거분위기 조성, 정당사무처 간부 등의 역량제고를 통해 건전한 정당 발전에 기여
		당원연수	선거 대비 정치관계법 안내를 통한 준법선거분위기 확산, 건전한 정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당원의 역할 제고
		정치아카데미	체계적 선거정보 제공을 통한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 선거운동 운용기준 및 정책선거 안내로 입후보예정자 등 역량 제고
	일반 유권자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정치·사회지도자 양성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 견인, 선거·정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아카데미 정착
		여성정치참여연수	여성의 주권의식 함양 및 정치적 관심 제고, 여성의 적극적 정치참여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사회 기반 구축
		교원연수	여성의 주권의식 함양 및 정치적 관심 제고, 여성의 적극적 정치참여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사회 기반 구축
		시민사회단체회원 등 연수 (선거강연 포함)	선거 적극적 참여 분위기 조성, 유권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가치 확산, 지역기관·단체 강의를 통한 동네 민주주의 실현 기반 마련
		청년지도자 정치캠프	참여·실천형 연수 실시로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이수자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지도자 성장 유도
		대학생 학점인정과정	선거·정치제도의 체계적 학습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및 현장 견학을 통한 이해 제고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대학생 정치참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대학생 민주시민 지식 함양 및 능동적 선거·정치참여 유도
		가족참여민주시민 캠프	일반 유권자 등의 시민성 함양 및 시민교육의 중요성 공유, 가족 참여를 통한 생활 민주주의의 실천력 제고
	미래 유권자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민주국가·민주사회에 공헌할 건전한 리더 양성, 선거절차 및 정책과정의 체험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 체득
		청소년리더연수	미래유권자의 건전한 선거·정치 참여 실천의지 배양,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민주시민의식 훈련
		새내기유권자연수	새내기유권자의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바람직한 정치참여방법 습득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민주주의 선거교실	민주주의 주요 가치 이해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제고, 미래유권자의 올바른 주권의식 함양
		기관 등 협업 선거교실	역사·문화·법률·환경·통일 등 다양한 전문 콘텐츠 보유 기관과의 협업,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
	한국사회 정착 도움과정	다문화가족연수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선거·정치 참여의식 증진,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 이해를 통한 한국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
		북한이탈주민연수	북한이탈주민 대상 민주시민의식 함양,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 이해를 통한 한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
	민주시민 교육 전문강사 과정	민주시민교육강사 양성과정	전문 강사요원 발굴·양성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기반 확충, 전문분야별 우수 강사요원 확보 및 강의 역량 제고
		민주시민교육강사 역량 심화과정	강사의 전문성 제고로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유권자 대상 선거강연 및 사회적 약자 연수 등 대비 강의역량 배양
사이버교육	민주시민 교육	공정선거지원단 과정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한 이해 증진, 개표사무 관계자의 개표 사무 능력 제고
		투·개표과정	동시지방선거 투·개표사무 관계자(일반인)
		공직선거법 등 이해과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이해,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세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수강신청 등 절차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개강좌로써 접근성·활용성 극대화
		평생학습 협력과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온라인공개강좌를 활용한 직원 자기개발 지원, 민주시민교육 콘텐츠의 협력기관 운영으로 국민 접근성 향상 및 확산

	직무교육	정치관계법	공직선거법과정, 정당법·정치자금법과정
		실무	선거관리실무, 법규운용실무, 조사실무과정, 홍보 및 방송토론실무과정
		일반행정	행정역량과정, 소양교육과정, 청렴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과정, 안보·안전교육과정
		정보화	행정정보화과정, 정보보안과정
		외국어 교육	온라인 외국어교육과정, 전화외국어과정
		유관기관 공무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정
		열린학습	공직선거법 등 열린학습
		협력기관학습	평생학습 협력과정
교육기획		교육기획·성과관리·대외협력, 민주시민교육계획 수립·평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제도연구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등 연구·분석	

출처: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

선거연수원은 큰 규모의 조직과 예산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 전국의 광역과 기초수준의 자치단체별로 설치돼 있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을 통해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의 업무수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선거연수원의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르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 추진체계 구축'이 명시돼 있고, 이를 위한 세부사업들이 다음과 같이 설정돼 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 추진기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체와 연계한 거버넌스 구축, 민주시민교육 다각화를 위한 간접지원체제 마련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사)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본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사)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와 같은 단체들은 선거연수원과 긴밀하게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 토대 조성을 위해 학회·단체 및 평생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한 참여형 연수 실시, 생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 선거·정치 블로그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공감대 확산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협력수행을 위해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2010), 명지대학교 법과대학(2012), 한국교육개발원(2015), 양성평등교육원(2016), 유네스코아태교육원(2017)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주시민교육학회와는 활발한 학술적인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전문 인력 양성으로 내·외부 초빙교수의 체계적 운영 및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외부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전문가 및 전문 강사 인력풀확충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3)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에 2002년 개설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남녀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기반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법인의 성격을 띠며, 원장 이하 69명의 직원들이 689억3천6백만원가량의 예산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조직체계는 주요 정책사항의 의사결정, 합리

적 의견제시와 경영견제 등을 위해 경영감독, 경영자문 등을 수행하는 이사회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국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Ⅳ-8〉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조직체계

출처: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gepe.or.kr).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업무에는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등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Ⅳ-11〉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활동내용

연구개발	교육과정 체계화·평가 및 행정,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기관·사업홍보, 기관 SNS 채널 운영, 콘텐츠 공유·협력, 콘텐츠 기획·구성, 자유학기제 지원, 양성평등 콘텐츠 전국공모전	
경영기획	예산, 경영기획, 정보보안,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규정, 경영공시, MOU, 개인정보보호, 성과관리, 윤리경영, 대외협력, 이사회, 감사, 계약, 구매, 시설, 보수, 복무, 회계, 총무, 직원교육 훈련, 인사, 출납	
성인지 정책교육	성인지력향상 과정	공공정책의 수행자로서 공무원의 성 평등한 인식과 역량 강화, 정책실행의 과정에서 성인지적관점의 중요성과 효과를 인식, 공공분야 성평등 의식 확산 기여
	양성평등정책 교육	정책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성인지적 정책기획 및 수행의지 강화, 내 삶의 질을 바꾸는 생활체감형 일·가정양립 및 양성평등정책 실천역량 강화
	성별영향분석 평가교육	정책과 사업의 성별 조건을 고려, 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젠더이슈 파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능력 함양,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법령, 예산, 사업 내용 및 수행방식 등에서의 정책개선 및 환류방안에 대한 실행력 강화
	성인지예결산	정책과 사업의 예결산 업무 시 성인지 관점 수행능력 제고로 성인지예결산 제도의

	및 통계교육	조기 정착, 성인지예결산제도의 내실화 및 공감대 형성 및 성인지통계 생산,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성 함양
	국외교육	국외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으로 양성평등정책 수립과 이행 역량 지원
	남부센터 운영	남부지역 현실과 요구에 부합하는 성평등 교육 제공, 남부지역 여성의 역량강화, 남부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남부지역 성평등 의식 확산의 중추적 기관으로 인식 제고
양성평등 사업	양성평등 미디어상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방송·보도부문의 양성평등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을 통해 언론인을 격려하고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 성차별 요소를 배제한 양성평등한 방송/보도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 및 실천의식 제고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 상의 성차별, 여성비하, 폭력 등을 조장하는 부정적 사례 발굴, 시정 추진을 통한 양성평등 미디어 환경조성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	양성평등 가치를 반영한 디자인 공모 및 활용을 통한 생활문화 속 양성평등의식 확산 및 실천 도모
	양성평등학교 운영지원	양성평등교육 교재의 현장 적용 및 학교별 양성평등 교육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양성평등 교육 운영사례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양성평등의식 확산, 양성평등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의식 저변 확대
국외사업	국외교육	MOU협약기관 대상 성평등정책, 리더십 역량강화 국별연수, 성평등정책역량강화, 양성평등정책 국제기구(UNDP, KOICA 등) 협력 맞춤형 교육
	국제심포지엄	국내외 젠더전문가를 초빙하여 인권, 젠더 분야의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
전문강사 양성과정	성평등 관점에 기반 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기반폭력 예방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교육대상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기획,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 함양 교육과정: 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 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강사양성과정, 강사역량강화과정	
여성역량 강화	여성인재 아카데미	유능한 여성인력이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여성인재풀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분야별 여성 전문가를 발굴하여 여성인재DB에 등록·관리하여 여성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및 활용 도모
사이버 교육	원격교육 연수원	각급 학교(유,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부 공인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양성평등, 성폭력예방 등 교원 원격직무연수과정 운영. 교육 수료 시 시도교육청 나이스(NEIS) 직무연수 시간 등재 서비스 지원. 교육별 전담 강사와 튜터를 통한 학습자 맞춤형 독려 서비스 지원
	양성평등 사이버교육	양성평등 관련 과정으로 누구나 학습가능하며, 무료로 운영. 매월 개설되어 기수제로 운영되며, 교육 수료 시, 교육확인서 발급. 교육 수료자 대상 기관별 교육 수료 결과 통보 서비스 지원
	폭력예방 사이버 기관교육	국가기관, 학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폭력예방 사이버 기관교육 운영. 폭력예방 의무교육 기관 대상, 양성평등 기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기관 단위로 운영되는 교육으로, 단체교육 형태로 운영). 교육 담당자에게 교육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소속 기관 대상자들의 교육현황 등 확인. 교육종료 후, 교육대상별 교육확인서 발급
폭력예방 교육	성희롱고충상담원과정	공공기관 내 성희롱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충상담원의 역할과 역량을 제고하는 예방업무 교육 지원. 고충상담원의 실무역량 강화와 기관 내 고충상담 창구 활성화시켜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
	북한이탈주민양성평등·인권보호교육	북한이탈주민 대상 성별 및 생애주기별 성인지적 사회통합과 인권보호 등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중앙폭력예방 교육지원기관 운영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대상별 맞춤형 강사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
	성인권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성평등 및 폭력예방 통합교육 지원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컨설팅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추진실적 확인 및 교육 개선방안 컨설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은 성범죄자 집단 상담식 교육을 실시
네트워크 사업	포럼운영	공직사회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지도급 여성인사들의 축적된 역량과 성과의 공유를 통한 여성인력의 지속 성장과 발굴. 차세대 여성리더의 지속 성장 기회와 연결되는 후속학습 기회의 장 마련. 사회 각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역량 강화 포럼 본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전국적 여성역량 증진 및 연대, 협력 강화 도모
	성평등교육 진흥협의회 운영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 기관 간 정기모임으로 회원기관 간 정보교류, 공동사업 수행 및 운영활성화 도모
모바일 콘텐츠	양성평등미디어,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네이버TV, 트위터, 유튜브	

출처: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gepe.or.kr).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큰 규모의 조직과 예산을 기반으로 주로 직접적인 공공서비스를 실행하지만, 사업에 따라 다양한 민관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급 학교와의 협력사업인 양성평등학교 운영지원, 업무협약을 통한 폭력예방, 성인권교육 지원기관 운영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양성평등교육 시행 기관·단체들의 협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에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광주여성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울산광역시여성회관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전남여성플라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북여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수련원 등 17개 기관·단체가 가입돼 있다. 아울러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매년 주제를 정해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주체들의 활동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Ⅳ-12〉 2018년 양성평등교육진흥 공모사업 주제

양성평등 인식제고 문화 확산	• 생활 속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 대중매체의 남녀차별 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 '여성·평화·안보' 등 글로벌 성평등 인식 확산 • 성평등 실천 커뮤니티 지원 및 실천 캠페인 • 지역 남성 참여 프로그램(성평등 보이스 등)을 통한 성평등 의식개선 활동 • 여성친화도시 민·관 협업사업 • 기타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지원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여성근로자의 경력유지 강화 및 예방 • 사회 각 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 •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 기타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사업

여성폭력 예방 사회안전망 강화	• 여성·아동 권익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역량 강화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 사업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디지털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아동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프로그램 • 기타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출처: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gepe.or.kr).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2008년 개원한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법인의 지위를 지니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원장 이하 172명의 직원들이 689억3천6백만원가량의 예산을 토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체계는 진흥원의 주요 정책방향에 관해 자문하고 결정하는 이사회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Ⅳ-9〉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체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le.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학점인정, 독학 학력인정 관련 사항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살펴볼 수 있다.

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광역·기초), 평생학습도시(시·군·구), 행복학습센터(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추진체계 및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등 평생교육 추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평생학습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마을 단위 풀뿌리 '학습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및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자립역량 및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제2차 학습',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연계한 '학습형 일자리' 확대 등이 포함된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국가부터 광역과 기초수준으로 이어지는 지원기구인 평생학습진흥원을 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와 행복학습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추진된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 연계, 지역사회 간 연계, 국가 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하나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현재 전국에 153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돼 있다.

행복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설치되는 거점으로 학습활동을 위한 시설·공간과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한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행복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인력 및 행복학습매니저를 배치함으로써,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각 센터 간 연계·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2017년 현재 전국 6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행복학습센터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나. 대학 평생교육체계 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 평생교육체계를 '선취업 후진학' 방식으로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고등교육 학사체제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통합·개편을 이끌고 있다. 대학의 평생교육의 운영모델에는 대학이 성인학습자 대학 학과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단과대학·학부·학과를 설치하거나, 복수의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다.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은 성인학습자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유연한 방식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2017년 현재 전국에 15개 대학이 평생교육체계 지원 사업에 선정·운영되고 있고, 45개의 학위과정과 189개의 비학위과정이 개설돼 있다.

다. 평생교육사 양성

평생교육사는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학습 관련업무의 전반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평생교육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등 국가 평생교육의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사 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과정은 대학(원), 학점은행기관, 시간제등록대학 등의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하고, 이후 자격승급은 일정 경력을 갖춘 뒤 승급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가능하다.

라. 평생학습학위·학점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을 통해 정규적인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위과정을 접할 회를 제공하고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이를 학력·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독학학위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마. 온라인 평생교육 기반구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양질의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은 웹을 기반으로 수강인원 제한 없이 누구나 대학의 우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터넷의 특징을 활용해 교수-학생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늘배움'은 다음과 같은 다음과 기능을 지니고 있다. ① 공개교육자료, 시스템 및 제도간 연계를 통해 온라인 학습, 이력관리, 학습진단 등 세대별,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② 둘째, 포털, 모바일, SNS 등 온라인 전달체제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마련 ③ 산재된 평생교육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정보축적을 통한 평생학습 빅 데이터 DB 구축.

바. 학습욕구집단별 평생학습 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공공성과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다양한 학습욕구집단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비문해·저학력 성인 대상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초·중학 학력인정제도 구축 등을 통해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초·중학 학력인정제도를 구축하고,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성인문해능력 관련 연구조사 및 교육내용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학교참여 활동을 고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에는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온·오프라인 연수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개발 등이 포함되며,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전국 93개 시·도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2017년 기준), 관련 교육정보 포털인 '학부모온누리'와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분석,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 학부모 학교참여 및 자녀교육 정보, 온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은 다문화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할 부처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②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중점학교, 다문화연구학교, 다문화 유치원 등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지원 ③ 다문화교육 관련 통계수집·분석 및 다문화교육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④ 교육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 지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수행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광역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기초 시·군·구 평생교육원, 나아가 행복학습센터나 동주민자치센터 등에 이르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런 전달체계만으로는 충분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교육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각 지역에서는 평생학습원이 중심이 돼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교육주체들과의 협력과 자원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구성·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들과 66건의 업무협정(MOU)을 맺고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근거해 2005년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법인의 지위를 지니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원장 이하 120명의 직원들이 1,182억5천8백만원가량의 예산을 운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조직체계는 주요 정책방향에 관해 자문하고 결정하는 이사회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국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Ⅳ-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조직체계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https://www.arte.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에는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교원의 연수지원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살펴볼 수 있다.

가. 학교 문화예술교육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 예술 꽃 씨앗학교 지원,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 고3 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상상만개'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분야별 전문 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 인성과 감성계발 등 창의적 인재를 양성에 기여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병행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둘째, 예술 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은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의 전교생 4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를 지원함으로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전교생의 문화감수성 및 문화소양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등 문화예술교육 운영 환경 조성에 집중 지원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학교로 육성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은 전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적은 지역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문화예술로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기관, 노인, 군부대, 교정시설, 치료감호소, 소년원학교, 보호관찰소, 근로자, 방과후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북한이탈주민, 상이군경, 폭력피해자, 농산어촌 등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 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정기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경험 기회 제공.
노인영상 미디어 문화예술교육지원	노인이 직접 자신의 일상과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함으로써 긍정적 자기인식을 형성하고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제고 도모.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장병들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군대생활 적응 지원.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재소자가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성과 자아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치료감호소 문화예술교육 지원	재소자가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성과 자아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소년원학교 학생들이 수용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좌절감을 극복하며, 자아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보호관찰소 문화예술교육 지원	인성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감성 증진, 사회성 개발, 올바른 인성교육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 마련.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체적 문화예술의 향유와 경험 제공을 통해 근무 환경 및 생산성 제고와 노-사 화합 독려.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	일반·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감수성 및 자기이해 증진에 기여.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가출, 자립, 탈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적 치유와 사회성 회복을 도우며 문화예술 돌봄 기능 확대.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우리사회 문화의 이해와 사회성을 향상하고 순조로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상이군경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며 노년기에 영예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움 제공.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마음치유, 봄처럼'	학교폭력·가정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처럼 심리적 상처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 제공.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저변 확대 지향.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 등 문화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향유 격차 해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지원	학교 밖의 문화예술 전문기관·단체에서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에서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이 '상호학습'과 '협력'을 통해 자존감과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소외계층 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이 방학기간 동안 일상을 벗어나 낯선 공간에서 '예술가와 함께 놀며, 예술작업 하는' 행위를 통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예술적 감성을 발견하는 경험의 기회 제공.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례 발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환경 조성.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https://www.arte.or.kr).

다.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창의적 리더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아르떼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역량강화 연수, 문화예술교육 협력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문화예술교육 예비인력 역량강화 연수, 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연계 연수, 학습공동체 아르떼 동아리, 공무원 문화예술교육 연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등 다양한 연수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사업

아르떼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와 협력자,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대상별·내용별·단계별 연수를 기획·운영한다.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역량강화 연수	학교·사회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를 대상으로 마련된 연수과정으로,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젝트, 예술교육 전문성 심화연수과정, 주제별 연수과정 등 다양한 과정 개설.
문화예술교육 협력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핵심 주체인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와 연계하여 교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가치 제고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 제공. 이는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을 잇는 행정인력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문화예술교육 예비 인력 역량강화 연수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자 입문과정으로, 대학(원)생의 시각으로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활동을 기획해보며, 강의자-연수생 간 네트워킹 경험 제공.
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연계 연수	해외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의와 체험이 병행된 연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방법론 및 사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학습공동체 아르떼 동아리	특정 분야를 공통 관심사로 하는 구성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식을 공유·학습·창출하는 실천적 지식 동아리 형태의 연수과정.
공무원 문화예술교육 연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문화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문화예술교육 정책현장 탐방 등 문화정책 전반의 교육내용 제공.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겸비한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에 따라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및 의무배치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활동 영역 확대 촉진.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https://www.arte.or.kr).

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연구

개발 및 연구사업을 통해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근거를 마련하며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는 국내외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주요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는 기초연구, 정책연구, 효과연구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연구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수립과 전략 기획에 기여한다. 아울러 협력체계가 구축된 국가들과의 국제 공동연구, 협력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국내외의 시사점을 발굴하고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다. 셋째, 문화예술교육 연구서비스 및 대외공유는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연구 및 정책사업의 주요 성과와 현장 사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공유한다. 넷째,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토론회는 사회·문화적 동향 및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학술적 논의를 주도하고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하며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섯째, 콘텐츠 연구회는 정책 수혜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심화 및 다각화를 요구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창조적 협업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콘텐츠를 연구·개발한다. 그 밖에도 한국교육방송(EBS) 협력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공동개발·확산하고,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학교 내 예술강사들의 현장 노하우가 축적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발굴하고 공유한다.

마. 국제교류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은 국가별, 분야별로 효과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양질의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문화예술교육 ODA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문화예술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한다. 아트드림캠프와 1학교 1국가 문화교류는 동계올림픽을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국경을 넘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글로벌 문화예술교육 탐방 프로젝트 'A-round'는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해외 탐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수법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의 담론과 실천의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상호간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심포지엄 및 행사, 온오프라인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바. 공모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민간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오픈 랩(Lab)' 지원사업은 공모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람들이 실험적 연구과정을 통해 새롭고 참신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사업 '꿈꾸는 예술터'는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프로그램 공모는 문화예술 교육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거버넌스 구조는 주로 진흥원이 주도적으로 지원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공공서비스의 수요자 집단과 생산자 집단과의 협력으로 구분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수요자 집단과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복지기관, 노인, 군부대, 교정시설, 근로자,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문화예술 수요집단 관련 부처들—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과의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자의 측면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인(집단) 및 교육주체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2018), 국립중앙박물관(2018), 서울교육대학교(2011), 데일리안(2008), YTN(2016), 시흥시(2015), 교보문고(2012), 전경련(2011) 등 문화예술교육의 실행, 연구 및 홍보와 관련해 다양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4 ▌ 요약과 시사점

1) 논의의 종합

한국에서의 국가 수준의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및 지원기구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독일 모델의 도입 혹은 변용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뤄왔다. 이는 우리 사회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논의가 독일 모델의 소개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후 스웨덴과 같은 다른 국가의 모델들도 소개되면서 논의가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의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는 연방정치교육원과 같은 중간지원기구의 설치와 법제도 도입이 중심적인 주제를 이뤄왔다. 이에 따라 중간지원기구를 어느 부처 소관에 둘 것이며,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들이 활성화 됐다. 반면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전반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지만, 몇 가지 연구와 사회적 논의들 속에서 의미 있는 시도들이 제출되기도 했다.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로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구들과 한국의 경우 선행사례로 삼을 만한 통일교육원, 선거연수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모두 9가지의 중간지원기구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사례를 살펴봤는데, 각 중간지원기구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15〉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기구의 기본현황

기구명	설립연도	국가	성격	직원	예산규모
연방정치교육원	1952	독일	정부기구	270명	5천2십만EUR (약6백40억원)
대중교육위원회	1991	스웨덴	민간단체	27명	41억5천9백만SEK (약5천1백5십2억원)
시민성재단	1989	영국	민간단체	25명	1백7만2천492GBP (약15억4천4백만원)
시민교육센터	1981	미국	민간단체	15명	3백만8천3백93USD (약32억4천6백만원)
선거연수원	1996	한국	정부기구	52명	189억3천2백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정착' 항목 예산)
통일교육원	1996		공공법인	73명	258억7천4백2십만원 (통일부 '통일교육추진' 및 '통일교육원시설운영' 항목 예산)
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2		공공법인	69명	81억5천3백5십만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08		공공법인	172명	689억3천6백만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5		공공법인	120명	1,182억5천8백만원

주: 각 기구 직원규모는 현재, 예산규모는 2016년 현황예산임. 단 미국 시민교육센터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2013년 현황을 명시함. 각국 통화의 환율은 2018년 5월 기준임.
출처: 각 기구 홈페이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국가가 앞장서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대륙 유럽계의 전통과 민주시민교육을 시민사회의 자율에 맡기며 사안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영·미계 전통이 있음을 살펴봤다. 역사와 문화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경우 대륙 유럽계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미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들도 대륙 유럽계와 유사한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5개의 유사한 중간지원기구의 사례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륙 유럽계 전통이든 영·미계 전통이든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견지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민주시민교육의 거버넌스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일은 그것을 다루는 방식도 민주주의에 기반 해야 한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민주시민교육은 민(民), 즉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관계를 의미한다. 대륙 유럽계에 속하는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 스웨덴 대중교육위원회의 경우 민주적 거버넌스의 선진적 형태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영·미계에 속하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공식적인 중간지원기구가 없이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된 영국의 시민성재단과 미국의 시민교육센터의 경우 스스로가 시민사회 주체로서 자체적인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주도하는 한편, 많은 부분 민주시민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참조사례가 될만 한 통일교육, 선거권자교육, 양성평등교육, 평생교육,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도 고유한 거버넌스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5가지 사례 모두 국가 수준의 공식적인 중간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5가지 사례가 각기 고유한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나고 있다. 공통점과 관련해서 한국의 5가지 사례들은 아직 관(官)의 주도성이 강하다고 느껴진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선거연수원의 경우 국가수준의 중간지원기구로부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마다 설치된 지방수준의 담당기관—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원(관)—행정체계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전국적인 행정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통일교육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통일교육원의 경우 통일교육민관협의회, 통일교육협의회 등 의사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통일교육위원, 지역통일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위촉·지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해 왔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경우 법정의무화 돼 있는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의 광범위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경우 교육의 수요자집단(학교, 기관·시설 등)과 생산자집단(예술인 등)과의 협력과 함께 수요자집단에 관한 정책을 관장하는 다양한 부처들—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과의 협력체계가 특징적이다.

2) 시사점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기구의 거버넌스의 수준은 한국 사회 전반의 거버넌스 수준과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거버넌스가 '민관협력'과 동의어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거버넌스는 민관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관(官)이 지닌 권한을 민(民)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서구 사례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의 모델은 다르지만, 시민사회의 주도성이 보장되는 것은 공통적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는 꾸준히 발달해 온 반면, 아직까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공적 권한을 민간과 공유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쿠이먼(J. Kooiman)은 거버넌스의 차원을 1차적 거버넌스(first order governance)와 2차적 거버넌스(first order governance)로 분류하는데, 전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주체간 협력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후자는 민관 간 권력의 분배와 관계를 체계화한 제도에 초점이 맞춰진다((Kooiman 2003). 서울시의 경우 거버넌스를 협치라는 용어로 부르면서, 시정(市政)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단계를 '정보제공', '협

의', '개입', '협업', '권한부여'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이중 '협업'과 '권한부여' 단계를 협치의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7). Kooiman의 1차적 거버넌스와 2차적 거버넌스, 그리고 서울시의 협업과 권한부여는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민주화가 진전되고, 2000년대 들어서면 중앙 및 지방정부가 민간주체들에게 정책참여의 문호를 개방하는 거버넌스의 흐름이 형성돼 왔다.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거버넌스는 정부에 의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 나아가 시민사회 주체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거나, 스스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등 적극적인 거버넌스의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춰 보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는 1차원적 거버넌스나 협업의 단계에 진입했지만, 2차원적 거버넌스나 권한부여의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의 논의와 실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주체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활성화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간지원기구는 직접 교육사업을 늘리기보다는,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활동에 나서고 좋은 사례들이 전파되며, 시민사회 주체들이 교육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보본연의 '지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수준 중간지원기구로부터 지역의 주체들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전달체계이기 보다는, 다양한 교육주체와 자원, 그리고 학습자들이 연결되는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실행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민간주체가 직접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교육주체들의 대표자들이 모여 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스웨덴 대중교육위원회의 사례는 민주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에 관해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시민에 의한 교육의 실행과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 주체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적인 내용과 형식을 형성하고 계승해 왔으며, 지금도 전국의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시민사회는 인력과 자원, 전문성 등의 측면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사회 주체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시민들의 학습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시민교육을 잘 실행하고, 자신들의 교육 콘텐츠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례분석에서 확인한 것처럼 한국에 있어서 교육 관련 중간지원기구들은 아직 관주도의 교육서비스 전달 중심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제V장

민주시민교육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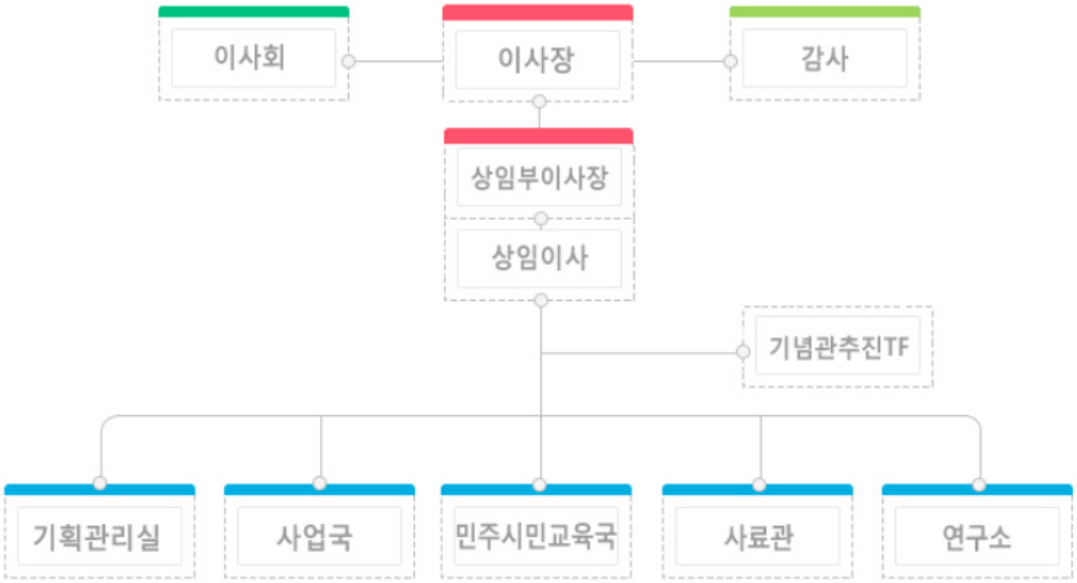
제V장 민주시민교육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 민주시민교육의 위상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년 제정)에 근거해 2002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공공법인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운영과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와 일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가치체계와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V-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조직구조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www.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동반자'를 비전으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기반강화', '민주주의 확산·심화의 기반조성', '민주주의 지식정보 허브구축', '유능하고 활기찬 조직' 등 4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및 추모행사 개최 및 지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서비스,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가치체계는 〈표 V-1〉과 같다.

〈표 V-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가치체계

미션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비전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동반자
핵심가치	참여, 협력, 자긍심
전략목표	**전략과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기반강화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운영 • 기념·계승사업 활성화 및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강화
민주주의 확산·심화의 기반조성	•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과 운영 • 국제교류협력사업 발전방향 정립
민주주의 지식정보 허브구축	• 한국 민주주의 100년을 담는 연구지평 확대 • 이용자 중심 사료 서비스 강화와 사료 콘텐츠 서비스 확장
유능하고 활기찬 조직	• 자긍심 있는 업무환경 조성과 조직문화 혁신 • 인적역량 강화의 경영효율성 제고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www.kdemo.or.kr).

민주시민교육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의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고 있다.[32]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출범과 함께 설정한 4대 과제 8대 주요사업 중 하나로 '청소년 대상 민주화운동교육 활성화'가 설정되면서 민주시민교육사업은 창립 초기부터 꾸준히 전개돼 왔다.[3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3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4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전시·홍보·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8.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
9.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대되는 사업

3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대 과제, 8대 주요사업

4대 과제	① 민주화운동 사료의 수집 관리 ② 공간과 내용을 갖춘 기념관 건립 ③ 민주화운동 계승과 연대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④ 해외 민주인사 연계 및 지원
8대 주요사업	① 민주화운동 사료수집 ② 민주화운동의 역사 정리 ③ 종합적 기념사업 전개 ③ 종합적 기념사업 전개 ④ 민주화운동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⑤ 폭 넓은 연대활동의 중심기능 수행 ⑥ 청소년 대상 민주화운동교육 활성화 ⑦ 민주화운동의 국제적 확산 및 연대 추진 ⑧ 민주화운동 연구의 확대와 심화

가운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증대되고 있는 바, 이에 적합한 교재, 교육 과정 등을 개발·보급, 교육 수행자에 대한 교육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공공재를 담당할 수 있는 공익적 위상을 형성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시민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실제적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사업 내용을 조사하고, 연령, 분야,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제공한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의 틀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조사·연구,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각급 학교를 위한 단계별 기본 교육자료 개발,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연수 프로그램인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와 민주주의 현장체험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과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비전을 창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본방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창립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다가, 2007년 민주시민교육사업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주요사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2007년 수립된 민주시민교육사업 5개년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34]

〈표 Ⅴ-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기본방향(2007)

기본목표	• 민주주의 가치·원리를 심화·체현하는 시민덕성 계발 • 민주화 이후의 사회 갈등·대립 치유할 민주역량 제고 • 적극적·능동적 시민참여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실현
중장기 추진방향	•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 학교수업, 직장교육,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폭넓은 국민교육 혜택 확대 •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 : 영역, 대상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재와 과정 개발 • 민주시민교육의 지평 확대 : 정치 분야로부터 경제, 사회, 문화 분야까지 민주주의 관련 교육주제 확대 : 시청각매체 활용, 현장교육, 토론 등을 활용한 효과성 높은 교수방식 보급 • 해외 협력 교육사업 체계 구축 : 민주시민교육 국제비교 및 인적교류·사업협력 체계 구축
단기 중점 추진과제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민주시민교육 운영체계 구축 및 관련전문가 발굴 •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방식 및 교육내용 차별화 •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할 전문교재 및 표준과정 개발

3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민주시민교육 사업 5개년 기본계획(2008~2012).

이 시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증대되고 있는 바, 각 분야별로 민주시민교육의 기준을 설정하고, 또한 이에 적합한 교재, 교육 과정 등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그간 교재의 개발과 보급, 교육 수행자에 대한 교육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공공재를 담당할 수 있는 공익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추진방향은 시민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실제적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며, 각 분야별(지방자치단체, 노조, NGO, 전문교육기관 등)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사업 내용을 조사하고, 학력, 분야,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할 각급주체가 인권, 평화, 성, 환경, 미디어, 복지 등 다양한 민주주의 영역을 이해하고 교육방법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워크숍, 교육)를 제공하고, 민주시민교육이 보편적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주의 선진국가의 민주시민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사업 5개년 기본계획에 명시된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 및 조사로, 여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실태 및 요구조사, '민주시민교육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개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표준 지침서' 연구 개발, 민주시민교육과정 설계 연구,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연구자·전문가 모임 운영, 전문가 인적자료 및 교육자료 DB화 등이 포함된다. 둘째, 영역별·대상별 맞춤형 교육 개발로 여기에는 영역별·대상별 교재개발, 맞춤형 교육양식 개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된다. 셋째, 민주시민역량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으로 민주주의 리더십 프로그램, 민주주의 생활화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개발·실시한다. 넷째, 민주적 시민성을 위한 사이버 교육 센터 설치를 통해 멀티미디어 교육, E-러닝 콘텐츠 개발, 온라인 연수 등을 실행한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해 세계 주요 민주시민교육 기관과의 네트워크, 아시아 청소년 대상 국내 대학연계 장학생 선발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흐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창립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2007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본방향이 설정됐고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기본방향을 근간으로 하되 각 시기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 다양한 사업들이 분화·발전 해 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의 흐름은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공간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그 역할에 따라 '연구·개발', '프로그램', '활성화' 등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시간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사업을 '모색기', '도약기', '조정기', '전환기' 등 4가지시기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매진하고 있는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 민주시민교육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역할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위해 기획자, 제공자, 매개자 등 3가지 하위역할을 도출했다. 첫째, 기획자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 담론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한다. 둘째, 제공자는 다양한 주체들이 펼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시민적 가치와 역량에 관한 근간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매개자는 우리 사회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시민교육 주체들 간의 교류협력에 기여한다. 그리고 세 가지 하위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관련 담론과 콘텐츠를 생산·공유함으로써 방향을 제시하는 민주시민교육 '연구·개발', 다른 기관이나 시민사회 주체들이 실행하기 힘든 교육을 직접 마련해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인식과 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세 가지 사업영역을 설정했다.

한편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흐름을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기로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창립에서부터 민주시민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02~2006년의 시기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시작되고,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면서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모색기'에 해당한다. 이후 2007년부터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주요 전략사업을 설정되고, 모색기의 다양한 시도들의 성과를 토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유의 사업영역과 과제들이 형성되는 '도약기'(2007~2013년)에 해당한다. 2014~2016년의 기간은 내부적으로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위상이 부침을 겪기도 했고, 도약기로부터 이어져 온 과제들이 어느 정도 완수되면서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끝으로 2017년 이후의 시기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는 정치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국적인 지원기관의 역할로 이행해 나가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2 ▌ 모색기(2002~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지난날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투쟁의 영역이라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계승·발전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모색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은 기억투쟁과 관련한 사업, 즉 사료를 수집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한편, 6월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 및 관련 행사 등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제도와 형식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시민사회 운영의 원리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권력의 주체인 시민들의 민주적인 의식과 역량의 함양,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국가체제와 군사문화, 입시위주 교육정책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훈련할 충분한 기회를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노정된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초창기부터 기억투쟁에 관한 사업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펼쳐 왔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1). 제1기 이사회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목적을 '한국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의 기억들을 계승하여 당대의 민주화를 발전·심화시키고, 그 정신과 실천 노하우를 후대에 전승'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 바 있다.

첫째, 민주적 공동체 구성원을 양성하는 미래 지향의 성찰적 민주주의 교육내용 확보.
둘째, 민주화운동 역사 체험 등 각종 민주화운동 저인 계승 연수교육 프로그램 내실화와 확대 시행.
셋째, 내용 있는 교육 자료의 제작과 적극적 활용 및 배포.
넷째, 지식 정보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빌 및 실행.

모색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사업 내용을 앞서 제시된 세 가지 큰 갈래—연구개발,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분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모색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내용(2002~2006)

사업유형	사업내용		
연구개발	민주시민교육 연구조사	기초연구조사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초조사분석 연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 •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교육 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 민주적 문화 정착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의 이론과 실제 • 영국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학교 민주시민교육 연구조사	• 7차 교육과정의 중고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민주화운동 서술실태분석 •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민주화운동 관련부분 서술분석 • 부마항쟁 수업안 개발 • 민주시민교육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조사: 교사를 중심으로 • 주요 외국학교 시민교육 내용연구: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 역사다시읽기 / 역사다시보기 • 만화현대사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이야기 • 민주시민교육 시범커리큘럼 일반시범연구: 환경교육, 평화교육, 여성교육 • '부마항쟁 수업안 개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교육	• 청소년 문예공모전 • 청소년민주주의역사캠프 •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 청소년 영화 '아름다운 민주주의' 사전 제작지원 • 민주시민을 위한 청소년 토론 강좌	
	대학생·어린이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교육	• 대학 언론인 민주주의 교육 • 대학생 민주시민 실천활동 • 민주주의 현장체험	

사업유형	사업내용	
네트워크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주체 역량강화 및 교류	• 시민사회단체 교육담당 실무자 연수 • 교사연수 • 민주주의 수업사례 나눔마당 • 기념단체 교육사업 연대회의
	민주주의 교육 지원	

1) 연구개발

가. 민주시민교육 연구조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에 앞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 현황과 사례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초조사분석 연구사업인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2002)은 민주시민교육의 현재적 의미와 실천현장에서의 쟁점들을 정리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기초,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장으로서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실천의 양상과 사례, 내용 영역별 민주시민교육(환경, 평화, 여성, 노동),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등 당대의 담론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교육 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2003)는 노동자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관계,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 개념과 필요성, 노동교육과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의 관계,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 등을 규명하고, 노동자 민주주의 의식조사와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교육의 현황에 관한 분석을 통해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의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청소년의 민주적 문화 정착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의 이론과 실제'(2005)는 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의 목표로서 민주적 문화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이론과 실천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영국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2006)은 영국시민성교육(citizenship education)의 배경과 흐름을 파악하고, '시민성재단'(Citizenship Foundation)을 비롯해 시민성교육을 실행하는 다양한 단체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조사도 진행됐다. '7차 교육과정의 중고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민주화운동 서술실태분석'(2003)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민주화운동 관련부분 서술분석'(2003)은 각각 중고등학교의 사회·역사과 교과서에서 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들을 분석함으로써, 민주화운동에 관한 교과내용의 개선방향과 교육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조사: 교사를 중심으로'(2005)는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현황과 학습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 '주요 외국학교 시민교육 내용연구: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을 대상으로'(2006)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모색과 내용개발을 위해 우리 나라에 앞서 민주시민교육을 발전시켜온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 등 5개국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나.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역사다시읽기'와 '역사다시보기'는 주요 민주화운동들에 관한 도서와 영상물이다. 먼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사료와 미디어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발주됐다. 이를 토대로 특히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와 영상물을 제작했다. 4·19 혁명(2003), 6월 민주항쟁(2003), 5·18 민중항쟁(2003), 부마민주항쟁(2004), 한일회담반대운동(2005), 유신헌법반대운동(2006) 등 총 6종의 역사다시보기와 역사다시읽기가 각각 제작됐고, 아울러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의 시대증언이 수록된 영상물인 '시대와의 인터뷰'(2004)도 제작됐다. 제작된 콘텐츠들은 주로 학교 현장에서 계기수업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의 교재로 사용되도록 배포되고, 기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신청이 오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영상물의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화현대사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이야기(2007)은 초등학생들이 민주화운동에 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만화자료다.

민주시민교육 시범 교육과정 개발도 진행됐다. 2002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시범커리큘럼 일반시범연구자료가 '여성교육', '평화교육', '환경교육' 등 3가지 주제별로 개발됐다. 커리큘럼의 개발은 연구자 보다는 오랜 시간 해당 분야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해온 현장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 각 교육의 배경과 흐름, 주요 내용과 실천 방법들이 알차게 담기도록 했다. '부마항쟁 수업안 개발'(2005)은 역사적 민주화운동인 부마항쟁을 학교에서 교육하기 위한 내용과 형식을 개발하기 위한 실용적인 연구사업으로 진행됐다.

2) 프로그램 운영

가. 청소년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 영역의 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현재 사회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주로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등 차세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교육으로는 청소년 문예공모전, 청소년민주주의역사캠프,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청소년 영화 사전제작지원 등이 진행됐다.

문예공모전은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문예작품을 만들고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해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대회로 2002~2005년 까지 4회에 걸쳐 개최됐다.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작품들은 선별·가공의 과정을 거쳐 민주시민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공모분야는 독서감상문, 생활글, 시(詩) 분야이며, 당선작은 매년 '희망을 지피는 이야기'라는 입선작 모음집으로 발간돼 배포되기도 했다.

청소년민주주의역사캠프는 5.18민중항쟁 기념주간에 청소년이 한국현대사의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대면하고, 친구들과 함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장으로 마련된 행사로, 2003~2006년까지 4회에 걸

쳐 개최됐다. 전국에서 모집된 수백명의 청소년들과 행사진행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 이 캠프는 5.18 민주화운동 역사유적 탐방, 광주청소년문화제 참여, 도전 골든벨 '아자! 5.18', 5.18엽서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는 사회적 의사결정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모의의회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오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청소년의회가 발족한 2003년부터 정의교육시민연합, 전국사회교사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청소년의회는 온라인 선거를 통해 청소년 선거인단이 청소년의원을 선출함으로써 구성된다. 선출된 청소년 의원들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필요할 경우 캠페인, 문화행사, 토론회 등 실천 활동도 펼친다.

2006년 진행된 청소년 영화 '아름다운 민주주의' 사전제작지원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느낀 민주주의를 주제로 영상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역사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청소년들의 영상제작을 사전에 지원해 참가자들의 동기부여와 경쟁력 있는 작품발굴을 도모했다. 선정된 작품들은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특별 세션 마련을 통해 청소년들이 함께 감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상작들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했다. 2005년에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주제에 관한 강연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갖는 민주시민을 위한 청소년 토론 강좌가 진행됐다. 이 강좌에서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토론이란 무엇인가? △토론에서의 말하기와 듣기, 토론에 바람직한 자세 △똘레랑스란 무엇인가? △생활 속의 민주주의 실천 등 네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나. 대학생·어린이와 함께 하는 민주주의 교육

대학생 언론인 민주주의 배움터는 근현대사, 민주주의, 문화 등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대학언론인들이 민주화운동사와 사회문제를 접하는 대학언론인의 교양과정을 지향해 마련됐다. 2003~2005년에 걸쳐 개최된 이 배움터는 민주주의와 관련한 민주화 운동, 역사, 정치, 경제, 노동, 언론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학습과 대학언론인으로서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제언이 이루어 졌다.

아울러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민주시민 실천활동들이 진행됐다. 대학생 5·18 현장학습은 서울·경기지역 대학생과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5·18 관련 역사·기념시설들을 탐방하고, 함께 우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동아시아 대학생 평화·인권 캠프는 일본과 한국 대학생들이 함께 '분단을 넘어 평화로'를 주제로 5박 6일간 매향리 사격연습장, 나눔의 집, 서대문 형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도라산 전망대, 판문점 등 평화를 주제로 한 탐방 및 문화교류 활동이 진행됐다. 그 밖에도 대학생들이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캠프 진행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2005년에는 '의견을 말함으로서 우리자신을 정의롭게 하자'를 주제로 대학생 원탁토론 열린마당을 개최하기도 했다.

어린이를 위한 민주주의 현장체험 '선생님 민주주의가 뭐예요'는 초등학생들이 국회, 이한열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서울시청 앞 광장 등을 탐방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3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인기 있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나 지도자들의 신청을 통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교통편을 제공하고,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지도자를 양성·배치해 진행한다.

3) 네트워크 활성화

가. 민주시민교육 주체 역량강화

활성화 사업은 시민사회 및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2003년 개최된 시민사회단체 교육담당 실무자 연수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환경교육, 여성교육, 평화교육 시범 커리큘럼의 현장적용을 위해 환경교육 담당자 연수, 여성교육 담당자 연수, 평화교육 담당자연수를 각각 진행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교육담당자들이 모여 '지금 시민운동에서는 어떤 시민교육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전망을 모색하는 민주시민교육 미래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실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교사연수 '살아있는 한국현대사'는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현대사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의 계기수업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살아있는 한국현대사는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2006년 광주, 서울, 부산 지역에서 각각 개최됐다. 그 밖에도 다양한 교사연수 프로그램들이 시도됐는데 여기에는 △사회교사 연수(2003) △민주주의 교육 연구수업(2005) △충북 영동 지역 교사 민주주의 교육(2005) △서울지역 사범대학 예비교사 교육(2005)이 포함된다.

민주시민교육 실천주체들을 위한 교육과 함께 주체들간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도 진행됐다. 2006년에는 모범적인 민주주의 교육사례를 발굴해 학교현장의 민주주의 교육 활성화와 좋은 수업사례의 보급을 위한 민주주의교육 수업사례 나눔마당이 개최됐다. 이 대회는 민주주의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사례를 정리해 출품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례들은 시상식과 함께 발표회를 갖게 된다. 이후 선정된 수업사례들은 자료로 제작돼 민주주의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부산민주공원,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전국의 민주화운동 기념단체교육사업 연대회를 구성해 교육사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발전방향과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해 오고 있다.

나. 민주주주의 교육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다양한 기관·단체들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모색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원한 민주시민교육 활동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제11회 전국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원탁토론광장 후원(2003) △제4회 서울 청소년 토론대회 후원(2003) △친일문제 시민강좌 후원(2004) △4·19혁명 관련 특별수업 지원(2004) △5·18민중항쟁정신계승 제3회 전국고등학생 토론대회 참가(2004) △'국가보안법 폐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국작가대회 후원(200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도전! 골든벨 행사 후원(2004) △부마민주항쟁 25주년기념 청소년 민주캠프 공동개최(2004) △제5회 서울시청소년토론대회 후원(2004) △제5회 살아있는 역사만들기 전남대회 후원(2004)△제1회 전국 고등학교 학생회장 리더십연수 후원(2004) △전국대학생기자연합 경인·서울지역 수습기자학교 강좌 후원(2005) △부마민주항쟁 26주년기념 청소년 민주캠프 공동개최(2005) △제1회 전국청소년 주장대회 후원(2005) △제3회 사회참여 발표대회 후원(2005) △제6회 논술토론한마당 후원(2005) △제7회 논술토론한마당(2006) △제5회 국제 청소년 원탁포럼 후원(2006) △부마민주항쟁 27주년기념 청소년 민주캠프 공동개최(2006).

3 ▌ 도약기(2007~2013)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창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7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미션으로 하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R&D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 하는 것을 비전으로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시민문화의 확산', '민주주의 지식정보 허브 구축' '서비스 기반 확충' 등 세 가지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첫 번째 전략방향인 민주시민문화의 확산과 관련해 국민과 함께 하는 기념사업 강화, 민주주의 국제협력 활성화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사업 기반조성'을 구체적인 사업과제로 설정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초창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이른바 '기억투쟁' 관련 사업들이 안정화 되면서, 그 성과를 일상화 하고 민주주의 연구, 민주시민교육 체계화와 활성화,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이루어 졌다. 이런 정책과 조직변화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역사 속의 과거'에 대한 기념을 넘어, 현재 진행형,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하며, '민주발전의 기획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공교육 현장과 시민사회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그들 시민교육 단체들을 네트워크로 엮는 중심기관을 지향한다. 이 시기 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사회 각 분야에 골고루 확대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사업부문이 가칭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같은 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구상이 논의되기도 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1). 이런 흐름 속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도약기를 맞게 된다. 현재 까지 이어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유의 사업유형들이 안착되고, 그 어느 시기보다 다양한 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됐다.

〈표 Ⅴ-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도약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내용(2007~2013)

사업유형		사업내용
연구개발	민주시민교육 연구조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실천모형 개발 연구 • 민주시민교육 종합보고서: 민주청서21 • 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선행사례 조사 • 생활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연구 •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 독일 정치교육 현장을 가다 • 시민교육 공동연구: 월례포럼. 심포지엄 • 학교 민주시민교육 연구: 연구모임(초등·중등), 영국·프랑스 시민교육 교사자료 번역모임 • 교육사업국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민주시민교육 콘텐츠개발	• 역사다시읽기, 역사다시보기 배포 • 공간으로 본 민주주의 발간 • '민주주의의 기초: 정의, 책임, 권위, 프라이버시' 초·중·고 교재 출판(12종) • 외국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요자료 번역(11종) • 민주시민교육 사업 관련 백서(6종) •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 현장체험 매뉴얼: 선생님, 민주주의가 뭐예요?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담당자를 위한 매뉴얼 • NGO활동가 교육 모범과정안 • 시민교육 길잡이: 우리 시민교육 해볼래요? • 시민교육 현장지침서1 • 시민교육 현장지침서2: 민주적 의사결정과 의사사통 • 시민교육 현장지침서3: 새로운 주민조직 방법론, 사례와 분석 • 활동가를 위한 '생명평화 세상 만들기', '협동사회는 어떻게 오는가' • 시민을 위한 생활 안내서 • 반년간 시민교육(창간호, 1~7호) • 온라인 교육 콘텐츠: 민주주의의 가차(6종) • 5분 수업엽서: 교실의 쉼표 •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3종) • 청소년용 동영상(7종)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캠프 •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 청소년 영화제 '아름다운 민주주의' •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체험 •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 대학생 민주주의 현장탐방 '민주야 여행가자' • 시민참여 UCC 공모전: 내가 만드는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주체 역량강화	•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 현대사 교사연수, 기초연수 '숨통 트이는 교실, 희망이 싹트는 학교' 외 다수 •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 기초·심화 과정 외 교육활동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다수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외 다수 관련 프로그램
	시민사회 역량강화	• 주민아카데미(기초과정, 주제별 교육) 외 다수 관련 프로그램 • 풀뿌리활동가 대회, 생명평화운동 활동가 워크숍 외 다수 관련 프로그램
	성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서울 및 각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국제교류·협력	• 미주지역 민주시민교육 기관 대표방문 • 제12차 시민교육 세계의회 참가 • 사회발전을 위한 해외 시민교육기관 초청 국제행사 • 독일 정치교육 기관 방문 및 한독 워크숍

		•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미국 시민교육센터 • 시민교육 세계의회 아시아태평양 대회 유치 • 일본 풀뿌리 운동 현장 탐방 • 태국 교육부 직원 내방 워크숍 및 탐방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 유관기관 교육사업 연대회의 • 대학생 자원활동가 양성·운영 •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 참교육 실천대회 참가 및 각종 교사모임과의 간담회 • 시민교육 박람회 •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 공동운영 •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후원, 시민교육 공모지원 사업

1) 연구·개발

가. 민주시민교육 연구조사

2007년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시민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는 전환이 이루어진 해다. 이에 따라 향후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위원회(3회)과 토론회가 개최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가 발주돼 진행됐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5개년간 추진할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가치체계와 사업영역이 다음과 같이 설정됐다.

〈표 Ⅴ-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사업 5개년 계획의 개요(2007)

비전	자유와 평등, 자연과 문화, 인간과 사회, 세계화와 지역화의 조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역량의 허브
기본목표	민주주의 역량 연구, 정보·지식 및 교육의 국제거점센터화
핵심목표	1. 생애전단계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보유 2. 민주주의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한 국내 최고의 공급원 3. 민주주의의 지역화와 생활화를 추진할 1만 교육인력의 양성 4. 민주주의 교류를 위한 국내외 거점센터의 구현
사업영역	1. 민주시민교육 지원시스템의 구축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 3.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4. 민주시민교육사업(기념관교육 포함)의 운영

이어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추진을 위해 토대가 될 일련의 연구들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실천모형 개발연구'(2008),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지형을 파악하고, 향후 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갈 길을 정리한 큰 규모의 연구용역인 '민주시민교육 종합보고서: 민주청서21'(2008), 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민교육 전문가양성과정 선행사례 조사'(2008), 생활 속 민주주의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연구'(2009),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의 인식과 삶의 변화를 추적한 '민주시민교육

과 시민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2009) 등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2008년에는 독일 정치교육 연수 결과를 토대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관한 논의를 묶어 낸 '독일 정치교육 현장을 가다'(2008)를 출판했다. 이 시기 연구조사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연구활동이 추진된다. 먼저 시민교육 공동연구 월례포럼을 통해 시민교육의 철학, 사상, 접근방법, 현황, 제도화, 흐름과 전망 등에 대해 다루고, 이를 아우르는 심포지엄 '시민교육의 이론과 현실'을 개최했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연구를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연구모임(초등)', '학교민주시민교육 연구모임(중등)', '영국·프랑스 시민교육 교사자료 번역모임' 등을 운영했다. 아울러 교육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에 대한 대규모의 심층면접을 진행한 '교육사업국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방향에 관한 토대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상의 연구들은 유의미한 지적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나.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모색기로부터 이어온 민주주의 교육 교재인 '역사다시보기', '역사다시 읽기', '만화 한국현대사' 등 도서와 영상물 보급은 도약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에는 만화 한국현대사가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권장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그간 진행해 온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전시킨 교재인 '공간으로 본 민주주의'가 발간됐다. 신문사, 방송국, 학교, 교회, 성당, 사찰, 광장, 일터, 사이버 공간 등 일상적인 현장을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조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해 온 현직 교사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의 기초' 교재 시리즈가 발간됐다. 본래 이 교재는 미국의 시민교육센터가 개발한 '민주주의의 기초: 정의, 책임, 권위, 프라이버시'(Foundeation of Democracy: Jusitce, Reponsibility, Authority, Privacy)를 번역한 후 우리 나라의 교육현장에 맞게 수정·보완한 교재다. 2007년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후원으로 교사들이 모임을 구성해 공동연구와 번역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작업결과를 토대로 2009년에는 1차로 '정의'와 '책임'편의 초등·중등·고등학교용 교재가 각각 출판됐고, 2차로 2011년 '권위'와 '프라이버시'편의 초등·중등·고등학교용 교재가 각각 출판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교사모임이 협력해 출판한 민주주의의 기초 교재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표 Ⅴ-6〉 '민주주의의 기초' 한국판 교재 시리즈 목록

주제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정의	정의의 사도가 왔다	정의로운 시민되기	십대, 사생활은 나의 보물!
책임	너희가 책임을 아느뇨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	십대, 사생활은 나의 보물!
권위	에헴! 권위 이야기	십대, 권위는 나의 힘!	권위, 함께 나누고 키우는 힘
프라이버시	쉿! 프라이버시 이야기	십대, 사생활은 나의 보물!	사생활, 나의비밀 나의 자유

아울러 2008~2009년에는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와 내용을 참조하기 위한 번역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각국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핵심적인 문서들이 번역대상이 됐고, 변역결과는 책자로 제작해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와 실천 현장의 주체들에게 배포됐다. 이 시기에 번역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표 V-7〉 외국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요자료 번역결과

2008년	OECD	데세코(DeSeCo) 프로젝트: 핵심역량 정의 및 선정 프로젝트 요약
	유럽평의회	민주시민교육 핵심용어 31
	유럽평의회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영국	시민교육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 학교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수업
	영국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가이드라인: 영국 시민교육 지침서
	독일	국가교육기준 요구안: 독일 시민교육 지침서
	미국	시민과 정부: 미국 시민교육 지침서
	미국	민주주의의 요소(Elements of Democracy)
2009	미국	프로젝트 시티즌 교사용 레벨Ⅰ·Ⅱ, 학생용 레벨Ⅰ·Ⅱ
	독일	청소년 인권교육 지침서: 나침반(Compass)

그 밖에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사업과 연계된 각종 자료들의 발간이 이루어졌다. 먼저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의 실행성과를 정리하는 백서와 교육활동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서나 정보지가 발간됐다. 먼저 민주시민교육 사업 관련 백서들로는 시민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강좌 프로그램의 내용과 과정을 기록한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연차별 백서, '서울 민주시민 아카데미: 성찰하는 삶, 우리 사회 희망을 찾다'(2009), 초창기부터 이어 온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역사를 정리한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 현장체험 사업백서'(2009), 교사들을 위한 민주주의 수업사례 나눔마당의 과정과 우수사례들을 수록한 '민주주의 수업사례 나눔마당 사업백서(2009)', 시민사회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는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경과와 내용을 정리한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 사업백서'(2009),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캠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그 성과를 정리한 '청소년민주주의역사캠프 사업백서'(2009), 교사들을 위한 각종 민주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결과를 망라한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 사업백서'(2011)가 발간됐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의 제작·배포도 이루어졌다.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 현장체험 매뉴얼: 선생님, 민주주의가 뭐예요?'(2007)의 발간을 필두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가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활동지침과 모범교육안을 제공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담당자를 위한 매뉴얼'과 'NGO활동가 교육 모범과정안'을 제작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의 기획과 실행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민교육 활동가 길잡이: 우리 시민교육 해볼래요?'(2010)와 시민교육 활동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담아 낸 현장지침서 시리즈인 '시민교육 현장 지침서1'(2010), '시민교육 현장 지침서2: 민주적 의사결정과 의사소통'(2011), '시민교육 현장 지침서3: 새로운 주민조직 방법론, 사례와 분석'(2012)을 펴냈다. 2012년 '생명평화'와 '협동'의

가치를 풀뿌리 운동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2013년 그 결과를 토대로 활동가를 위한 '생명평화 세상 만들기'와 '협동사회는 어떻게 오는가' 등 2종의 소책자를 발간했다. 아울러 2011년에는 시민들이 공동체에서 갖추고 실천해야 할 민주시민적 가치들을 안내하는 '시민을 위한 생활 안내서'도 발간됐다.

한편 2009년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활동가들의 정보교류를 위한 반년간 정보지인 '시민교육 창간준비호'를 발행한 후 2012년 총 7호까지 발간하다가 사정상 발간이 중단된 바 있고, 2010년에는 학교와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교보재로서 '온라인 교육콘텐츠, 민주주의의 가치(6종): 공동체, 참여와 실천, 차이의 인정, 정의·저항, 자기표현, 연대의식'(2010)과 '5분 수업엽서: 교실의 쉼표'(2010), 자유·평등에서 평화·생명으로 가치를 확장한 '청소년용 동영상' 7종(2011)을 개발해 배포했다. 2011년에는 제5기 지방자치에 맞춰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 추진방안을 정리한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2011)을 제시하기도 했다.

2) 프로그램 운영

가.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먼저 초창기에 개발돼 실행돼 온 전통적인 프로그램들은 도약기에도 이어졌다.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체험은 기존 공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의 참여폭을 넓히는 한편, 참여대상을 학부모나 소외계층 청소년으로 확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광주와 부산 지역에서도 민주주의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고, 6월에는 '6월민주항쟁'을 테마로 한 특별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현장체험 참가자 대상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이야기' 공모전도 진행되고, 본 프로그램이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혁신사례 경진대회에 출품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진행인력과 관련해 2008년 까지는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현장체험 길라잡이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9년부터는 대학생 자원활동가가 조직돼 길라잡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09년에는 제1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가 개최됐다. 이는 미국 시민교육센터의 프로젝트 시티즌(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소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 발표대회와 행정부처와 국회, 교육청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도 이어진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대학생들의 민주주의 현장탐방 활동을 지원하는 '민주야 여행가자'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현장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민주야 여행가자'는 젊은층을 위한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 밖에도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캠프는 2009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의 업무위탁 협약을 통해 진행됐고, 영화 '화려한 휴가' 세트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도되고, 2009년에는 '5월에서 6월까

지'를 주제로 한 사진전도 함께 진행됐다. 이후 2010년 까지 사업이 지속됐다.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진행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는 전통적으로 진행돼 온 프로그램들인 참가 청소년 모집 및 교육, 청소년의회 활동, 청소년 관련 정책이슈 캠페인, 학생의 날 행사 등을 진행했고, 청소년 인권포럼과 공동으로 청소년주장발표대회를 개최했다. 2008년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무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2007~2008년대는 청소년 영화제 '아름다운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과 지역순회 상영도 이루어졌다. 2010~2011년에는 주로 청소년·청년층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에 관한 생각과 경험을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분방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민참여 UCC 공모전: 내가 만드는 민주주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나. 민주시민교육 주체 역량강화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시민사회의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는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강화됐다. 먼저 교사연수는 초창기에 개발된 '살아있는 한국현대사 교사연수'는 서울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육주체들과 공동으로 확대돼 실시됐다. 아울러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민주주의의 기초-정의(Justice) 편'(2007), '민주, 노동, 환경으로 보는 우리 사회'(2008), '명사와 함께하는 5·18 수업열전'(2008) 등의 프로그램이 유관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런 시도들을 바탕으로 '현대사 교사연수'에 이어 또 서울시교육청 등록 직무연수 과정인 '숨통 트이는 교실, 희망이 싹트는 학교'가 개발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사들의 기초소양과 비전 함양을 위해 기획된 것이다.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수업사례 나눔마당'이 개최됐다. 이를 통해 전국 공교육 현장의 참신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발굴돼 이후 교사연수의 교육내용에 활용됐다. 아울러 2008년에는 수업사례 나눔마당에서 선정된 우수 사례 중 2건을 정규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참여 수업프로젝트'로 추진했다. 청년 환경운동가의 활동으로부터 동기를 얻은 '대니 서 프로젝트'는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와, 초등학생의 새로운 현장체험 학습인 '꼬마시민을 위한 달리는 민주교실'은 서울 수송초등학교와 협약을 맺어 추진됐다. 프로젝트 결과는 홍보용 책자로 정리돼 배포됐다. 오랜 기간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교사연수는 '현대사 교사연수'와 직무연수인 '민주시민교육 기초연수' 두 가지가 안정화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각 시기별로 시도됐다.

〈표 V-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분류	프로그램
정규화 된 대표 프로그램	현대사 교사연수 민주시민교육 기초연수 '숨통 트이는 교실, 희망이 싹트는 학교'
시기별로 시도된 프로그램	민주주의의 기초-정의(Justice) 편(2007) 민주, 노동, 환경으로 보는 우리 사회(2008) 명사와 함께하는 5·18 수업열전(2008) '프로젝트 시티즌' 원격 연수(2010) 교과만나기: 교과과정과 민주시민교육(2010) 기초알기(초등): 아이들과 정의롭게 수업하고 생활하기(2010) 기초알기(중등): 학생들을 위한 민주주의 기초 책임과 정의(2010) 관계맺기: 교실 속 살아 있는 민주주의(2010) 민주시민교육 1일 교사 양성(2010)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방법 시범연수(2012)

한편 2008년부터는 시민사회의 공간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펼치는 주체들의 활동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활성화 됐다. 2007년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활동가들의 경험공유 및 향후 공동의 활동방향 모색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한마당'을 NGO교육포럼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2008년에는 시민사회단체 교육담당 활동가들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교육담당자 교육'과 '시민사회단체 교육담당자 비전 워크숍'이 진행됐다. 나아가 2008년에는 다양한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는 활동가들의 비전함양과 기획·진행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 학이시습지불역낙호'가 개발돼 2011년 까지 이어지면서, 시민교육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했다. 2009년에는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 수료자들의 요청에 따라 교육기획을 중심으로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인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 심화과정'이 개발·실시되기도 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의 지역적 확장을 위해 같은 해 '대전 교육 활동가 아카데미'와 '부산NGO 시민교육 활동가 과정'도 진행됐다. 이런 흐름은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으로 이어진다. 2011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시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을 위해 오랜 시간 각 영역에서 시민교육 활동에 몸담아온 활동가들이 모여 상호학습과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및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개발을 위한 공동 워크숍 형태로 진행됐다. 이렇게 개발된 내용을 토대로 2011년 하반기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시범 프로그램'을 거쳐, 2012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강사과정)'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강사 양성교육', 2013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과정'과 '시민교육 과제 찾기 워크숍'이 진행됐다. 아울러 부천과 서울 도봉지역에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 '시민교육 비전 워크숍'을 공동개최했다.

다. 시민사회 역량강화

아울러 지역 시민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풀뿌리 활동가들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됐다. 첫해인 2008년에는 한국YMCA전국연맹, 열린사회시민연합 등과 공동으로 '주민아카데미'시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주민자치 리더십 과정', '주민자치 실무과정', '주민

자치 공무원 워크숍' 등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과 '풀뿌리 주부 활동가 워크숍', '풀뿌리 대학생 워크숍' 등 풀뿌리 주민 활동역량 강화 교육', '전국 마을만들기 운동 활동가 교육'과 대구 지역 활동가 교육인 '세상과 만나는 토요일' 등이 포함됐다. 2009년에는 와 '대전지역 초급 활동가 아카데미'가 진행됐다. 한편 풀뿌리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풀뿌리 여성조직 활동가 과정'(2008), '풀뿌리 여성조직가 2차 교육: 풀뿌리 여성, 예산을 말하다'(2009), '풀뿌리여성활동가를 위한 평화와 생명 교육프로그램'(2011), '자치협력을 위한 풀뿌리 활동가 워크숍: 협동조합 운동의 재구성'(2011)이 진행됐다. 2009년부터는 시범 프로그램의 성과를 토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체 개발을 통한 '주민아카데미' 사업이 정착돼 2012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주민아카데미는 4박 5일 과정으로 풀뿌리 활동가들의 비전함양과 집중적인 역량강화, 그리고 상호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게 된다. 교육내용에는 풀뿌리 운동의 의의, 새로운 가치와 운동적 삶, 마을의 여러 측면들, 공동체 훈련, 마을교육방법론, 지역조사방법론 등이 포함된다. 2009년에는 2차에 걸쳐, 2010년에는 3차에 걸쳐 주민아카데미가 개최됐다. 2011년에는 4박 5일 '주민아카데미' 프로그램을 1차례 진행하고, 활동가들의 세분화된 학습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활동가 특별주제 교육'과 활동가들이 풀뿌리 운동의 발전방향에 관해 토론하는 '풀뿌리 활동가 워크숍'이 개최됐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시민사회 활동가 교육 지원 사업이 '풀뿌리 운동 활동가 대회'와 '생명평화운동 활동가 워크숍', '풀뿌리 운동 활동가 교육 평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지역과 영역의 활동가 교육을 공동주관 혹은 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라. 성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된 역할은 시민사회 주체들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확충하고, 프로그램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기도 했다. 2008년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와 관련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강좌 프로그램인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가 출범했다.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대구·경북', '부산', '대전' 등 3개 지역으로 확산해 진행됐다. 각 지역의 프로그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원하고 해당 지역 교육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상호 기획과정의 의사소통과 수료자들의 교류 및 평가는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11년에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충북, 목포 등 6개 지역에서, 2012년에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가 실시됐다.

3) 네트워크 활성화

가. 민주시민교육 국제교류·협력

2007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핵심사업으로 설정되면서, 해외의 선진적인 민주시민교육의 경험을 습득하고, 한국적 상황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교류·협력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됐다. 2007년에는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전문위원을 초청해 '한독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교육 기관인 시민교육센터를 비롯한 '미주지역 민주시민교육 기관 대표방문 사업'이 추진됐다. 2008년에는 미국 시민교육센터가 주도하는 '시민교육 세계의회'(The World Congress on Civic Education) 제12차 대회(모로코)에 참석해 견문을 넓히고, 국제적인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사회발전을 위한 해외 시민교육기관 초청 국제행사: 시민교육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독일 정치교육 기관 방문 및 한독 워크숍', '홀로코스트 기념관 관계자 초청 간담회' 등 풍성한 사업이 전개됐다. 부가적으로는 '해외 인사초청 교사 간담회'가 개최되고, 미국 시민교육센터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2010년에는 마산에서 '시민교육 세계의회 아시아태평양 대회'를 유치해 개최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 국제교류·협력에 있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2010년 '일본 풀뿌리 운동 현장탐방'과 2013년 '태국 교육부 직원 내방 워크숍 및 탐방'을 진행한 바 있다.

나.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각 지역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에 나서면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충북 등 지역별 주체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됐고, 대전과 청주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시범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아울러 기존에 업무협의를 위해 부산 민주공원, 광주 5·18기념재단, 대전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과의 구축된 '교육사업 연대회의'도 지속적으로 운영됐다. 2009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행에 참여할 대학생 자원활동가단을 양성하기도 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외부 주체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활동도 계속 추진됐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2010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3년 경기도 교육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매년 개최하는 참교육실천대회에 참가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교육사업을 홍보하고, 협력주체들을 발굴하는 기회를 가졌고, 각 교과목별 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위원회 등 교사들과의 간담회도 열렸다. 2011~2013년에는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시민교육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는 공모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하는 다양한 기관·단체들을 모집하고, 심사와 발표대회를 거쳐 시상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유의미한 민주시민교육 활동 사례들을 발굴하고, 교육주체들간의 교류와 네트워크의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2009년에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이 모여 '민주시민교육 단체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워크숍을 계기로

보수·진보, 민·관·학을 망라한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가 출범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향과 제도화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졌는데, 2007년 '대학신문기자 한마당', '제6회 국제 청소년 원탁포럼', '한일청소년평화교류단 행사'를 후원했고, 2008년에는 '비폭력 직접행동 전문훈련가 양성 국제워크숍', 2009년 '미래교육치유센터 창립 및 기념세미나', '풀뿌리 여성교육 예산을 말하다', 청소년 인권체험 프로그램인 '세상과 만나는 토요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초급활동가 교육' 등에 대한 후원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2~2013년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시민교육 공모 지원사업'으로 체계화 해 진행하기도 했다.

4 ▮ 조정기(2014~2016)와 전환기(2017~)

조정기의 시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내부적인 어려움 속에 교육사업이 중단되거나 위축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를 거쳐 향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전국적인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흐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전환들 준비하는 전환기로 나아가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1) 조정기

2014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제5대 이사회 구성과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갈등에 휩싸이고, '이사장 불법임명거부 국민대책위'가 구성되고 장기간 농성을 벌이면서 2014년에는 사실상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후 사태가 수습되고, 청사의 이전도 이루어지면서 2015년부터 다시 사업이 재개된다. 하지만 초창기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2007년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중심사업으로 설정된 교육사업이 위축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2015년 2월 당시 이사회와 임원진의 판단에 따라 교육사업국이 폐지되고, 기존 교육사업국의 연구적 성격을 띠는 업무는 민주주의연구소로,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는 업무는 기념사업본부로 분리·이관된다.

교육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2015년부터는 민주시민교육 사업도 다시 시작된다. 먼저 연구사업으로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 등 5개국의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분석한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 과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2015 서울 민주주의 포럼'에 '시민교육1: 왜 스웨덴 시민교육인가', '시민교육2: 시민교육의 지역전환과 새로운 플랫폼' 등 2개 분과를 운영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시민교육 워킹그룹을 운영해 논의한 결과를 정리한 '공동체

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연구'와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됐다. 2014~2015년에는 (사)시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와 공동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 장인 '시민교육포럼'을 운영하기도 했다.

한편 전통적인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체험, 대학생 민주주의 현장탐방,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 2016년에는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의 경우 수도권과 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한편, 자유학기제용 프로그램과 서울시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민주올레' 등으로 프로그램이 확장됐다.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의 경우 각 지역에서 참가수요가 급증하면서, 참가방법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참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참여하는 청소년, 세상을 바꾸다'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역시 전통을 지닌 교사연수가 지속적으로 실시됐는데, 주로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현대사 일반연수: 선생님과 함께 하는 현대사 이야기'와 '기초 직무연수: 숨통 트이는 교실, 희망이 싹트는 학교'가 진행됐다. 2016년 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위탁사업으로 현대사 교사연수(2회)를 추가로 실시했다. 아울러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온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 워크숍 프로그램인 '모떠꿈(모이고, 떠들고, 꿈꾸다) 워크숍 시즌2'가 실시됐다.

2) 전환기

2017년은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였다. 2016~2017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시위'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10여년에 걸친 보수적 성향의 정권기를 마무리 하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아울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임원진도 교체됐다. 한편 이에 앞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계기로 많은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 보다 활성화 됐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내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포함하게 된다.

이후 민주시민교육 관련 중앙정부 부처들의 협의를 통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추후 전국적인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과정에 기여할 '마중물'의 역할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부여되는 과정이 이어진다. 이로 인해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은 질적인 전환을 맞게 된다. 2017년에도 기존의 청소년·대학생 민주주의 현장탐방,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교사연수(현대사 연수, 기초직무 연수) 등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들에 착수했다. 먼저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차례의 간담회와 시민교육 현안·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1차 시민교육 활동가 워크숍'과 '전국민주시민교육네

트워크 구축을 논의하는 '2차 시민교육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2018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국민주시민교육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활동의 동향이 공유되고, 전국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추진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2018년 들어서는 폐지됐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국이 민주시민교육국으로 3년 만에 부활하고, 전국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 된다. 민주시민교육국은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가운데,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1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면서, 대전, 충북, 창원, 대전, 전북, 광주, 대구에서 각 지역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아울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성의 마중물이 될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V-9〉 지역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관련 간담회 현황

일정	내용
2018. 4. 10.	충북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 민주시민교육 길찾기, 왁자지껄 공론장
2018. 5. 17.	경남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
2018. 5. 23.	대전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 대전 민주시민교육 밑그림 그리기
2018. 5. 30.	전북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
	광주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공개 설명회
2018. 5. 31	세종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2018. 6. 18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2018. 6. 27.	대구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2018. 7. 26.	충북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2차 간담회: 민주시민교육 길찾기2, 왁자지껄 공론장
2018. 8. 23.	충남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간담회
2018. 8. 31.	시민참여로 만드는 대전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2018. 9. 3.	광주, 민주시민교육을 이야기 하다

한편 7월에는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구성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준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9월에는 그간 각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과 민주시민교육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광장에서 일상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를 개최했다. 아울러 2018년 지방선거 시기에는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공약을 제안했고,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인 '감성Talk 상상 Talk'(2박 3일 과정)을 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현재도 각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환경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마을교육 등 영역별 교육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영역별 네트워크'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공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도 초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11월에는 전국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식이 예정돼 있어, 향후 전국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움직임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제VI장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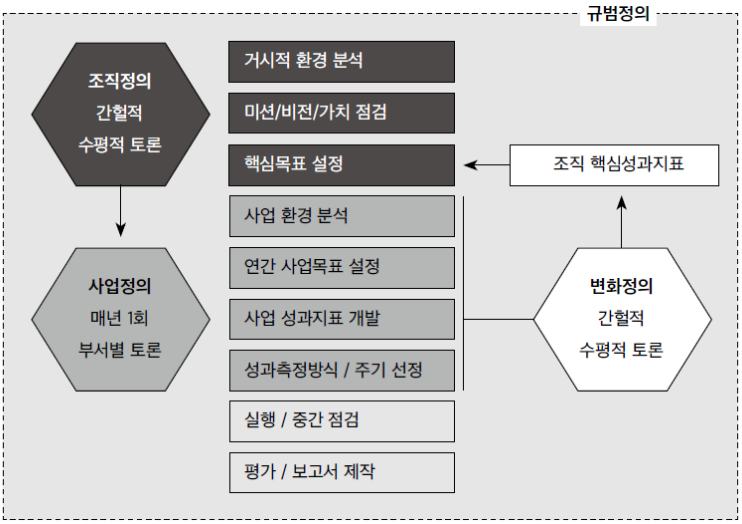
제VI장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운영 방안

1 ▌ 프레임 워크

조직의 가치체계와 사업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최근 들어 공공성을 띤 비영리 기관·단체들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강화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소셜 임팩트 프레임 워크'(Social Impact Frame Work)를 활용해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센터의 활동은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며, 특히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촉진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해 소셜 임팩트 프레임 워크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 즉 관점이며, '워크'는 실행을 뜻한다. 프레임워크란 하늘 위에 있는 관점과 땅위에 있는 실행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적 개념으로, '판단과 결정을 위한 구조나 체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쉽게 말해 '관점과 원리가 담긴 일의 순서'라고 말할 수도 있다. 프레임워크에는 일정한 단계가 부여되는데, 소셜 임팩트 프레임 워크는 크게 해당 조직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확립하는 '조직정의', 조직의 주요사업을 설정하고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정의', 조직의 혁신을 통해 주요성과를 창출하는 '변화정의', 그리고 조직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다지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규범정의'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이재현·임대근 2015).

〈그림 Ⅵ-1〉 소셜 임팩트 프레임 워크의 개념도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창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조직정의'와 '사업정의' 단계를 수행하되, 사업 성과지표 개발이나 성과측정방식/주기 선정은 이후 조직창립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이전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프레임 워크 수행에 앞서 '사전준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2 ▌ 조직정의 (1): 거시 환경 분석

프레임워크 설계의 출발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혹은 '무엇을 위해 존재 하는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조직의 정체성과 지향점 그리고 방향성을 의미하는 미션과 비전 설정이 프레임워크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그 전에 선행되어하는 작업이 있다.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른바 환경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어디로 갈지 알게 된다'는 논리적 인과관계는, 환경을 분석한 후 미션/비전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에 충분한 논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션과 비전에 공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환경분석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이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 내부요인은 '조직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환경분석에는 P·E·S·T, 즉 정치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al),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요인들이 고려된다. 여기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의제(Agenda)와 관련이 깊은 정치적·사회적 요인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이 두 요인은 각각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양상을 구성해 온 두 가지 중요한 측면, 즉 '제도'의 측면과 '시민사회' 측면을 의미한다.35

1) 정치적 요인: ‘제도’

가. 제도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제도인 공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해야 할 책무를 지닌 주체다. 그리고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그 이전 일제강점기의 황국신민교육의 경험과 뒤이어 이어진 한국전쟁과 독재정치와 같은 현대사의 굴곡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국가에 의한 반공과 순치(馴致)의 내면화가 제도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자리 잡아 왔다. 1960년대 들어 주한미공보원의 지원 아래 중앙교육연구소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사업과 같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반공과 순치의 흐름은 1968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으로 상징되는 반공도덕교육과 신군부의 국민윤리 교육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런 흐름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1980년대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지면서다. 먼저 1997년부터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에는 5가지 인간상 중 하나로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포함됐고,[36] 1998년 시행된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의 이념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함양이 명시됐다.[37] 아울러 1990년대 후반에는 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흐름 속에 국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논의되기 시작하고, 입법을 위한 시도들도 꾸준히 이어진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적으로 금기시하거나, 사회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분위기 속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시도와 무산을 반복하게 된다.

〈표 Ⅵ-1〉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 발의 현황

국회	년도	법안명	발의자
15대 국회	1997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박명환 의원 등
16대 국회	2000	시민교육진흥법안	김찬진 의원 등
17대 국회	2007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이은영 의원 등
19대 국회	2015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이언주 의원 등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 의원 등
20대 국회	2016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 의원 등

35 물론 제도(정부)나 시민사회에 의한 민주시민교육 외에 최근 들어 시장영역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교육들도 존재한다. 여기에는 직원 리더십 교육, 노조교육, 교육 관련 사회공헌 활동 등이 활성화 되는 추세에 있다.

36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⑤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37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무산되는 과정의 한편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이 깊은 주제들을 다루는 개별적인 법령들이 제정된다. 여기에는 통일교육지원법(1999), 환경교육진흥법(2008), 법교육지원법(2008), 경제교육지원법(2009), 인성교육진흥법(2014) 등이 포함된다. 2007년 개정이 이루어진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6가지 중 하나로 시민참여 교육이 포함되기도 했다.[38] 아울러 통일교육원(통일교육), 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성평등교육), 선거연수원(유권자교육),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주시민교육), 국민권익위원회(청렴교육) 등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들이 설치·운영되고, 기업의 영역에서도 사회공헌활동, 노조 조합원교육, 사원교육 등에서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를 비롯해 대학의 교양 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 교과목의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도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논의는 간간히 이어져 왔는데, 2004년에는 당시 여야 대표가 합의한 정치개혁 과제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포함됐고,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특임장관실에 속한 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실로 이관됨—2012년 제시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시민교육 활성화'가 포함됐다.[39]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와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도들이 답보상태를 보이는 사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앞서 2008년 제주도 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논의된바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이어 받아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수행하고자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포함시키고, 관련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Ⅵ-2〉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4)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2016)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2017)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2017) 세종특별자치시민주시민교육조례(2018)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5)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3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9 2012년 발표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10대 과제에는 다음과 같다. ① 시민교육 활성화 ② 나눔문화(기부·자원봉사) 활성화 ③ 시민사회 센서스(전수조사) ④ NGO 기금 설치 ⑤ NGO 센터 설치 ⑥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 활성화) ⑦ 국제연대 및 협력역량 강화 ⑧ 시민사회발전법·제도정비 ⑨ 정부-시민단체간 거버넌스 문화확산과 제도화 ⑩ 제3섹터 중앙부처 신설.

	경기도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경기도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7) 경기도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경기도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2017) 경기도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7) 경기도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8) 경기도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8) 경기도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18)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6)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2017)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변화

한국의 시민사회는 서구의 그것과 달리 외세 의존적 국가권력의 지도하에 '바깥에서 안으로', '위로부터 아래로'의 경로로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와 국가형성기 시민사회에 관한 국가정책에서는 식민화, 해방, 전쟁, 반공, 권력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특히 한국정쟁은 사회제도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흐름은 오랜 군사정권 시기를 통해 강화됐다. 이 시기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정부가 시민사회 전반을 강하게 통제하는 가운데,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부문은 억압하고, 국가재건 및 사회개발·복지 영역에서 필요한 시민사회 부문은 동원하며, 나아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소위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선택적 지원을 제공하는 '통제'와 '동원'이 주류를 이뤄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정의한 권력에 대해 저항하거나,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형성된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에서 자선이나 대안적 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활동들을 전개했다. 오랜 시간 지속된 통제와 동원, 저항과 순응이라는 관계양식은 지금도 정부와 시민사회가 관계 맺는 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정부와 시민사회간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익적 활동들이 활성화 됐다. 한국 시민사회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전환됐다. 민주화 이전 시기로부터 누적돼온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개혁 과제가 터져 나왔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영역과 방식으로 개혁의제를 제시했다. 문민정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개혁의제들을 수용하고, 개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이른바 '개혁 거버넌스'의 시도들도 나타났다. 이런 맥락 속에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8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보수적 성향의 정부의 시기에서는 앞선 개혁적 성향의 정부가 펼쳤던 정책들에 대한 강한 반작용들이 나타났다. 이런 과정 속에 통제와 선택적 지원으로부터

포괄적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낸 전환기의 변화들은 퇴행을 겪게 된다. 그와 동시에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전세계적으로 정부실패(goverment failure)에 대한 해독제로서서, 혹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속에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부각되는 흐름이 활성화 된다. 이러한 흐름을 이끄는 대표적인 두 가지 열쇠말은 '거버넌스'(governance)와 '사회적 경제'라 할 수 있다. 전자는 공공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정부가 시민사회 주체들과 협업하고 권한을 나누고자 하는 흐름으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사회혁신,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등의 정책사업 혹은 활동으로 나타난다. 후자는 경제적 필요를 해결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들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화폐, 공정무역, 공유경제, 비영리 스타트업(start-up)과 같은 활동과 조직들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한 주체와 활동의 형태들로 분화되고 있다. 이런 퇴행과 분화, 과거와 미래의 흐름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의 시민사회 정책은 또 다른 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시기에 제정된 시민사회 관련 법령들은 다음과 같다.

한편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간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흐름의 시작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UN의 21세기 개발의제인 '의제21'(Agenda21)의 세부조항인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을 실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실천운동과 이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지원·협력 활동이 추진됐다. 이후 2004년에는 환경부가 '지방의제21추진기구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표준준칙'을 마련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식의 단체들이 설립돼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 단체들은 2015년 UN이 주창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하기 위해 이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했다. 아울러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을 통한 공공일자리 사업, 실업극복국민운동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정책의 흐름 속에 경제난을 겪는 시민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중간지원기구인 자활후견기관(현 지역자활센터)이 설치돼 지금도 활동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 정책이 본격화 된 계기는 2012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존에 시민사회에서 주창된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등을 적극적으로 정책화시키기 시작했고, 2014년 재선 이후 NPO지원센터, 공유경제, 도시재생, 사회혁신, 협치, 시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정책들로 확장됐다. 이런 흐름은 서울시 뿐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개혁적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이 당선된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이런 정책들의 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사회혁신센터 등 중간지원기구를 설립해 관련 정책의 추진과 시민사회 주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 이 중 NGO센터는 시민사회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광주,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서울 등의 지역에 NGO센터들이 설립돼 활동 중이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NGO센터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시민사회 정책들은 2017년 개혁적 성향의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의 시민사회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추진되고 있다.

2) 사회적 요인: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는 '교육주체'로서의 정체성과 '학습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전자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담론과 실천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후자는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고 학습한 내용을 삶과 사회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교육주체로서 시민사회

먼저 교육주체로서 시민사회는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원형을 형성해 왔다. 앞서 제도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흐름은 반공과 순치에 초점이 두어졌음을 살펴봤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교육을 매개로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형성돼 왔다.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민립대학건립운동, 노동·농민야학, 애국계몽운동이나 농촌계몽운동이 일어났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에 창립된 YMCA(1903), 흥사단(1913), YWCA(1922) 같은 단체들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한국전쟁 이후 전후복구 활동을 거쳐 사회개발운동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가톨릭농민회(1965)로부터 시작된 농민교육이나 1950년대 말 남미의 해방교육—교육학자인 프레이리(Paulo Freire)가 주창한—이나 해방신학, 그리고 미국의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사회운동가인 알린스키(Saul Alinsky)로부터 연원한—등의 영향 속에 도시산업선교회의 빈민교육, 허병섭이 주창한 민중교육 등으로 이어진다. 한편 1954년부터 시작된 흥사단의 '금요개척자강좌'나 크리스찬아카데미(1965, 현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중간집단교육, YMCA의 시민논단(1968), 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서클학습', 시국강연회 등으로 이어지는 의식화 교육과 청계피복노조 노동자교실(1973)을 비롯한 노동야학이나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한 직업교육 등이 이어졌다. 즉 제도로서 민주시민교육이 반공과 순치에 포획된 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사이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교육이 시도됐고, 이는 현재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의 원형을 형성해 왔다.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민주시민교육의 원형적인 내용과 형식은 1980년대 진전된 민주화의 흐름과 함께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게 되고, 아울러 제도로서의 민주시민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와 관련한 인상적인 계기는 1980년대 전국의 YMCA에서 조직된 'YMCA중등교육자회'는 1982년 '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를 결성했다.[40] 이들은 교육 민주화와 관련한 연구, 토론, 교류 등 일상적인 활동과 더불어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 1986년 '자살학생위령제' 등 교육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특히 1986년 '교육민주화 선언'은 본격적인 교육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켰고, 이후 운동을 이끌었던 교사들은 YMCA를 떠나 1987년 6월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를 결성, '교육민주화실현과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참교육 운동, 학교민주화 투쟁, 교육악법 개정투쟁 등을 펼쳐나갔고,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으로 이어진다.

40 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는 중등 교육자들간의 상호교류와 올바른 교육자상의 정립 및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자들의 공동체운동을 표방했다. 81년부터 조직되기 시작했고, 전국협의회와 3개 권역별 지역협의회로 구성됐다.

민주화의 진전 이후 시민사회는 양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활동들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기존에 민주화를 이끌어 온 권력에 대한 저항적 흐름 외에도 다양한 활동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권력에 대한 저항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닌 자선적 활동은 시민사회의 저변에서 그 흐름을 이어왔고,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자발적·자선적·비영리적 조직을 총칭하는 비영리부문이나 제3섹터와 관련된 담론과 실천이 활성화 됐다. 그 밖에도 정부와 시장영역이 지닌 권력과 자본의 지배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시민사회 고유의 가치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자율적인 활동들도 활성화 됐다. 특히 지역사회 공동체는 시민들이 친숙하게 참여하고, 자신들의 생활양식을 만들고, 동료 시민들과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함께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다.

시민사회의 분화는 교육주체로서 시민사회가 실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분화와 궤를 같이 한다. 민주화 이전부터 이어져 온 민주시민교육적 전통은 민주화 이후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민주시민교육으로 분화된다. 먼저 의제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환경교육, 평화교육, 자원봉사교육,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이 각기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각기 다양한 교육활동을 활성화시켜 왔다. 교육 형식에 있어서도 사회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넓히는 것으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훈련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들이 생겨났다. 민주시민교육은 한국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단체들 중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은 일반화되고 다양화 됐다.

하나의 생태계가 성립되기 위해 다양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듯, 시민사회 역시 그것이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흐름들의 분화를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분화가 '분절'의 양상을 띨 때 그것은 전체 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나타난 분화의 흐름 역시 다양한 부문들이 상호 절연(絶緣)된 상태로 성장해 온 측면이 있다. 한국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의 흐름들은 시민사회에 관한 각기 고유한 관점과 신념을 형성해 왔다. 문제는 하나의 관점과 신념만으로는 한국 시민사회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절화의 경향은 자신이 속한 흐름이 시민사회의 전부라고 생각해—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나머지 흐름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흐름들을 이해하려하기도 전에 자신의 관점과 신념에 매몰된 채 그것을 판단하려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공익활동의 흐름들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각기 고유한 경험과 성과를 축적해 왔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흐름의 그것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조건에서 진행되면서 건강하게 '진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활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자원봉사 교육, 지역공동체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등 시민사회에서 주창된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상호 분절적으로 발달해 오고, 또한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관성이 사고되지 못한 체 교육활동의 생태계가 형성돼 왔다. 시민사회 교육활동의 각 부문의 고유성은 보전돼야 하지만, 동시에 각 부문들은 서로 배우고, 건강하게 경쟁하고 협력할 때 전체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사회문제의 해결과 다양한 사회적 욕구의 충족에 있어서 시민사회에 점점 더 많은 기대와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사회 주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물론 규모가 큰 모금단체나 특별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소위 국민운동단체들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다르다.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가 실시한 각국의 시민사회 건강성 비교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발휘하는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에 비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시민사회의 뿌리와 문화가 아직 튼튼하지 못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한국 시민사회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시민사회 주체들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정치적으로 금기시 하거나, 사회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분위기 속에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이 겪는 어려움의 중심에는 재정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시민사회의 실체는 해당 주체들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 사람들은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를 인식하는데, 흔히 공익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자주 잊혀 진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 활동에도 정부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재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시민사회에 더 많은 공적 역할을 부여하면서, 그것을 담당하는 주체들—주로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더 높은 책무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역시 시민사회 주체들의 재정수요를 높이는 요인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교육을 실행할 시민사회 교육주체들에게 더 많은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여되는 역할에 비해 시민사회 교육주체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재정문제와 더불어 내실 있는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시민들을 조직할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 역시 시민사회 교육주체들이 처한 어려운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학습주체로서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의 학습자로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에 관해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조건에서 시작됐다. 한국의 전통적 문화는 권위주의 정치문화와 반권위주의 정치문화라는 이중구조와 갈등을 나타내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전자가 지배적인 정치문화였으며 후자는 그에 대한 저항으로써 잠재적, 예외적인 성격을 띠었다. 즉 전통적 정치문화의 특징적 요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요소다(김영진 1997, 182).

서구의 시민사회가 '아래에서 위'로 자생적으로 형성됐다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외세의존적 국가권력의 지도하에 '바깥에서 안으로', '위로부터 아래로'의 경로로 형성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가 주류를 이뤄 왔지만, 그에 대항한 반권위주의적 흐름도 형성됐다. 현재적 의미에서의 한국 시민사회의 개념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등장했고, 그 때의 시민사회는 사회의 공공선을 대변하는 의미로 이해됐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급격히 보수화되는 경로를 걷고 있다는 논의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민주화의 진전 이후 1990년대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민사회 고유의 자율과 호혜의 원리에 기반 한 다양한 활동들—시민운동, 풀뿌리 운동,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 개발복지활동 등—이 그 어느 때 보다 활성화 됐다. 그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혁신, 자조공동체, 비영리스타트업 등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들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격리돼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사회참여 활동인 자원봉사에 국민의 20% 가량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인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 외에도 시민들의 개인적인 정치·사회적 참여—투표나 정책과정 참여, 정치적 의사표현 등—나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자본—사회적 신뢰, 네트워크, 정치·사회적 효능감 등—에 관한 각종 사회지표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도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민주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의 원형을 형성하고 보존해 온 교육주체로서의 모습과 그간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성숙도에 있어서 지체현상을 나타내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훈련할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학습주체로서의 모습은 한국의 시민사회를 이해하고 다루기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다. 극적인 성장과 활성화, 그리고 성숙의 지체라는 양면성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 시민사회를 두 가지 관점을 균형 있게 견지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한국의 시민사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원형을 형성해온 교육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과 동시에, 충분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학습주체로서 해결돼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경험이 많지 않아 민주주의와 자신의 삶의 연관성을 느끼지 못하는, 즉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삶과 괴리된 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언뜻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숫자나 200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분출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인 '촛불시위'를 떠올릴 때 언뜻 잘 이해되지 않는 분석일 수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곧 시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촛불시위와 같은 분출은 간헐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민의 삶은 민주주의와 괴리돼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성장'을 넘어 '성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증표로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을 논의에 부치게 되는데 바로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사회참여에 관한 것이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나 '촛불 이후의 공허함'과 같은 언술들—물론 이러한 논의가 실제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에 공감이 간다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두 가지 의미요소, 즉 '시민'과 '사회'간에 존재하는 어떤 괴리에 관한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다. '사회'—비영리민간단체들과 대규모 촛불집회—는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도 그러한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끄는데 '조직'과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조직과 운동은 진공상태에서 창조되거나, 위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공익활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모든 활동은 모든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각과 행위를 토대로 한다. 또한 시민들은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주체이기도 하고, 그것을 지탱해 주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많은 조직과 운동들이 중요한 순간 마다 시민사회의 힘을 이끌어 내 공익적 활동

들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공익활동의 토대인 시민들의 힘이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저수지와 같을까? 민주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경제적 생활여건의 어려움이나 사회참여의 계기들에 접근하지 못함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일상에는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회참여 경향에서 발견할 수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응원문화와 주한미군장갑차희생여중생추모촛불집회로부터, 2004년 노무현대통령탄핵반대촛불집회,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로 이어진 일련의 대규모 집회는 하나의 사건을 넘어 시민들의 사회참여와 관련한 새로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시민들은 더 이상 사회지도층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에 의해 '계몽'되고 '지도'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취지의 논의들이 쏟아 졌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이어진 박근혜대통령탄핵촉구촛불회는 이러한 흐름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줬다. 촛불집회의 흐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는 과거에는 주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권유와 도움을 통해 사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더 이상 기존 단체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려는 욕구가 커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들의 활동에 기존 단체들의 참여를 꺼려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계기들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과거와 같이 기관이나 단체들이 펼치는 공익활동의 도움을 받고 참여하며, 그것에 박수와 후원을 보내는 것을 넘어 공익활동의 직접적인 생산자로 변모하고 있다.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냉소적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참여하려는 욕구는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 유통채널의 다양화로 시민들이 전문적인 단체들 못지않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신들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기존 단체들의 공익활동의 방식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공익활동의 방식이 아니던 것이 지금은 공익활동의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사회참여 동기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억눌린 것에 대한 분노, 사회정의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 등이 사회참여의 주된 동기였다. 반면 최근에는 "그냥 좋아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직장인이 아닌 다른 진로를 찾고 싶어서"와 같이 자아실현과 관련한 동기로부터 사회에 참여하고 공익활동을 펼치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실현할 삶의 양식이 돼야 하며, 민주시민교육은 그런 삶의 양식을 학습하는 장(場)이 돼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거시 환경 분석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3〉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거시 환경 분석 요점

요인	측면		내용
정치적	제도	제도에서의 민주시민교육	1. 제도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은 반공과 순치에 초점이 두어진 체 형성돼 왔고, 이런 흐름은 지금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민주화의 진전 이후 제도에서의 민주시민교육도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와 관련한 흐름이 활성화 되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변화	1. 과거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정부의 권위적인 통제·동원과 시민사회의 저항·순응이 교차하는 양상이 주로 나타났고, 아직도 그 영향이 남아 있다. 2.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와 시민사회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하거나,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시민주도적 정책이 활성화 되고 있다.

사회적	시민사회	교육주체로서 시민사회	1. 교육주체로서의 시민사회는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적 내용과 형식의 원형을 형성하고 보존해 왔다. 2.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다양하 교육활동의 '분화'가 각 부문이 상호 절연된 체 성장하는 '분절'적 양상을 띠고 있다. 3. 시민사회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은 민주시민교육 실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의 재정적·조직적 역량은 많은 경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학습주체로서 시민사회	1. 한국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와 관련해 미성숙함과 성숙함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일상과 괴리된 상황에 기인한다. 2. 시민들의 주도적인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하면서, 이와 관련한 학습과 참여기회에 대한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3 ▌ 조직정의 (2): 가치체계

사명은 조직의 정체성이자 거시적 지향점이다. 사명에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핵심 대상/People) △조직의 궁극적적으로 지향하는 곳은 무엇인지(목적/Purpose) △어떤 방법(실행수단)으로 목적을 이룰 것인지(Practice & Product)의 3요소(3P)가 포함된다. 그리고 사명의 설정은 앞서 이루어진 환경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명의 3요소는 모두 조직의 고유한 독특성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어떤 요소를 강조하는가에 따라 유사한 사명ㅇ르 지닌 조직이라도 다른 결의 사명이 도출된다.

비전은 약 10년 후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 개념으로써의 비전은, 사명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조직의 궁극적 목적'이 구현되는 구체적인 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령 어떤 단체의 미션이 '우리는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기관입니다"라고 했을 경우 '아동이 행복한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세상인지를 기술하면 된다. 사명과 달리 구조화된 토론이 힘든 비전은 그 종류로써 구조화될 수 있는데 △외부요인에 대한 변화를 거론한 외향적 비전 △내부요인에 대한 변화를 거론한 내향적 비전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혼합형 비전이 그것이다.

핵심가치는 해당 조직의 원칙과 신념이다. 사업의 목표와 전략은 매년 바뀔 수 있지만 핵심가치는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신념이 되며 일을 대하는 자세와 원칙에 관계된 약속이 된다. 업무적으로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기도 한다.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사명, 비전, 핵심가치 등의 가치체계 설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거시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요소들

가. 융합

시민사회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은 서로 연결되고 융합될 필요가 있다. 앞서 한국의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이끈 주된 동력 중 하나는 민주화 이후 전개된 분화발전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교육활동들이었다. 시민사회는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적인 내용과 형식을 형성하고 보존해온 하나의 생태계라 할 수 있다. 분화를 통한 다양성은 생태계 형성의 기본조건이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생태계로서 한국 시민사회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분화된 각 부분들 간에 연결과 상호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분화된 교육주체와 영역 간에 비생산적인 경쟁이나 알력 등 분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환경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의 내용과 영역의 구분이 교육주체나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중요한 논의주제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있다. 시민들의 삶에서 환경문제, 인권문제, 평화문제는 구분돼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삶에서 이런 문제들은 중첩적으로 나타난다. 각 영역에서 발전시켜온 교육내용들은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좀 더 연결되고 융합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주체들의 관점에서 있어서도 시민사회가 지닌 힘의 원천이 연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간 각 영역과 주체들이 발전시켜온 다양한 내용과 경험들이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 영역과 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상승효과를 도모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그간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의 영역 간 연결과 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1990년대 후반 결성된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나 민주시민교육포럼의 활동이 있었고,[41] 2000년대 들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적인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주요 의제로 설정한 바 있다. 2010년대에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들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인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협의체인 시민교육포럼 등을 통한 노력들이 이어졌다.[42] 많은 주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 주체들 간의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연결과 융합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1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1994년 출범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의체인 시민단체협의회 산하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안을 다루는 기구였고, 민주시민교육포럼은 경실련, 공동체의식개혁시민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여성사회교육원,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학부모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 간의 연대체로 1997년 9월 결성됐다.

42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는 2010년 경실련,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선거시민모임, 부산민주공원, 열린사회시민연합, 한국자원봉사문화(볼런티어21),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국YMCA, 흥사단,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선거연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참여해 결성됐다. 한편 시민교육포럼은 2013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시민이 함께 정례적인 포럼을 진행해 왔다. 현재 두 조직 모두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나. 시민사회 주도성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사회적 노력의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 주체들의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시민사회는 흔히 비정부(non-governmental), 비영리(non-profitable) 영역 혹은, 1섹터(국가), 2섹터(시장)에 이어 제3섹터로 불린다. 이런 어법은 시민사회가 늘 국가나 시장의 영역의 잔여적·부수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일 터이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진영이건, 진보적인 진영이건 각기 결은 다르지만 시민사회에 좀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지향은 향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권력의 원천인 시민들의 일상과 사회를 연결하는 공간이며, 권력과 돈의 원리의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치를 내포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런 흐름을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 좀 더 주도성을 부여하고, 그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전력을 고려해 볼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종의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민주시민교육 이라는 서비스의 생산자로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잘 다루지 못하는, 혹은 정부 보다 시민사회가 더 잘 다루는 부문은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주도하도록 과감하게 맡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중교육(Folkbildning) 관련 예산의 편성권을 대중교육위원회—대중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단체들의 대의기구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가 행사하는 스웨덴의 사례는 많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제 시민사회는 국가·시장과 함께 공공재인 민주시민교육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 주도적인 주체이자 영역으로서 권한과 위상이 부여돼야 한다. 시민사회에 점점 더 많은 기대와 역할이 부여되는 만큼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권한과 위상이 설정돼야 하며, 그러할 때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부여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관계양식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거 정부가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전제 위에 형성된 업무체계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시민사회는 좀 더 민주적인 영역 간 관계를 요구하는 한편 주도적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 일상의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가 좀 더 풍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앞서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민주'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봤다. 이 둘 사이의 단절을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연결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이며, 이를 위해 일상이 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내용과 형식들이 개발돼야 한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진전되고 공고화된 정치적 민주화의 완수와 더불어 사회적 민주화로의 이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민주화의 목표는 한편으로는 국가를 견제하고 시민의 국가권력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저항적' 시민사회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성적' 시민사회를 발전시켜 시민사회 자체 내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강화시키는 이중적 민주화의 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를 민주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주체를 양성하고 민주적인 생활문화를 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에 뿌리

내려야 제도적 민주화만이 아닌 실질적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신형식2012, 44-45). 이를 위해 민주주의가 당위적 도덕에서 삶의 양식으로 재해석 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民)이 주인(主)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자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공동의 의사결정에 자신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공동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인 사회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언어들이 필요하다. 이런 언어들의 부재로 인해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자신의 삶과 관련해 이야기하기 어렵고, 이런 조건 속에 민주와 시민간의 괴리는 커진다. 일상의 민주주의는 일회적인 교육이나 당위적인 독려로 잘 형성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의 순간들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부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과 민주주의의 관점과 양식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돼야 한다. 또한 중요한 지점은 시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민주주의를 느끼는 것은 개별화된 삶 보다는 관계와 모임을 통해서이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개별화된 과정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개별화된 시민들이 교육이 열리면 교육장에 모여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나면 다시 개별화된 삶으로 흩어지는 식의 이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와 모임을 통해 민주주의와 관련된 상황을 마주하고 느끼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갈수록 여유를 가지고 타인과 만나고,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대화하고, 함께 무언가를 도모할 계기가 줄어들고 있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일이 시민 개개인의 도덕과 성실의 문제로 치환되기 보다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의 민주주의를 접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라. 시민사회 역량강화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민주시민교육의 실행과 관련해 시민사회에 점점 더 많은 역할이 부여되고 있으며,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에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다. 시민사회의 역량문제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교육주체로서의 역량과 학습 및 민주주의의 실천주체로서의 역량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주체로서의 역량과 관련해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는 많은 단체들에 교육전담팀이나 활동가가 없는 경우가 많고,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 놓였다. 또한 역량 있는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김미경 2009). 교육주체의 역량부족은 근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부족에 기인한다. 학습주체인 시민들이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참여하며, 교육을 실행하는 단체들에 대한 회원가입이나 기부,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보낼 때 교육주체들의 활동이 안정성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습한 시민들이 인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일상의 다양한 장(場)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때 민주시민교육의 존재가치가 증명된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관심으로 갖고,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며, 학습한 것을 일상에서 실천할 경제적·시간적·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즉 교육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열악함과 학습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열악함은 상

호 순환적으로 연결돼 있다. 역으로 교육주체의 역량강화와 학습주체의 역량강화는 상호 선순환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2) 가치체계의 설정

가. 상황인식

민주시민교육은 민주공화국을 지탱해 나갈 시민들이 민주와 공화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를 운영하고 변화시켜 나갈 능력을 형성해 나갈 가장 기본적인 장(場)이다. 하지만 충분하고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논의와 실천은 많은 성과를 거둬왔다. 반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들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간의 논의와 실천의 성과를 토대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지원체계들이 구축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실현할 100대 국정과제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제 지역을 넘어서고 연결할 전국적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상정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그간 정부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을 연결하고, 시민사회 교육주체들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해 오면서 축적한 경험과 책임의식을 토대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촉진할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할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나. 사명

민주시민교육센터가 함께 할 핵심대상은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주체들이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대상은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할 시민들이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센터는 활성화를 촉진하는 주체로 시민들과 직접 만나기보다는,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민주시민교육 주체들과 관계 맺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서로 연결되는 민주시민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센터 혼자의 힘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인 촉진활동을 수행할 수는 없다. 민주시민교육센터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에 애정을 갖고 시민사회 교육주체들을 함께 지원할 다른 공공기관, 연구주체, 그리고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궁극적으로 지향할 목적은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그간 많은 주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전에 비해 민주시민교육의 활동과 기회가 많이 확대됐다. 하지만 아직 모든 시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과 삶의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기에는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시시민교육은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축소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늘 상존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민주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입각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민주시민교육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 갈 건강한 민주시민교육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민주시민교육 생태계에는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펼치는 교육주체들과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중심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을 지원하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비롯한 지원기구들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정부의 영역이 연결된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을 풍부하게 할 다양한 연구자, 진행자, 기획자, 강사와 같은 협력주체들이 포함된다.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의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촉진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교육주체들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역량강화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교육내용과 방법론의 개발·보급 등이 포함된다. 둘째, 지역과 영역을 넘어선 전국의 교육주체들의 연결과 협력으로,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축,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내용과 영역 간 융합 등이 포함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의 조성으로, 여기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제도의 정비,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인식제고와 담론형성 등이 포함된다.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방법은 무엇인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논의를 토대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사명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촉진합니다"

다. 비전

전국적인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을 사명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센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유형의 중간지원조직이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비전은 '내향적 비전'(향후 조직이 되고자 하는 조직의 모습)을 기반으로, '외향적 비전'(향후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인데, 핵심적인 역할은 시민사회 주체들의 민주시민교육 활동 '역량강화'와 주체와 지역, 영역을 넘어선 '연결'로 갈래지어 볼 수 있다. 1차적으로 당장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해야 할 교육활동가나 기관·단체들의 활동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차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사회 주체들을 연결함으로써 생태계 조성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하나의 설립을 넘어, 시민사회 교육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올바른 사회적 합의 형성해 나감으로써, 향후 국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와 민주시민교육

진흥기구는 향후 (가)'한국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을 향한 여정의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외향적 전망을 종합한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역량강화와 연결을 통해 전국의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추동하는 든든한 플랫폼."

라. 핵심가치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향후 창립기를 거쳐 활동을 지속하면서 사명과 비전이 차차 변화될 것이지만,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견지해야 할 핵심가치를 가늠해 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견지해야 할 핵심가치들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는 민주시민교육의 근본가치이자 내용, 그리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와 공화의 가치가 근간이 될 것이다. 전자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것, 후자는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시민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공동의 뜻을 모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우리 사회가 다루는 방식 역시 민주적이어야 한다. 즉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 모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둘째, '자율'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천과 운영의 기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입각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시민사회의 뜻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율이 민주시민교육은 그냥 민간에 맡겨두고 정부는 손을 놓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과소공급의 상황에 놓이기 쉬운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연대'는 민주시민교육이 성립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토대구축과 관련된다.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본활동에는 시민들이 좋은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교육주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민주시민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주체들이 지역과 영역을 넘어 연결됨으로써, 서로 교류하고,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성'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과제의 성격을 규정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적 시민의 성장을 다루는 과제로 고도의 공공성을 띤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와 공화의 가치 위에 서있다. 따라서 특정 정파나 세력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교육이 아니며, 그렇게 이용돼서도 안 된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활동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에 기반 해 추진돼야 하지만, 교육주체들에게 공공성에 입각한 균형감각과 책임성이 요청된다.

다섯째, '현장성'은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에 관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삶과

괴리된 '강의실'에 갇혀서는 안 되며,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민들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삶에 착근한 생활 속 민주주의로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함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시민정치의 비전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견지해야 할 가치는 '민주주의', '자율', '생태계', '공공성', '현장성'으로 설정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사명과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를 포함한 가치체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Ⅵ-4〉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가치체계

사명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촉진합니다
비전	역량강화와 연결을 통해 전국의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추동하는 든든한 플랫폼
핵심가치	① 민주주의 ② 자율 ③ 연대 ④ 공공성 ⑤ 현장성

4 ▌ 사업정의

1) 사업환경 분석

사업환경분석은 앞서 살펴본 거시적 환경분석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그것에 기반 해 설정된 가치체계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설계에 앞서 조직 내외부의 미시적 환경을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업환경분석에는 조직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조직이 내부적으로 지닌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동반된다. 이런 과정은 사업의 설계가 당위적이고 나열적으로 흐르지 않고, 전략적인 관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흔히 스와트(SWOT)분석이라는 기법이 활용된다. 여기서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둘러싼 외부환경 중 긍정적 요인(기회)과 부정적 요인(위기)을 분별하고, 이어서 민주시민교육센터 내부의 긍정적 요인(강점)과 부정적 요인(약점)을 분별한다. 더불어 각 요인들을 교차시켜 기회를 이용해 간점을 활용하는 전략, 기회를 이용해 약점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 강점을 이용해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 그리고 조직이 대응하거나 회피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한다. 스와트분석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사업환경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Ⅵ-5〉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사업 환경 분석

외부 / 내부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
	•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 최근 민주시민교육제도화에 우호적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정책환경 •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시민사회 주체들의 관심 고조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과제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피로감 • 민주시민교육에 부정적인 일부 정치권 및 관료집단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부족, 내용과 형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강점(Strength)	**기회-강점전략**	**위기-강점전략**
• 15년여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사업 수행 경험 • 민과 관을 연결할 수 있는 입지와 조직의 안정성 • 다년간 시민사회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연결망	• 민주시민교육에 우호적인 정책적·사회적환경과 조직의 경험을 결합해 명실상부한 민주시민교육 플랫폼으로 입지 구축	•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연결을 통해 관련된 거부감이나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약점(Weakness)	**기회-약점전략**	**위기-약점전략**
• 조직이 특정 정치성향을 지향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 • 현재로서는 부족한 인력과 재정	• 다양한 주체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편견불식 • 우호적인 조건을 통해 조직의 역량강화 여건 마련	• 민주시민교육과 조직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정치·관료·사회적 그룹에 대한 점진적인 관계개선

2) 사업의 기본사항

가. 사업의 배경

민주화와 산업화를 압축적으로 진전시켜 온 우리 사회는 이념, 성, 세대, 역사인식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심각한 갈등 상황에 있으나 민주적인 해결 능력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입시와 경쟁중심의 교육체계 속에서 민주적 시민 역량 제고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회와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다. 특히 자치와 분권의 시대가 도래 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의 민주적 역량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조례와 정책, 중간지원조직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활성화 됐지만, 상호 분절된 체 발전해 오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적인 실행과 이를 통한 사회변화의 추구는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시민과 지역이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사회의 민주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지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음의 정책과제들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Ⅵ-6〉 민주시민교육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6.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 6-7.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 민주시민교육 실시, 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3.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희망 3-2. 비폭력·평화 등 3·1운동 가치의 '세계적 확산' 3-2-가-①: 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사회적 합의를 담은 민주시민보고서 제출 3-2-가-③: 전국적 수준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 협력 강화, 학교교육의 연계방안 검토

나. 사업의 필요성

민주주의 발전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지속적 번영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민주역량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으므로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인 민주시민교육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 우리 나라에 앞서 민주주의를 실현해 온 서구 선진국의 경우도 각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특성에 기반 해 국가와 사회가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화고 활성화하는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복잡다단한 사회문제를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민 스스로가 사회문제에 접근해 해결하는 역량, 공적인 영역에의 참여·학습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다. 사업의 목적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의 지속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민주주의 사회 구성 및 운영 원리를 함양하고 체화하고 우리 사회가 갈등에 대한 민주적 해결 능력 제고를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민주적 시민의식과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조건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일상과 민주주의 연결 통해 시민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성장을 촉진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위해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구축해 나간다.

라. 사업의 방향

다양한 대상과의 연결과 협력을 통해 전국적 차원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필요성 및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주시민교육 실행 주체인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일선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중간지원기구를 설립한다.

3) 사업의 정렬

사업(activity)이란 조직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실천이자 수단이다. 연간 사업계획 수립의 의미는 사업 자체의 목표 설정 뿐 아니라 그것이 조직의 전체적 방향에 정렬되어야 함을 뜻한다. 사업의 정렬이 중요한 이유는 조직의 성과를 설명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렬(alignment)한다는 것은, 조직의 궁극적인 방향에 사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단위의 사업은 상위 단계인 조직의 핵심목표와 연결되어야 한다. 각 단위사업의 목표는 양적 목표와 질적 목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산출물을 위한 산물목표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변화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산출목표는 사업 후에 즉시적으로 측정되는 산출결과(output)이며 변화목표는 실질적 변화결과(outcome)를 뜻한다. 사업을 하는 이유는 조직의 지향점을 성취하기 위해서인데 산출결과만으로는 그 궁극적 목적에 결핍이 생기므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추적하여 변화결과로 개발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위사업에 대한 산출목표와 변화목표가 정렬되었으면 이제 조직의 핵심목표와 연결시키는 실질적인 정렬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사업의 나열이라 하지 않고 정렬이라 표현하는 것은 조직의 지향점에 모든 사업들이 기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 사업에서 개발된 산출목표와 변화목표가 횡적으로는 어떤 핵심목표에 연결될 지를 판단하여 그 아래 정렬시킨다. 사업의 특성상 특정한 핵심목표에만 정렬되지 않는다. 중복적으로 정렬될 때도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정렬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조직의 성과로 어떻게 모아지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조직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대표사업을 설정할 수 있다. 조직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가짓수가 많거나 자원 및 정치·사회적 조건의 한계로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사업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가치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목표는 '교육운영', '네트워크', '연구개발', '조직운영'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교육운영은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으로 구성된다. 우선 전문가 양성 주민자치 활동가, 교사 등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일선 현장의 교육주체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되, 현장의 역량을 넘어서는 요청에 부응하는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청소년·청년·일반시민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된다.

둘째, 네트워크는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연결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구성된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위한 기반 조성으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민·관·학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각 지역과 영역별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을 연결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현안을 점검하고, 건강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포럼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제공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셋째, 연구개발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담론과 콘텐츠 개발·제공'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구성된다. 주

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수행,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각종 지침서, 영상물 등의 콘텐츠와 실험적인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추진된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회적 공론과 합의과정의 성과를 수렴해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표준을 정립할 수 있는 '한국 민주시민교육론'을 구성해 나간다.

넷째, 조직운영은 '유능하고 신뢰받는 조직의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들로 구성된다. 먼저 기관운영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조속한 시기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명실상부한 민주시민교육 플랫폼으로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관운영의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가치체계 및 핵심목표별로 정렬된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Ⅵ-7〉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가치체계와 사업

사명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 민주시미교육 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비전	역량강화와 연결을 통해 전국의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의 정착을 추동하는 든든한 플랫폼			
핵심가치	① 민주주의 ② 자율 ③ 연대 ④ 공공성 ⑤ 현장성			
핵심목표	교육운영	네트워크	연구개발	조직운영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연결과 생태계 조성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담론과 콘텐츠 개발·제공	유능하고 신뢰받는 조직의 설립·운영
사업	1 전문가양성과정 2 주민자치아카데미 3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 4 민주시민교육 협력 운영	1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2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3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 시스템 4 해외연수 및 교류	1 민주시민교육센터 연구 2 민주시민교육 의제연구 3 민주시민교육실태 및 현황연구 4 민주시민교육 콘텐츠·프로그램개발	1 기관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2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3 안정적 기관운영의 토대 마련
핵심사업	전문가양성과정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민주시민교육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5 ▌ 사업내용

1) 교육운영

교육운영 영역에는 전문가 양성과정, 주민자치아카데미,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 민주시미교육 협력 운영 등 4가지 사업이 배치돼 있다. 첫째, 전문가 양성과정은 그간 노동, 평화, 인권, 여성, 다문화,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분절적으로 발전해 온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의 영역을 넘어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역량을 겸비한 시민사회 교육주체를 지속

적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활동가 역량강화 과정은 2박 3일 집중과정으로,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필요한 기획, 진행(facilitation), 강의 등 3대 역량 중심의 교육과 철학, 방법론, 역사, 민주주의 등 민주시민교육의 기초 소양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의 수요증가에 대비해 일선에서 민주시민교육 강의를 담당할 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6개월 단위의 장기 교육과정으로, 강사들에게 요구되는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식·정보, 가치·태도, 기술·역량 요소와 역사, 사회구조, 정책, 생활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다. 아울러 강의능력 심화를 위한 강의참관 및 강의시연 등의 과정도 포함 된다.

둘째,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분권자치의 흐름에 조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심이 다원화되고, 사회적 자원이 분산되는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권력이 단일한 중심에 응집되어 있는 경향성이 강하다.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속민주주의 확대와 풀뿌리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민자치 아카데미의 내용은 지역사회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자치력 강화를 위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공동체 의제 발굴 및 정책 개발 방법,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갈등해결 능력함양 등이 포함된다. 대상별로는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 리더교육',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주민자치 코디네이터 교육', 그리고 주민자치 리더 및 코디네이터 과정 수료자들이 모여 원탁회의 형식의 토론을 통해 활동과제를 발굴하는 '주민자치 통합교육' 등이 마련되다.

셋째,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은 공교육 내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참여 활동 경험을 통해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주주의 내용과 가치를 학습하여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는 청소년들이 4~8명과 지도자로 구성된 모둠을 구성하고, 스스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이다. 활동을 마친 각 팀들은 초등·중등·고등부로 나눠 발표대회를 진행하고 시상도 이뤄진다.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17개 시·도교육청, 미국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교사로서 직무수행에 적용 가능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협력하는 환경 지원한다. 교사연수는 민주시민교육 교과지도를 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교사 전문연수'와 역사이론, 한국현대사 관련 강의를 통해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살아있는 현대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대사연수',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교사들의 비전 함양을 '민주시민교육 기초연수'를 실시한다. 교사연수의 진행은 기본적인 강의와 함께, 참여교사들의 모둠별 토론과 학교 현장에서 발굴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사례의 공유가 이루어진다.

넷째, 민주시민교육 협력 운영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체계의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한편, 시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과정도 동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의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운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필요에 맞춰 시민들의 자발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협력사업의 일반적인 형태는 공모를 통한 교육활동 예산지원이나 교육사업 공동추진 등이 포함된다. 사업은 전국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공모사업 지원과 소정의 심사과정을 통한 사업선정 후 프로그램 공동운영이나 교육활동 재정지원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운영 영역의 사업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Ⅵ-8〉 교육운영 영역의 사업내용

사업	내용
전문가 양성과정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및 강사 양성과정 운영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자치리더(위원, 통·반장,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자치 활동가 대상 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	교사 연수와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운영
민주시민교육 협력 운영	공모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사업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교육 운영

2) 연구개발

연구개발 영역에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연구', '민주시민교육 의제연구', '민주시민교육실태 및 현황조사', '민주시민교육 콘텐츠·프로그램개발' 등 4가지 사업이 배치돼 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센터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기구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플랫폼으로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업과 운영의 준거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의제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의제들에 관한 담론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안착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능한 정의, 원리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 각계 의견의 통합적인 수렴과정을 거쳐 민주시민교육의 의제들에 관한 담론을 형성해 가야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요소(개념, 영역, 핵심역량, 가치 등)와 실행원리를 정리한 '한국 민주시민교육론'을 발간한다.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의제들을 다루는 연간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가, 활동가, 정책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인터뷰,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하고, 이를 수렴해 공공정책 반영을 위한 실천의제와 전망(세부 과제, 실행 방향과 유의 지점)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실태 및 현황연구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정책적·사회적 동향과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주시민교육은 풀뿌리 차원의 생활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에도 소수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나 국지적 조사에 그치는 등 전반적, 체계적 조사연구가 미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지역, 주체, 전달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결되어야 하며 납득할만한 사업 평가 및 진단 체계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적용영역인 주민자치 관련 현황조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활발한 실행을 위한 조건 분석과 전망 제시하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표체계 구축은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인 실행과 평가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확산과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별 활성화 정도 측정 모델 개발 및 개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공공부문 사업 평가 및 시민사회 자체 프로그램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넷째,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은 민주시민교육 활동현장에서 활용될 다양한 내용적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교와 시민단체 등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한 학습용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다양한 학습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집단별, 상황별 맞춤형 과정(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포함된다.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전문 수준의 영상자료와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회문제에 참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참여 안내서 발간 등이 포함된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는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자체교육이나 시민사회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생활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기법의 체득을 돕는 민주적 의사결정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원리에 의해 사회통합과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기 위한 갈등해결과 집단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민주적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표 Ⅵ-9〉 연구개발 영역의 사업내용

범주	주요 내용
민주시민교육센터 연구	국내외 사례 분석 통해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위한 방향 및 내용 제시
민주시민교육 의제 연구	민주시민교육 개념, 영역, 핵심역량, 가치, 실행 원리, 실천 의제 등 연구
민주시민교육 실태 및 현황 연구	민주시민교육 실태 및 현황에 대해 조사, 연구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민주시민교육 현장(학교, 시민사회)에서 필요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활용 가능하게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보급

3) 네트워크

네트워크 영역에는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협력',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해외연수 및 교류' 등 4가지 사업이 배치돼 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협력은 각 지역과 영역별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연결과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별 네트워크인 (가)전국민주시민네트워크는 2017년부터 구축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 광역별로 많은 지역에서 기초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지역별 네트워크의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

다.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기초단위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될 것이다. 아울러 환경교육, 평화교육, 청소년교육 등 다양한 시민사회 교육활동 영역별 네트워크 구축도 준비단계에 있다. 지역과 영역을 넘어선 교류·협력을 위해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사례의 공유를 위한 시민교육 박람회와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상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공동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인 민주시민교육 포럼을 운영하는 한편, 민주시민교육 관련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민교육 정보지 발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학계 관계자가 참여해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내용, 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공론장이다. 현재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경실련, 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선거연수원 등의 공공기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은 민주시민교육의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여기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보 및 현황 공유, 동영상 등 교육 자료 보급, 분야별 강사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연결·제공될 것이다.

넷째, 해외연수 및 교류는 해외의 민주시민교육 선진지 탐방을 통해 한국 민주시민교육에 적용할 시사점을 얻고, 해외 민주시민교육 주체들과 세계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Ⅵ-10〉 연구개발 영역의 사업내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협력	영역별·지역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결성 및 확대 강화, 민주시민교육 포럼 운영 및 시민교육 박람회 개최, 시민교육 정보지 발간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한국형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운영
민주시민교육종합정보 시스템	민주시민교육 온라인 생태계 구축: 정보 및 현황 공유, 동영상 등 교육 자료 보급, 분야별 강사 정보 제공 등
해외 연수	해외의 선진 사례 탐방, 민주시민교육 국제협력체계 구축

4) 조직운영

조직운영 영역은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업들로 구성된다. 먼저 일상적으로는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과 재정, 조직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된다. 아울러 아직 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과정의 추진 및 관련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표 Ⅵ-11〉 조직운영 영역의 사업내용

기관운영	일상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 재정, 조직체계 구축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한국형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운영

앞선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센터의 4가지 영역별—교육운영, 연구개발, 네트워크, 조직운영—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정렬을 진행했다.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창립기를 형성할 이후 5년간 중장기 추진단계를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Ⅵ-12〉 민주시민교육센터 사업 5개년 추진계획

영역	사업		추진단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육운영	전문가 양성과정	전문가 양성과정	V	V	V	V	V
		강사 양성과정		V	V	V	V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자치리더과정	V		V	V	V
		주민자치코디네이터교육		V	V	V	V
		주민자치통합교육			V	V	V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V	V	V	V	V
		교사연수(교과지도 전문연수/현대사연수/기초연수)		V	V	V	V
	민주시민교육 협력 운영		V	V	V	V	V
연구개발	민주시민교육센터 연구		V				
	민주시민교육 의제 연구	한국민주시민 교육론		V			
		한국사회 시민교육 보고서			V	V	V
	민주시민교육 실태 및 현황 연구	실태조사 연구	V	V	V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표 체계 구축			V	V	V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개발		V	V	V	V
		프로그램 개발(주민자치/민주적 의사결정/사회통합 프로그램)	V	V	V	V	V
네트워크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협력		V	V	V	V	V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V	V	V	V	V
	민주시민교육종합정보 시스템					V	V
	해외 연수 및 교류			V	V	V	V
조직운영	기관운영		V	V	V	V	V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V	V	V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제VII장

결언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센터 추진을 위한 제언

제Ⅶ장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센터 추진을 위한 제언

1 ▌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 필요성

1)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센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아직은 실질적 내용이 충실하게 다져지지 않았다. 중요한 사회적 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또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원만한 조정보다는 극단적인 충돌, 공존보다는 배타적 대립이 앞서고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종종 결정된다. 민주주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의 수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등 여러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활에서 주체다운 삶을 실질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충분히 언급되었다.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른바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교육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아직 성공을 단언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다. 시민교육 혹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민주시민교육강좌는 교양교육 강좌보다 대체로 대중적 선호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시민교육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일부의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도 참여도가 높지 않고, 심지어 일부 대학의 관련 강좌 역시 선호도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설계와 제도화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여기에 바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다.

2)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역할

민주시민교육센터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정착과 활성화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상당히 다층적 의미

를 지니고 있다. 시민의 차원에서는 시민적 존엄성의 근거가 되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의식을 일깨우고, 사회의 차원에서는 사회문화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일궈낼 수 있게 한다. 국가의 차원에서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남북교류와 더불어 동북아의 평화 질서체계를 구축하는 시민의식을 정착시킬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불평등, 기아, 질병 등 지구적 난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게 하는 글로벌 차원의 의미도 지니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에 따른 문명사적 전환기에 관한 전망도 논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을 통해 짜임새 있게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이다.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은 현재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립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의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의 성장을 촉진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은 시민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자율성 활성화에 기여한다.

2 ▌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체계

1) 가치실현 체계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교육체계와 운영체계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고, 또 이를 구체화하면 '교육운영', '연구개발', '네트워크', '조직운영' 등 4가 영역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교육운영은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으로 구성된다. 우선 전문가 양성 주민자치 활동가, 교사 등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일선 현장의 교육주체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되, 현장의 역량을 넘어서는 요청에 부응하는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청소년·청년·일반시민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된다.

둘째, 연구개발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담론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기 위한 지원활동으로 구성된다. 주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수행,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각종 지침서, 영상물 등의 콘텐츠와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회적 공론과 합의과정의 성과를 수렴해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표준을 정립할 수 있는 '한국 민주시민교육론'을 구성해 나간다.

셋째, 네트워크는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연결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구성된다. 민주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민관학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각 지역과 영역별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을 연결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현안을 점검하고, 건강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포럼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제공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넷째, 조직운영은 '유능하고 신뢰받는 조직의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들로 구성된다. 먼저 기관을 운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조속한 시기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명실상부한 민주시민교육 플랫폼으로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관운영의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

2) 교육체계

가. 교육운영

교육운영 영역에는 전문가 양성과정, 주민자치아카데미,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등 4가지 사업이 배치돼 있다. 첫째, 전문가 양성과정은 그간 노동, 평화, 인권, 여성, 다문화,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분절적으로 발전해 온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의 영역을 넘어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역량을 겸비한 시민사회 교육주체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활동가 역량강화 과정은 2박 3일 집중과정으로,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필요한 기획, 진행(facilitation), 강의 등 3대 역량 중심의 교육과 철학, 방법론, 역사, 민주주의 등 민주시민교육의 기초 소양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의 수요증가에 대비해 일선에서 민주시민교육 강의를 담당할 강사 양성과정도 진행한다.

둘째,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분권자치의 흐름에 조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심이 다원화되고, 사회적 자원이 분산되는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권력이 단일한 중심에 응집되어 있는 경향성이 강하다.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속민주주의 확대와 풀뿌리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 리더교육',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주민자치 코디네이터 교육', 그리고 주민자치 리더 및 코디네이터 과정 수료자들이 모여 원탁회의 형식의 토론을 통해 활동과제를 발굴하는 '주민자치 통합교

육' 등이 마련되다.

셋째,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은 공교육 내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참여 활동 경험을 통해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주주의 내용과 가치를 학습하여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교사들을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한다.

넷째, 민주시민교육 협력 운영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갖추는 한편, 동시에 시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과정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운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필요에 맞춰 시민들의 자발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연구개발

연구개발 영역에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연구', '민주시민교육 의제연구', '민주시민교육실태 및 현황조사', '민주시민교육 콘텐츠·프로그램개발' 등 4가지 사업이 배치돼 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센터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기구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플랫폼으로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업과 운영의 준거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의제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의제들에 관한 담론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안착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능한 정의, 원리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 각계 의견의 통합적인 수렴과정을 거쳐 민주시민교육의 의제들에 관한 담론을 형성해 가야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요소(개념, 영역, 핵심역량, 가치 등)와 실행원리를 정리한 '한국 민주시민교육론'을 발간하고, 매년 민주시민교육의 의제들을 다루는 연간 보고서도 발간한다. 이러한 의제들을 공공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천 의제와 전망(세부 과제, 실행 방향과 유의 지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도 작성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실태 및 현황연구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정책적·사회적 동향과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주시민교육은 풀뿌리 차원의 생활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에도 소수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나 국지적 조사에 그치는 등 전반적, 체계적 조사연구가 미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지역, 주체, 전달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결되어야 하며 납득할만한 사업 평가 및 진단 체계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확산과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별 활성화 정도 측정 모델 개발 및 개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공공부문 사업 평가 및 시민사회 자체 프로그램 평가

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넷째,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은 민주시민교육 활동현장에서 활용될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교와 시민단체 등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한 학습용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전문 수준의 영상자료와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회문제에 참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참여 안내서 발간 등이 포함된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는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자체교육이나 시민사회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원리에 의해 사회통합과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기 위한 갈등해결과 집단간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민주적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도 포함된다.

다. 민주시민교육의 교육적 실천적 목록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교육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있다.

ⅰ) 문제해결의 상상력과 능력 키우기

〈어떤 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 현실 알기: 무엇이 문제인가?
- 탐색 하기: 문제의 경과는 어떠하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상상력 키우기: 나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ⅱ) 세계알기와 경험확장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공감: 그들은 누구인가?
- 신뢰: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소통: 그들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가?
- 연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공존: 갈등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 수 있는가?

ⅲ) '더 나은 인간' - 자기변화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 앎: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 실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삶: 어떤 가치를 세울 것인가?

ⅳ) '더 나은 세계' - 미래문명 만들기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인간에 대한 책임: 관계맺기, 나누기, 함께하기
- 사회에 대한 책임: 불편하고 불평등한 사회제도 변화시키기
- 역사에 대한 책임: 정의로운 민주사회 발전시키기
- 문명에 대한 책임: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문명 창조하기

3) 운영체계

가. 네트워크

네트워크 영역에는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협력',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해외연수 및 교류' 등 4가지 사업이 배치돼 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은 각 지역과 영역별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을 연결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네트워크인 (가)전국민주시민네트워크는 2017년부터 구축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 광역별로 많은 지역에서 기초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지역별 네트워크의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기초단위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될 것이다. 아울러 환경교육, 평화교육, 청소년교육 등 다양한 시민사회 교육활동 영역별 네트워크 구축도 준비단계에 있다. 민주시민교육 박람회, 민주시민교육 포럼, 민주시민교육 정보지 발간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학계 관계자가 참여해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내용, 제도에 관해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공론장이다. 현재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경실련, 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선거연수원 등의 공공기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은 민주시민교육의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여기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보 및 현황 공유, 동영상 등 교육 자료 보급, 분야별 강사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연결·제공될 것이다.

넷째, 해외연수 및 교류는 해외의 민주시민교육의 선진지역을 탐방하여 한국 민주시민교육에 적용할 시사점을 얻고, 해외 민주시민교육 주체들과 세계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조직 운영

조직운영 영역은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업들로 구성된다. 먼저 일상적으로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과 재정, 조직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된다. 아울러 아직 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3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역할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연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년 제정)에 근거해 2002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공공법인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운영과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와 일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동반자'를 비전으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기반강화', '민주주의 확산·심화의 기반조성', '민주주의 지식정보 허브구축', '유능하고 활기찬 조직' 등 4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및 추모행사 개최 및 지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서비스,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의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출범과 함께 설정한 4대 과제 8대 주요사업 중 하나로 '청소년 대상 민주화운동교육 활성화'가 설정되면서 민주시민교육사업은 창립 초기부터 꾸준히 전개돼 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증대되고 있는 바, 이에 적합한 교재, 교육 과정 등을 개발·보급, 교육 수행자에 대한 교육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공공재를 담당할 수 있는 공익적 위상을 형성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시민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실제적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사업 내용을 조사하고, 연령, 분야,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제공한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의 틀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조사·연구,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각급 학교를 위한 단계별 기본 교육자료 개발,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연수 프로그램인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와 민주주의 현장체험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과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비전을 창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 민주시민교육의 주체 역량강화 사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활성화 사업은 시민사회 및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2003년 이후 환경교육, 여성교육, 평화교육 시범 커리큘럼 등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환경교육 담당자 연수, 여성교육 담당자 연수, 평화교육 담당자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시민사회단체 교육담당자들이 모여 '지금 시민운동에서는 어떤 시민교육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전망을 모색하는 민주시민교육 미래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실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 실천주체들을 위한 교육과 함께 주체들간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부산민주공원,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전국의 민주화운동기념단체교육사업 연대회를 구성해 교육사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발전방향과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해 오고 있다.

3) 교류협력 사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5년부터는 민주시민교육의 교류협력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 등 5개국의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분석한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 과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2015 서울 민주주의 포럼'에 '시민교육1: 왜 스웨덴 시민교육인가', '시민교육2: 시민교육의 지역전환과 새로운 플랫폼' 등 2개 분과를 운영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시민교육 워킹그룹을 운영해 논의한 결과를 정리한 '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연구'와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됐다. 2014~2015년에는 (사)시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와 공동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 장인 '시민교육포럼'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온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 워크숍 프로그램인 '모떠꿈(모이고, 떠들고, 꿈꾸다) 워크숍 시즌2'를 실시하기도 했다.

4) 전국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2017년은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였다. 2016~2017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시위'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10여년에 걸친 보수적 성향의 정권기를 마무리 하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아울

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임원진도 교체됐다. 한편 이에 앞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계기로 많은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내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포함하게 된다.

이후 민주시민교육 관련 중앙정부 부처들의 협의를 통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추후 전국적인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과정에 기여할 '마중물'의 역할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부여되는 과정이 이어진다. 이로 인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은 질적인 전환을 맞게 된다. 2017년에도 기존의 청소년·대학생 민주주의 현장탐방,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교사연수(현대사 연수, 기초직무 연수) 등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들에 착수했다. 먼저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 차례의 간담회와 시민교육 현안·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1차 시민교육 활동가 워크숍'과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는 '2차 시민교육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2018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국민주시민교육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활동의 동향이 공유되고, 전국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추진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2018년 들어서는 폐지됐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국이 민주시민교육국으로 3년 만에 부활하고, 전국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 된다. 민주시민교육국은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가운데,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1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면서, 대전, 충북, 창원, 대전, 전북, 광주, 대구에서 각 지역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아울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성의 마중물이 될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7월에는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구성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준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9월에는 그간 각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과 민주시민교육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광장에서 일상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를 개최했다. 아울러 2018년 지방선거 시기에는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공약을 제안했고,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인 '감성Talk 상상 Talk'(2박 3일 과정)을 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현재도 각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환경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마을교육 등 영역별 교육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영역별 네트워크'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공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도 초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11월에는 전국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식이 예정돼 있어, 향후 전국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움직임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4 ▌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대효과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삶은 물론 국가와 사회, 세계사와 문명사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전망을 개방하는 자원이 될 수 있기에, 이에 걸맞는 지원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그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식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체계화와 실행의 전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것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향후 설립될 민주시민교육센터는 교육을 주도하고 제공하기보다는 다양한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요청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셋째, 시민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사회, 국가, 지구촌 그리고 문명사적 전망의 능력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서는 보편적 의식을 갖추게 할 것이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대 강화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전국적 네트워크가 함께 구축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 권찬호. 2009. “정부차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추진에 관한 사례연구: 문민정부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시민정치의식의 세계화’ 과제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2(2). 123-148.
- 김일동. 2003. 「시민정치교육의 제도화 방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다니엘 예르긴·조셉 스태니슬로 저. 1999. 『시장 對 국가』. 주명건 역. 세종연구원.
- 독일 뮌헨 시민대학. 2014. 「2014 프로그램 안내. 서울시민청 용역 번역물」(『뮌헨 시민대학의 프로그램 안내('14년)』.
- 류태호. 2018. 『성적 없는 성적표』.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마이클 샌델. 2012. 『정의의 한계』. 이양수 역. 멜론.
- _____. 2012. 『민주주의의 불만: 무엇이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는가』. 안규남 역. 동녘.
- _____. 2010.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김영사.
- _____. 2010. 『왜 도덕인가』. 안진환·이수경 역. 한국경제신문사.
- 마이클 왈쩌. 1999.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의의 영역들』. 정원섭 외 역. 철학과현실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년. 성찰과 과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국기획. 2010. 『시민교육 현장지침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7. 『민주주의 강의 1: 역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_____. 2007. 『민주주의 강의 2: 사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박상필. 2008.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NGO와 정부간 협력모델」.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한울』. 309-334.
- 박재창, B.J.젤리거 저. 2007. 『민주시민교육의 전략과 과제』, 오름
- 서울시 평생교육과. 2015.「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 유정완 우기동 외).
- 서울특별시. 2017. 『협치서울 기본교재』.
- 서준원. 2000.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추진과정과 향후과제,” 민주시민교육논총. 5(0). 141-189.
- 송주영. 2015. “영국의 시민교육: 민관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과정 연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161-200.
- 송창석. 2000.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 가칭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입법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2000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문.
- 스테판 뮬홀·애덤 스위프트. 201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김해성·조영달 역. 한울아카데미.

참고문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교육위원회·한국YMCA전국연맹. 2005.「시민교육 제도화를 통한 21세기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방안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연구용역.
- 신두철. 2005.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와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과제」심포지엄 발표문.
- _____. 2007.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허영식·신두철.『민주시민교육 핸드북』. 오름. 42-50.
- _____. 2008.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체계화와 제도화.” 신두철·허영식. 민주시민교육의 정석. 43-85.
- _____. 2010. “한국 국가기관의 민주시민교육 실태와 제도화.” 2010년 한국민주시민교육공동세미나 발표문.
- _____. 2015.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협업적 거버넌스에 대한 소고.”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세미나 발표문.
- 신진욱 지음. 2008,『시민』, 책세상
- 신형식. 2008.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독일 연수단.『독일 정치교육의 현장을 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75-193.
-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1997.『덕의 상실』. 이진우 역. 문예출판사.
- 우대식. 2018. “현대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대한 공동체주의 비판의 한계와 그 극복가능성에 관한 연구: 찰스 테일러의 ‘자아’ 개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광훈. 2015. “미국의 시민교육: 시민사회 영역의 시민교육을 중심으로.”「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과정 연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127-159.
- 이병태·우대식. 2018,「찰스 테일러의 개인주의 정당화에 관하여: 개인주의의 재정의, 그리고 ‘대화’ 개념을 중심으로」.『시대와 철학』29-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이재현·임대근. 2015.『NPO의 소셜 임팩트 프레임워크 가이드북』. 서울시NPO지원센터.
- 임혁백(대학교수) 저. 2007.『시장 국가 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나남.
- 정연운. 2012.「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원. 2011. “영국의 시민교육거버넌스 분석과 시사점.”『한국시민윤리학회보』26(1). 1-23.
- 정창화. 2005.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착근방안: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체제구축 및 조직설계를 중심으로.”『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10(0). 59-83.
- 정희태. 2011. “사회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중심으로.”『윤리연구』82(0). 25-51.
- 조영달. 2001.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시민교육연구』32(0). 293-324.
- 조철민. 2015. “독일의 시민교육: 내용과 운영원리로서의 정치.”「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과정 연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9-64.

참고문헌

- 지그프리트 쉴레·헤르베르트 슈나이더 엮음. 2009.「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전미혜 옮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찰스 테일러. 2015.『자아의 원천들』. 권기돈·하주영 역. 새물결.
- _____. 2014.『헤겔』. 정대성 역. 그린비.
- _____. 2001.『불안한 현대 사회』. 송영배 역. 이학사.
- _____. 2010.『근대 사회적 상상』. 이상길 역. 이음.
- 최연혁. 2010. "투표참여의 동기변수와 시민교육." 2010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pp. 195-230.
-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민주화기념사업회.
- _____. 2016.「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구축과정 연구」. 민주화기념사업회.
- 한숭희. 2003.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전망." 2003 민주시민교육포럼 발표문.
- 허영식. 2004.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일고." 선거연수원 심포지엄「한국정치교육의 현황과 미래」발표문.
- 허영식 지음. 2007.『민주주의와 시민교육』. 원미사.
- 홍득표. 1997.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체제구축 방안: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중심으로."『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2(0). 153-180.
- 홍윤기 외. 2008.「민주청서 21: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시민적 활기와 민주적 애국심을 토한 국가·민족·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5·18기념재단.
- 황기식. 2015.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독일 통일교육과 한국에의 시사점."『유럽연구』33(4). 227-250.
- 황수현. 2008.「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ne Colby et al. 2003. *Educating Citizens*. Jossey-Bass
- Barbara Jacoby and Associates. 2009. *Civic Engagement in Higher Education*, Jossey-Bass
- Charles Taylor. 1985. *Philosophical Papers Volume 2: Philosophy and the Human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rek Matravers and Jon Pike(ed.), 2003, *Debates in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ed. by , Routledge, (Charles Taylor, 'Cross-Purpose : Liberal-Communitarian Debate')
- Kooiman, Jan. 2003. *Governing as Governance.* SAGE Publications.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운영 연구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www.kdemo.or.kr
연락처 031) 361-9500, 031) 361-9554
(16029)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발행인 지 선
발행일 2018년 12월 20일
기 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
제 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979-11-87593-53-9 (03300)

책임연구원 우기동(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공동연구원 이병태(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조철민(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